

# 2011-2015

##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

연구책임자	서영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유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문은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손문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민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인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I. 서론 ● 01

1. 연구목적 및 배경 .....	1
2. 연구의 내용 .....	3

## II. 서울시 출산율 현황과 저출산의 원인 ● 04

1. 서울시 출산율 현황 .....	4
2. 서울시 저출산 원인 .....	7
1) 결혼 관련 저출산 원인 .....	7
2) 임신·출산 관련 저출산 원인 .....	13
3) 자녀양육 관련 저출산 원인 .....	17

## III. 저출산 정책평가 및 선진국 저출산 정책 시사점 ● 25

1. 저출산 정책 평가 .....	25
1) 제1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평가 .....	25
2) 중앙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 .....	25
2. 선진국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점 .....	27
1) 총평 .....	27
2) 국가별 시사점 .....	28

#### IV.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종합계획 정책 방향 ● 30

1. 비전 .....	31
2. 정책방향 .....	31
3. 정책영역 .....	32

#### V. 제2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 전략과제 ● 35

▶ 정책영역 : PART I 부담경감 .....	37
1. 양육비 .....	43
1-1. 세부내용 .....	44
• 빠른출산 우대제 .....	46
•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할인 .....	48
•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확대 .....	50
•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 .....	52
•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누진요금 감면 .....	53
•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 (캥거루 통장) .....	55
• 조부모 육아수당 지급 .....	57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적용범위 확대 .....	59
• 보행자동행 유아 대중교통 요금 면제 확대 .....	61
• 세자녀 가족 아동수당 지급 .....	63
• 다자녀가정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	65
• 아동인지능력 향상 바우처 .....	68
2. 주거비 .....	70
2-1. 세부내용 .....	71
•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주택구입 자금 지원 .....	72

•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를 위한 전세 자금지원 .....	75
• 자녀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할인 .....	78
• 월세임대료 주택바우처 지원 .....	81
3. 의료비 .....	84
3-1. 세부사항 .....	85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	86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튼튼 쓱쓱 카드」 바우처 .....	88
▶ 정책영역 : PART II 지원확대 .....	91
1. 지원확대 세부내용 .....	95
• Reproductive health care check-up .....	102
• 임신·출산지원 Total care system 구축 .....	105
• 영유아건강·발달지원센터 설치 .....	108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114
• 보육품질관리 센터 .....	118
• 영유아플라자 확충 .....	122
• 병아 영유아 일시보육 지원사업 .....	125
• 역세권 영유아 돌보미센터 .....	129
• 가정방문 서비스 .....	131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136
• 지역사회 방과 후 서비스 강화 .....	138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143
• 가정사고 예방사업 (Safe House Start) .....	146
•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	148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150
• 빈곤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153
• 자립지원 강화 .....	156

▶ 정책영역 : PART III 일·가정 양립-균형 .....	161
1. 일·가족양립 .....	163
1-1. 일·가족양립 세부내용 .....	165
• 직장에서 ‘당당한 D라인’ .....	169
•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플러스 휴직수당 지원 .....	171
• 직무공유(Job Sharing) 제도를 통한 일가정양립 지원 .....	173
• 육아기 근로형태 선택의 다양화(공무원대상) .....	177
•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기업연합 보육 지원 .....	181
•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184
• 서울형 가족친화선도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	187
• 워킹맘 상담실 ‘I love Working Mom’ .....	191
▶ 정책영역 : PART IV 생각·가치 변화 .....	195
1. 생각·가치 변화 .....	197
1-1. 생각·가치 변화 세부내용 .....	198
• Sweet Home Start Project - 아동청소년 행복가정 준비 프로젝트- ..	200
• 부모됨이 즐거운 서울 만들기 .....	204
• 저출산 대응 가족 친화 정책 교육 .....	207
• 저출산 관련 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 .....	211
• 가족친화 지역사회만들기 .....	214
• 기업 관리자의 조직관리 교육 강화 .....	218
• 출산이 자랑스러운 서울 만들기 .....	222
참고문헌 .....	227

## ● 표 목차

〈표 1〉 기혼응답자의 연령별 현재 자녀수 .....	6
〈표 2〉 서울시와 전국 연령별 실업률 추이 .....	7
〈표 3〉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8
〈표 4〉 내집 마련 소요기간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	10
〈표 5〉 서울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2008년) .....	13
〈표 6〉 성·연령계층·종사상의 지위별 임금근로자 수 .....	14
〈표 7〉 2005-2009년 건강보험 불입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	15
〈표 8〉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17
〈표 9〉 기혼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23
〈표 10〉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	50
〈표 11〉 서울시 가구의 영유아 보육실태 .....	55
〈표 12〉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	57
〈표 13〉 서울시 가구 소득수준별 자녀 수 .....	59
〈표 14〉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공동비용 중 개인 자녀 몫 .....	61
〈표 15〉 평균 영유아 보육비 .....	63
〈표 16〉 내집 마련 소요기간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	72
〈표 17〉 내집 마련 평균 연령 및 내집 마련까지의 이사 횟수 .....	72
〈표 18〉 LH 공사의 신혼부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실적 .....	75
〈표 19〉 기존주택 전세임대 방식 도입시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비율 완화도(2009년말 기준) .....	77
〈표 2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계층에 따른 임대료 부담 비중(%) 추이 .....	78
〈표 21〉 서울시 중저소득 무주택 임차가구의 생애주기별 현주택 차가 유형 .....	81
〈표 22〉 서울시 중저소득 무주택 임차가구의 생애주기별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RIR) .....	82
〈표 23〉 서울특별시의 임신 및 출산지원정책 .....	108

〈표 24〉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2009) .....	114
〈표 25〉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대기 아동 수(명)와 추가 공급(개소) 요구 .....	115
〈표 26〉 서울시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현원과 서울형어린이집 개소 수/현원 .....	118
〈표 27〉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현황(2010.1 현재) .....	123
〈표 28〉 연도별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 및 학대의심 사례건수 .....	143
〈표 29〉 아동청소년 성폭력 현황 .....	148
〈표 30〉 위기아동수 및 전체아동대비 비율 .....	150
〈표 31〉 위기청소년 상담시설 현황 .....	151

## ● 그림 목차

〈그림 1〉 혼인여부에 따른 희망자녀수 .....	5
〈그림 2〉 기혼여성의 희망자녀수 .....	6
〈그림 3〉 석박사과정 여학생수(서울시) .....	8
〈그림 4〉 과거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성별 ·	9
〈그림 5〉 서울시 전세가격 증감 추이 .....	10
〈그림 6〉 서울시 및 전국 전세가격 상승 추이 .....	10
〈그림 7〉 결혼에 대한 견해 .....	11
〈그림 8〉 서울평균초혼연령 .....	12
〈그림 9〉 여성의 결혼연령별 평균 자녀수 추이 .....	12
〈그림 10〉 OECD주요국의 연령별 여성고용률 추이 .....	14
〈그림 11〉 연령별 고학력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 .....	15
〈그림 12〉 불임치료여부 .....	16
〈그림 13〉 치료중단 및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 .....	16
〈그림 14〉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	17
〈그림 15〉 사교육 참여율(서울시) .....	18
〈그림 16〉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	18



〈그림 17〉 서울시 보육현황 .....	19
〈그림 18〉 자녀보육시설 유형 .....	20
〈그림 19〉 희망보육형태 .....	20
〈그림 20〉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21
〈그림 21〉 맞벌이가구와 남편 홀벌이가구의 하루평균 생활시간 .....	22
〈그림 22〉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	23
〈그림 23〉 남성의 출산휴가 신청사례 .....	24
〈그림 24〉 남성의 육아휴직신청사례 .....	24
〈그림 25〉 일-가정 양립 시 어려운 점 .....	24
〈그림 26〉 서울시민이 자녀를 1명만 갖기를 원하는 이유 .....	50
〈그림 27〉 OECD 국가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146
〈그림 28〉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대상별 핵심 사업목표 .....	154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배경

- 서울시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임
  - 서울의 출산률은 0.96명('09년 기준)으로 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임
  - 특히, 2003년 이후 잠시 상승하던 출산률은 2007년 이후 다시 하락 추세가 지속됨



-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은 미래성장동력 기반 붕괴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00년 71.7% → '50년 53.0%)로 성장동력기반 붕괴
    - 잠재성장률 하락('00년대 4.56% → '40년대 0.74%)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 가중
    - 노인 1명에 대한 부양부담 증가 : '05년 8.2명 → '20년 4.6명 → '50년 1.4명
    - 연금·건강보험 수급 및 노인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 따라서, 이제까지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전 및 방향은 도시(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중심이었음
  -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미래 사회에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짐.
  -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비전 및 방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한 도시 또는 국가차원의 경쟁력 확보에 맞추어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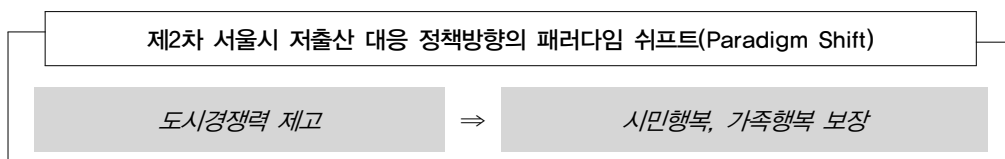
정책 비전	서울시 제2차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중앙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구균형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저출산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 도약

- 그러나,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됨
  - 저출산 현상은 그 자체가 문제이기 이전에 출산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야기한 결과임
  - 즉, 시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낳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함
  - 이는 희망하는 출생아 수(desired number of children)와 실제 출생아 수(realized number of children)의 격차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시의 경우 기혼여성의 희망자녀수가 전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공선희 외, 2008) 실제 출산률은 전국 최하위인 현실에 주목해야 함



⇒ 희망하는 출생아 수(desired number of children)와 실제 출생아 수(realized number of children)의 격차를 최소화 하는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원하는 만큼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이에 서울시는 시민행복, 가족행복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2011~2015 서울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계획’은 시민행복, 가족행복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1차적 관심을 두고자 함
  - 즉,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없게 하는 장애요인들에 대한 규명 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2011~2015 서울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은 ‘시민행복, 가족행복’ 관점에서 출발하여 저출산을 야기한 각종 원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마음 놓고 원하는 수만큼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연구의 내용

### □ 출산 현황 분석

- 출산 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서울시 출산률 현 위치 확인
- 서울시민들의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 사이의 차이 파악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

### □ 생애주기별 저출산 원인 분석

-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영유아, 아동·청소년) 전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출산 장애 요인을 분석함
- 우리 사회에 만혼을 유발하는 원인, 난임과 출산 과정상의 어려움, 자녀양육에 따르는 각종 부담과 문제들을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전문가 견해에 기초하여 도출함  
⇒ 틈새 없는 저출산 원인 분석

### □ 제1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 및 제2차 중앙정부 저출산 대응정책 한계 분석

- ‘2006~2010 제1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과 최근 발표된 ‘2011~2015 제2차 중앙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기존 정책에 대한 정책영역 및 생애주기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사각지대 파악 → 틈새 없는(seamless) 정책 발굴
- 기존 정책의 대상 및 내용 확대를 통한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sensible) 정책 발굴 ⇒ 차별화 된 서울형 저출산 대응 정책 설계

### □ 비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 제2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전 및 정책 방향성 제시
- 정책영역 및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제시
  - 정책영역 : 부담경감 / 지원확대 / 일·가정 양립(균형) / 가치 변화
  -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영유아, 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도출
- ⇒ 2011~2015 제2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제시 “미래희망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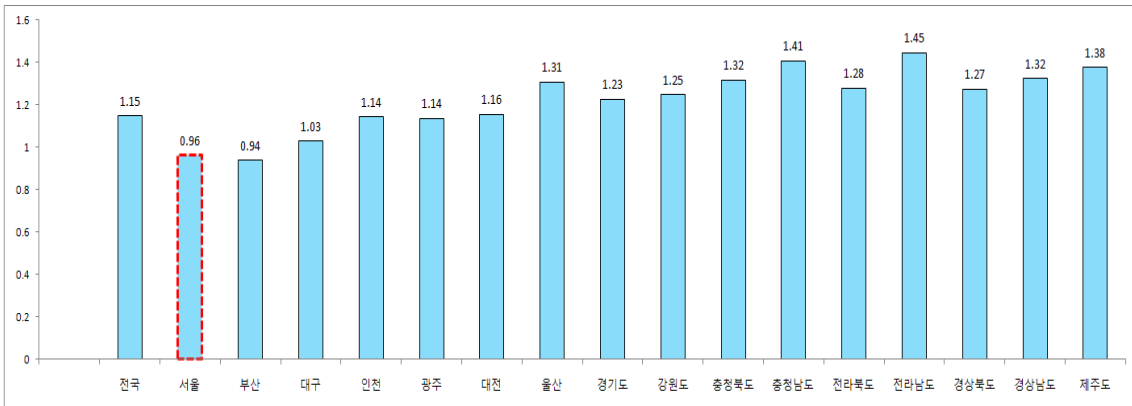
# II 서울시 출산율 현황과 저출산의 원인

## 1. 서울시 출산율 현황

■ 2009년 서울시의 출산율은 0.96명으로 부산에 이어 최하위

### □ 초저출산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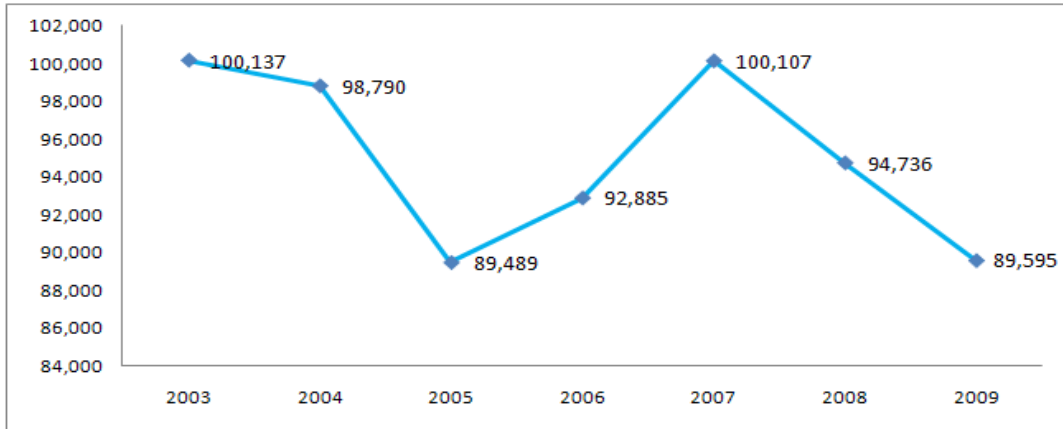
- 2009년 서울시의 출산율은 0.96명으로 부산에 이어 최하위로 초저출산 사회임
  - 전국에서 출산율이 1.0이하인 지역은 서울과 부산지역뿐임
  - 출산율이 1.3이하이면 초저출산으로 정의하는데, 서울시의 출산율은 2003년(출산률 1.0)부터 2009년(출산률 0.96) 최근까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2009), 출생 통계(합계출산율)

### □ 하락하고 있는 출생건수

- 출생건수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만명 이하수준임
  - 쌍춘년과 황금돼지해 효과로 출생아수가 2006년과 2007년에 잠시 증가하였으나, 2007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2009년에는 출생건수가 89,595명으로 이제까지 출생건수가 가장 적었던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함



자료: 통계청(2009), 출생 통계(서울시 출생건수)

## ■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 간 괴리 존재

### □ 서울시민의 희망자녀수

- 서울시 만 25~44세 남녀가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1.96명으로 거의 2명에 가까운 수치
- 기·미혼을 통틀어 희망자녀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명, 3명의 순서로 나타남
- 희망자녀수는 여전히 2명이 지배적이고 기혼의 경우 3명 이상 다자녀 희망하는 비율도 14.9%로 적지 않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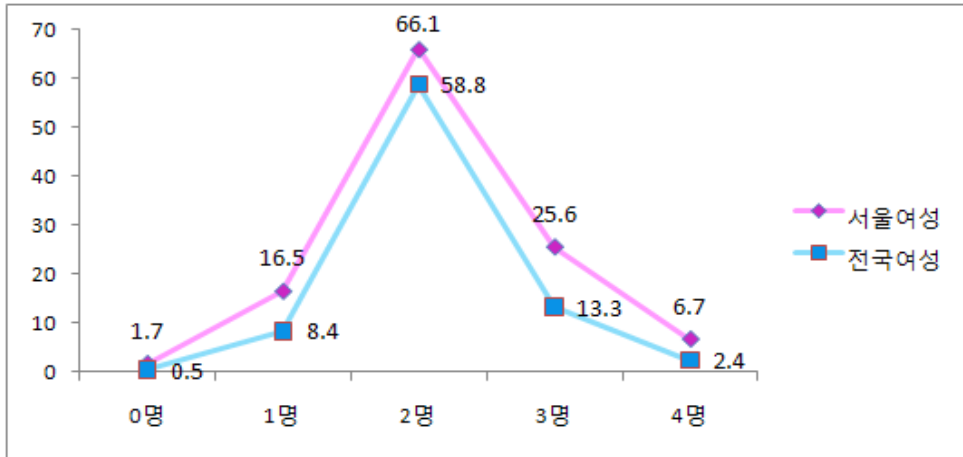
〈그림 1〉 혼인여부에 따른 희망자녀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0), 희망자녀수

- 특히, 서울시의 경우 기혼여성의 희망자녀수 비율이 전국보다 높음
- 기혼여성의 경우 2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서울시는 66.1%로 전국 58.8%보다 높으며, 3명을 희망하는 경우도 25.6%로 전국(13.3%)보다 높음

〈그림 2〉 기혼여성의 희망자녀수



자료 : 공선희(2009),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족양립과 저출산

□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 간 차이 발생

- 기혼의 희망 자녀수와 현재 자녀수 간에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혼자의 현재자녀수를 희망 자녀수만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 기혼은 평균 희망 자녀수가 2.01명으로 2명 정도를 원하고 있으나, 평균 현재 자녀수는 1.60명
- 연령이 젊을수록 평균 현재 자녀수는 적어서 25~29세는 0.70명, 30~34세는 1.29명, 35~39세는 1.67명이고 40~44세는 1.91명으로 나타남

〈표 1〉 기혼응답자의 연령별 현재 자녀수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0명	1명	2명	3명	4명	평균 자녀수(명)	유의수준	
전체	(1490)	10.2	26.0	57.2	6.2	0.3	1.60	$\chi^2=341.94$ $df=12$ $p<0.001$	
연령별	25~29세	(92)	48.1	36.4	13.2	2.4	0.0		0.70
	30~34세	(341)	19.2	37.5	39.0	3.9	0.4		1.29
	35~39세	(547)	5.5	28.8	59.4	6.3	0.0		1.67
	40~44세	(509)	2.5	13.5	74.9	8.4	0.7		1.91

자료: 공선희외(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 2. 서울시 저출산 원인

	원인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 증가</li> <li>•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li> <li>• 주택마련비용의 증가</li> <li>• 결혼선호 가치관 감소</li> </ul>
임신·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고용의 불안정과 여성취업활동의 장애</li> <li>• 난임 및 불임 증가 대비 미약한 임신출산지원정책</li> <li>• 자녀선호 가치관의 감소</li> </ul>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비용증가</li> <li>•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li> <li>• 일-가정양립의 어려움</li> </ul>

### 1) 결혼 관련 저출산 원인

#### ■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 증가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 대안 : 단시간 근로제와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예방 필요

#### □ 청년실업 증가로 인한 고용 및 소득 불안정

○ 서울시의 청년실업률(15-29세)은 매년 전국평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2009년 서울시의 30-59세 실업률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2.2배나 높음

〈표 2〉 서울시와 전국 연령별 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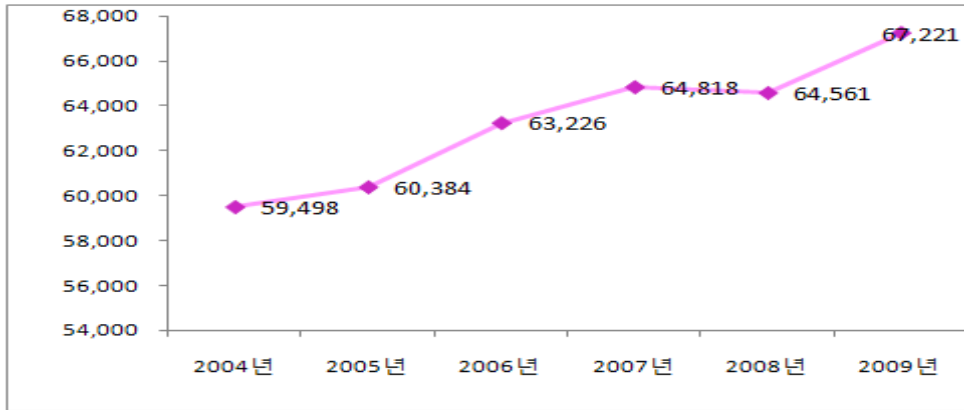
시도별	연령계층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계	3.7	3.5	3.2	3.2	3.6
	15 - 29세	8.0	7.9	7.2	7.2	8.1
	30 - 59세	2.8	2.5	2.5	2.4	2.9
	60세이상	1.3	1.4	1.4	1.2	1.6
서울특별시	계	4.8	4.5	4.0	3.9	4.5
	15 - 29세	9.0	8.8	7.5	7.7	8.2
	30 - 59세	3.6	3.3	3.2	3.0	3.7
	60세이상	2.1	2.5	1.6	1.7	2.2

자료: 통계청, KOSIS data(고용통계)

□ 여성들의 교육기간 증가

- 서울시내의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여학생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석박사과정의 여학생 수는 2004년 59,498명에서 2009년 67,221명으로 증가,서울시의 여성들의 교육기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3〉 석박사과정 여학생수(서울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9), 교육통계연보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대학교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
  - 전문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던 대학교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대학교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에 비해 2009년에는 8.2%p증가하며 최근 2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2010)

〈표 3〉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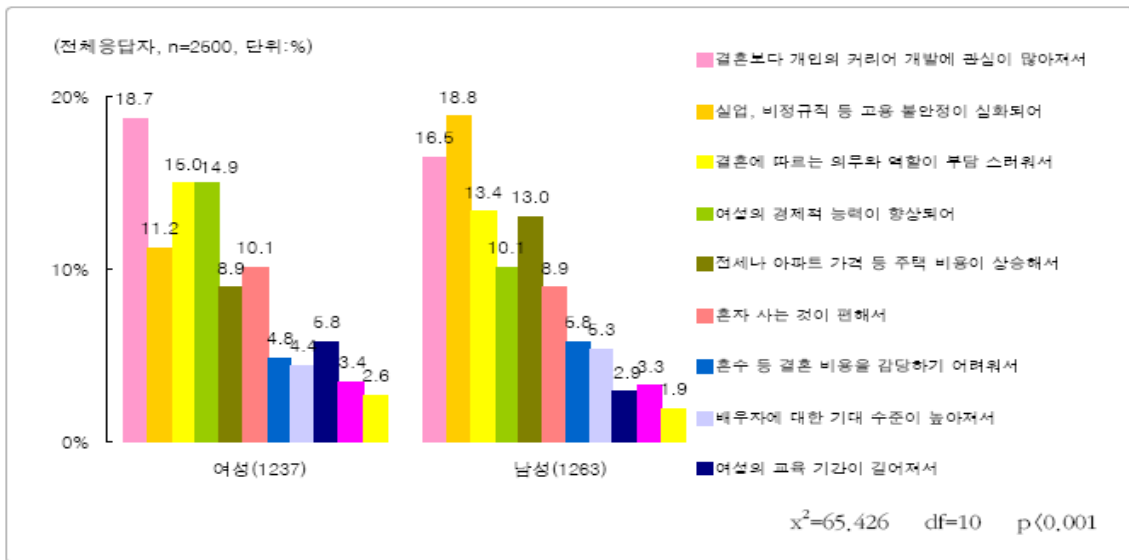
(단위 : %, %p)

	1990(A)	1995	2000	2005	2009(B)	증감(B-A)
초졸이하	50.4	47.1	44.6	38.8	36.2	-14.2
중졸	38.2	40.7	42.2	40.8	36.8	-1.4
고졸	47.5	50.2	49.5	53.2	51.6	4.1
전문대졸	66.2	63.6	64.6	67.3	65.5	-0.7
대학교졸 이상	53.1	57.9	58.1	60.2	61.3	8.2
전체	47.0	48.4	48.6	50.0	49.0	2.0

자료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재인용)

- 여성들의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 늦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해지는 추세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원인임
- 여성은 결혼보다 개인의 경력관리가 우선, 남성은 고용불안정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임
  - 만혼 및 독신의 이유는 여성은 결혼보다는 커리어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남성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이었음
  -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 만25~44세 남녀의 응답 비율은 ‘결혼보다 커리어개발’(17.6%), ‘고용불안정 심화’(15.1%),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부담’(14.2%), ‘여성의 경제력 향상’(12.5%), ‘주택가격 상승’(11.0%),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9.5%) 순이었음
  - 여성은 ‘결혼보다 개인의 커리어 개발’,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부담’ ‘여성의 경제력 향상’ 등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하고, 남성은 ‘고용불안정’ ‘결혼보다 커리어 개발이 중요’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 부담’ ‘주택 비용 상승’ 등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함

〈그림 4〉 과거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성별



자료: 공선희외(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 ■ 주택마련비용의 증가

⇒ 대안 : 주거비 지원 대상의 확대, 지원 방식의 다양화, 지원 금액의 현실화

□ 서울시는 주택마련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임

- 서울시의 주택 구입 여건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며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결혼 후 내집 마련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점차 길어져 2006년 8.3년에서 2009년 9.7년에 이르고 있음
  - 주택구입 비용을 판단할 수 있는 연소득대비 주택가격(PIR)도 2009년 전국 7.7배에 비하여 서울은 8.9배에 이르고 있어 전국에서 주택마련이 가장 어려운 지역임

〈표 4〉 내집 마련 소요기간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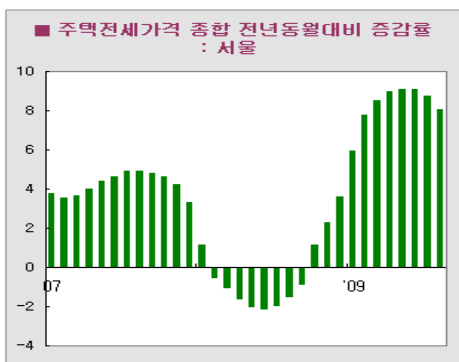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결혼 후 내집까지 마련기간 (년)	전국	8.0	7.7	7.2	6.8	7.4	7.0	6.7	6.8	7.7	8.2	9.4	9.0	9.4
	서울	-	-	-	-	-	-	-	-	-	8.3	9.0	9.2	9.7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배)	전국	4.6	4.2	4.6	5.0	4.6	5.5	6.2	5.5	5.6	6.4	6.6	7.6	7.7
	서울	6.3	6.7	6.7	7.9	7.5	6.4	8.9	7.2	8.0	8.9	9.8	10.5	8.9

자료: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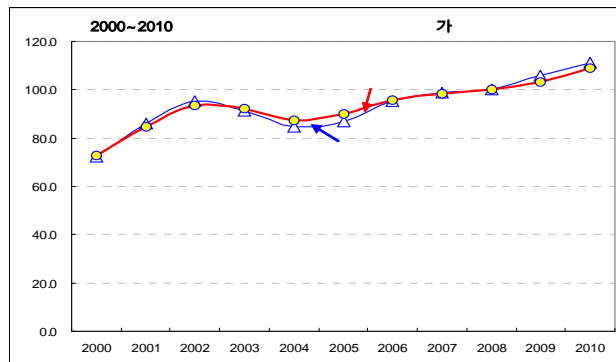
○ 서울시의 전세가격은 2009년 초 부터 계속 상승세임

- 서울시 전세가격은 2008년 대비 2010년 9월 현재 11.1%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년 전국의 전세가격 상승률 8.8%에 비하여 높음. 특히 2008년 전세가 감소세에 비하여 2009년 전세가의 지속적인 증가는 새로이 가정을 형성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그림 5〉 서울시 전세가격 증감 추이



〈그림 6〉 서울시 및 전국 전세가격 상승 추이



○ 결혼당시 남성의 높은 주택부담비율

- 한국결혼문화연구소가 2009년에 결혼한 국내 신혼부부 356쌍을 대상으로 주택비용 마련 방법과 액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주택비용은 1억2715만원
- 신랑측과 신부측의 부담비율을 보면, 신랑 87.5%, 신부 12.5%임. 액수는 신랑이 1억1,124만원, 신부가 1,591만원으로 신랑의 부담이 신부보다 7배임
- 신랑측의 경우 5,458만원이라는 본인 부담도 크지만, 집안이나 대출융자로 마련하는 비용이 그보다 더 많은 5,666만원으로 신랑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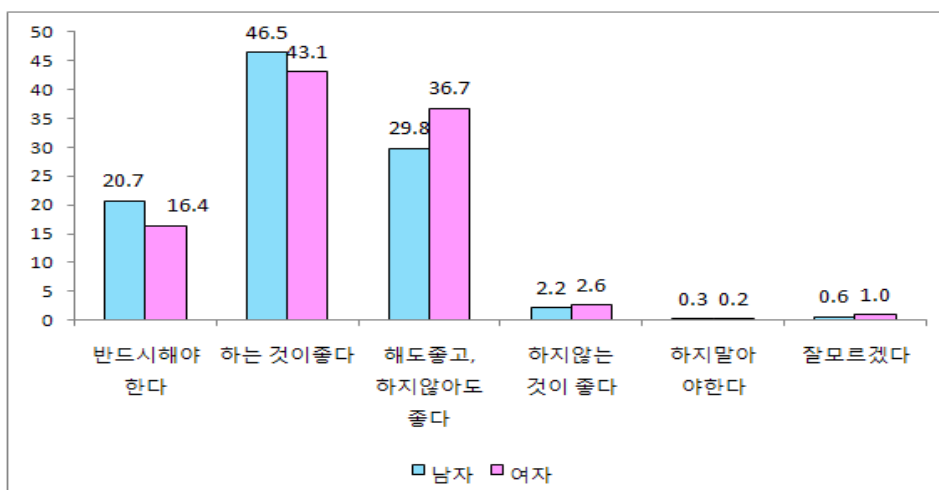
■ 결혼 선호 가치관 감소

⇒ 대안 : 유치원부터 가족가치관 교육 확대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독신 선호현상

-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70% 이하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음
-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
  - 여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가급적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 응답이 제일 높긴 하지만, 또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택적 태도도 36.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7〉 결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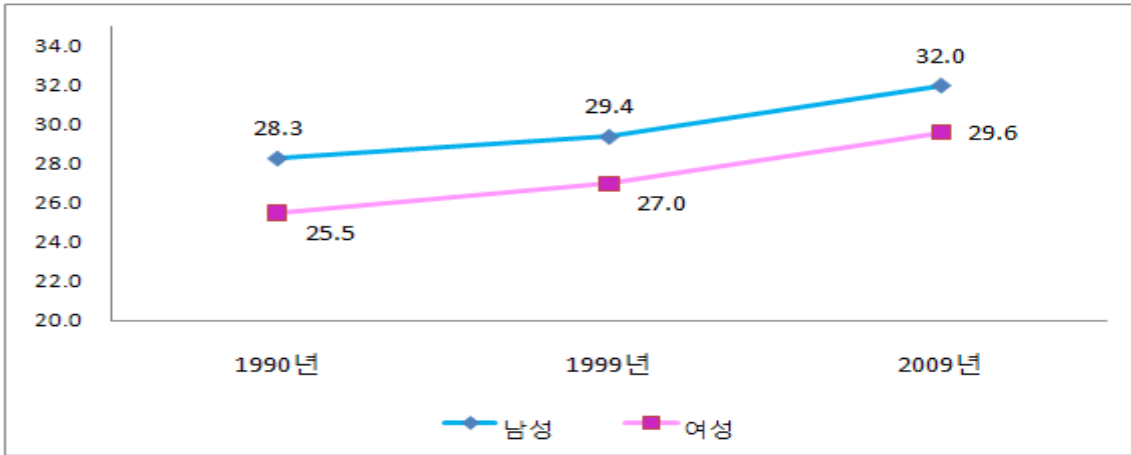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0), 사회조사

□ 만혼화

○ 서울시 여성들의 평균초혼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그림 8〉 서울평균초혼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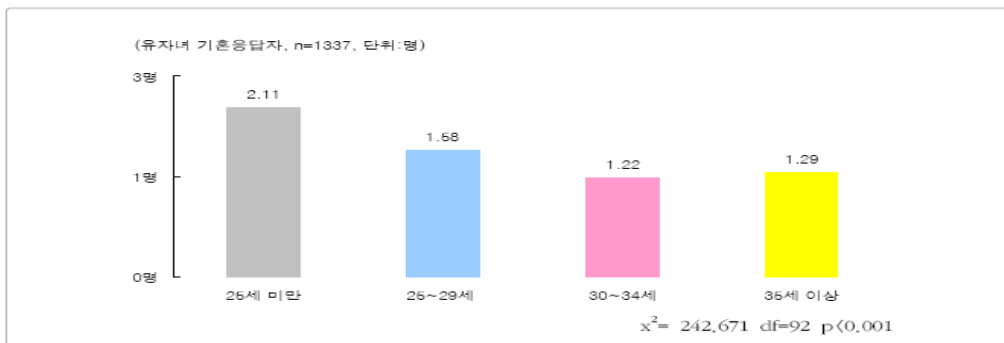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09), 인구동향조사

○ 결혼의 만혼화 및 독신 선호 증가는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 결혼연령별 현재 자녀수 분포를 보면,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진 경우 자녀 1명을 둔 비율이 높았으나, 결혼연령이 이른 경우에는 자녀 2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결혼연령이 늦은 경우 2자녀보다는 1자녀의 비중이 높고, 30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는 자녀가 2명 있는 비율이 높았음
- 25세 미만에 결혼한 여성들은 평균 2.11명을 출산했으며 25~29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들은 1.58명의 자녀를 출산했고, 30~34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들은 평균 1.2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35세 이상의 나이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평균 1.29명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9〉 여성의 결혼연령별 평균 자녀수 추이



자료: 공선희외(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 2) 임신·출산 관련 저출산 원인

### ■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

□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함

⇒ 대안 : 여성 고용안정성 확보,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 정규직의 비중이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고용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2008년 서울시의 임금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74.5%이며, 이 중에서 상용근로자는 52.2%, 임시직 33.1%, 일용직 14.7%순서임

〈표 5〉 서울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2008년)

(단위: 천명, %)

총 근로자수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총수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총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4,922	1,256	378	699	179	3,666	1,912	1,215	540
100.0	25.5	30.1	55.7	14.3	74.5	52.2	33.1	14.7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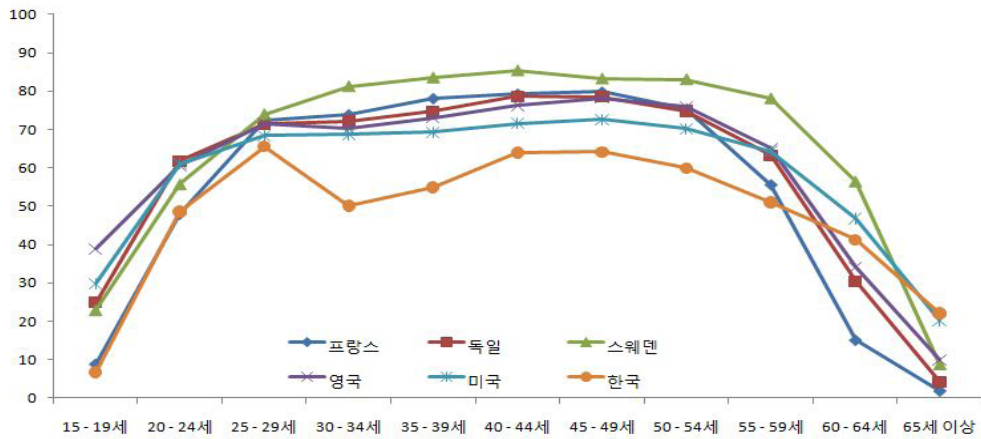
□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현상

○ 국내여성의 연령별 고용추이는 30~40대를 최저점으로 하는 M자 커브 형태를 보임

- 결혼 연령기인 29세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출산·육아기인 30~34세에 최저점으로 하락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남

- OECD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고용률이 높은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들은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고용률이 유지되며 역U자 형태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M자 형태인 우리와 차이를 보임(현대경제연구원, 2010)

〈그림 10〉 OECD주요국의 연령별 여성고용률 추이



자료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2009), Labor Force Survey

○ 출산·육아이후 복귀하는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 남성의 임신·일용직 종사자 비중이 60세 이후 급증하는 반면, 여성은 30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남성은 고용이 안정되는 30대부터 임신·일용직 비중이 감소하나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오히려 임신·일용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6〉 성·연령계층·종사상의 지위별 임금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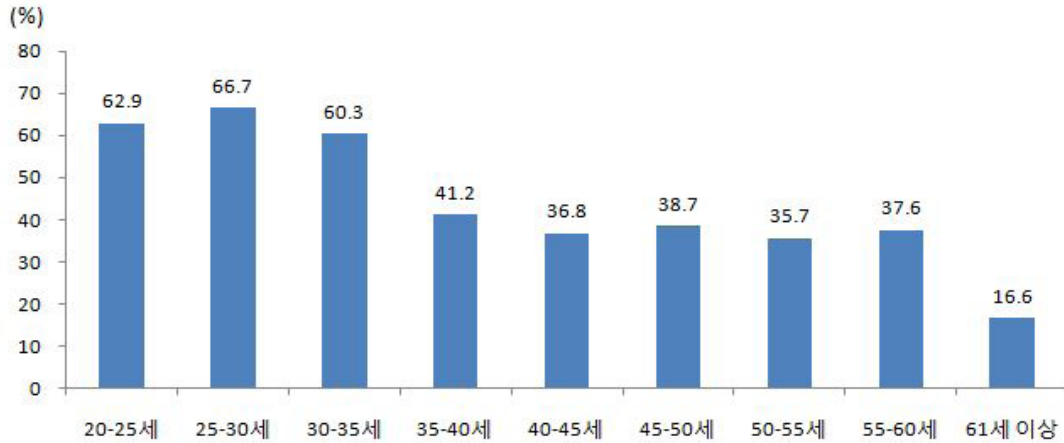
	남성			여성		
	상용(비중)	임시일용(비중)	합계	상용(비중)	임시일용(비중)	합계
15-19세	4(5.2)	73(94.8)	77	9(9.3)	88(90.7)	97
20-29세	1,001(59.2)	690(40.8)	1,691	1,127(59.5)	769(40.6)	1,895
30-39세	2,195(72.5)	834(27.5)	3,029	937(53.6)	810(46.4)	1,747
40-49세	1,740(69.7)	754(30.2)	2,495	586(33.6)	1,157(66.4)	1,743
50-59세	916(63.2)	534(36.9)	1,449	255(26.6)	701(73.2)	957
60세 이상	197(33.0)	400(67.0)	597	40(9.3)	391(90.2)	431
합계	6,053(64.8)	3,285(35.2)	9,338	2,954(43.0)	3,916(57.0)	6,870

○ 고학력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도 35세 이상부터 크게 줄어들며 지속적으로 감소

- 20~35세 이전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60%대를 보이나, 35세 이후 30~40%대로 낮아짐



〈그림 11〉 연령별 고학력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고학력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만혼에 의한 난임 증가 및 모자보건 관련 의료사각지대 발생

⇒ 대안 :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 및 지원 확대

□ 난임부부의 경제적 지원 필요

- 전체 부부 중 난임부부가 10% 이상을 차지하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부부의 13.5%, 부부 8쌍 중 1쌍이 불임부부
-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는 2005년 15만 4689명에서 2009년 19만3607명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는 약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53% 가까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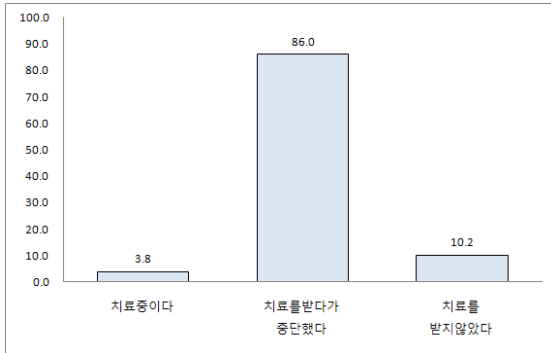
〈표 7〉 2005-2009년 건강보험 불임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연도	진료인원(명)	총진료비(천원)
2005(A)	154,689	14,581,813
2006	167,733	17,366,620
2007	192,324	20,530,486
2008	192,368	20,877,494
2009(B)	193,607	22,297,046
증감율(A-B)	25.16%	5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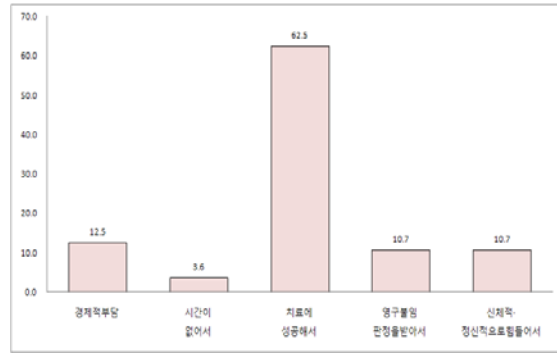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 난임부부 중 86%는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불임부부 중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의 62.5%는 치료에 성공해서이나 경제적 부담인 원인도 12.5%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불임치료여부



〈그림13〉 치료중단 및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



자료: 보건복지부(2005)

#### □ 신생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 필요

- 신생아들이 맞아야하는 예방접종은 대략 12가지, 이 가운데 B형 간염과 소아마비, 장티푸스 등 8가지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한 정부 필수접종이지만 뇌수막염과 폐구균 예방주사 등은 선택접종이며, 전액 본인 부담
  - 접종 비용은 폐구균이나 뇌수막염 접종 같은 경우 4만원에서 10만원 정도씩,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일 회에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
  - 무료 접종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며, 같은 필수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할 경우 비용의 70%를 직접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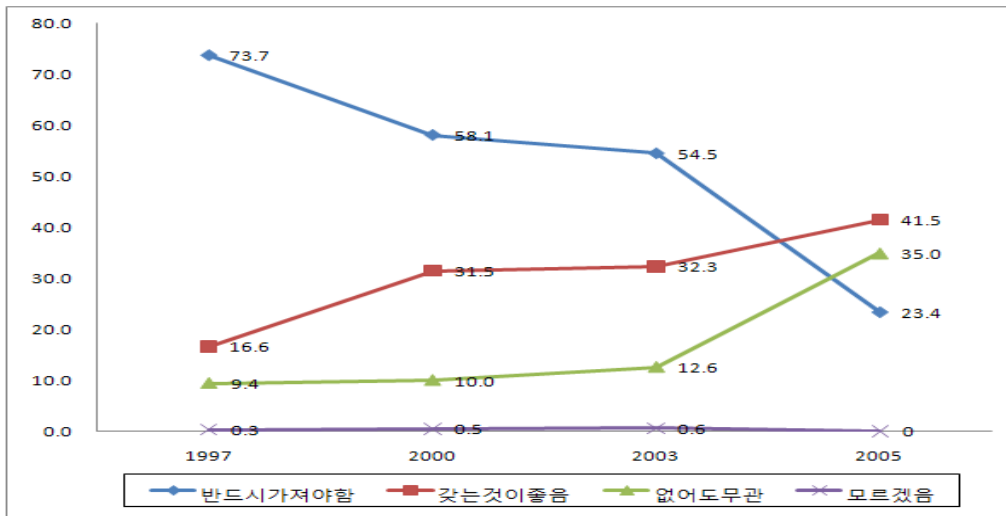
#### ■ 자녀가치관 감소

⇒ 대안 : 아동청소년기부터 가족교육 강화, 방송매체 홍보 강화

#### □ 자녀선호 가치관의 감소

- 유배우 여성의 자녀필요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가져야해야한다는 여성들은 감소('97년 73.7%→'05년 23.4%)하였으나, 없어도 무관하다('97년 9.4%→'05년 35%)는 여성은 증가하였음

〈그림 14〉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자료 : 보건복지부(2005)

-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자녀필요성의 비율이 낮음
  - 취업여성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이 50.7%로 비취업여성 56.9%보다 낮음. 여성은 취업여부가 자녀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표 8〉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

		반도(명)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5점 평균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18.6	50.7	3.38
	비취업 여성	(603)	15.7	56.9	3.51
	취업 남성	(1010)	14.5	55.2	3.52
	비취업 남성	(253)	17.4	56.7	3.52
			F=3.15	df=2493	p<0.05

자료: 공선희외(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 3) 자녀양육 관련 저출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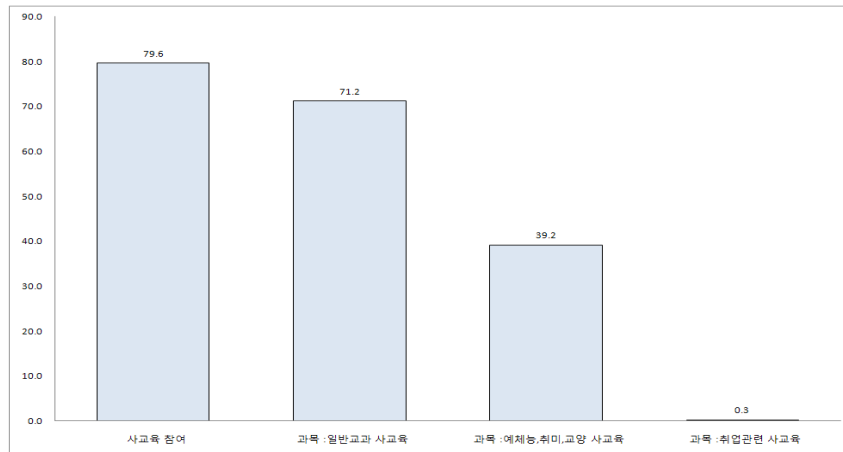
#### ■ 자녀비용 증가

⇒ 대안 : 방과후교육 질 제고, 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

□ 사교육에 대한 높은 부담

- 서울시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79.6%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음
  - 사교육이용 교과 중 71.2%가 일반교과(수학, 영어 등)이며, 예체능, 교양관련 사교육 3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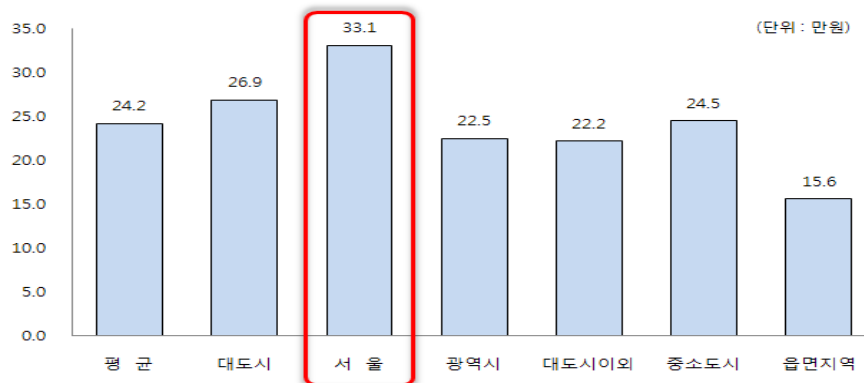
〈그림 15〉 사교육 참여율(서울시)



자료 : 통계청(2009), KOSIS 통계자료

-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서울시가 평균 약3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사교육비용이 높음

〈그림 16〉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 통계청(2009), KOSIS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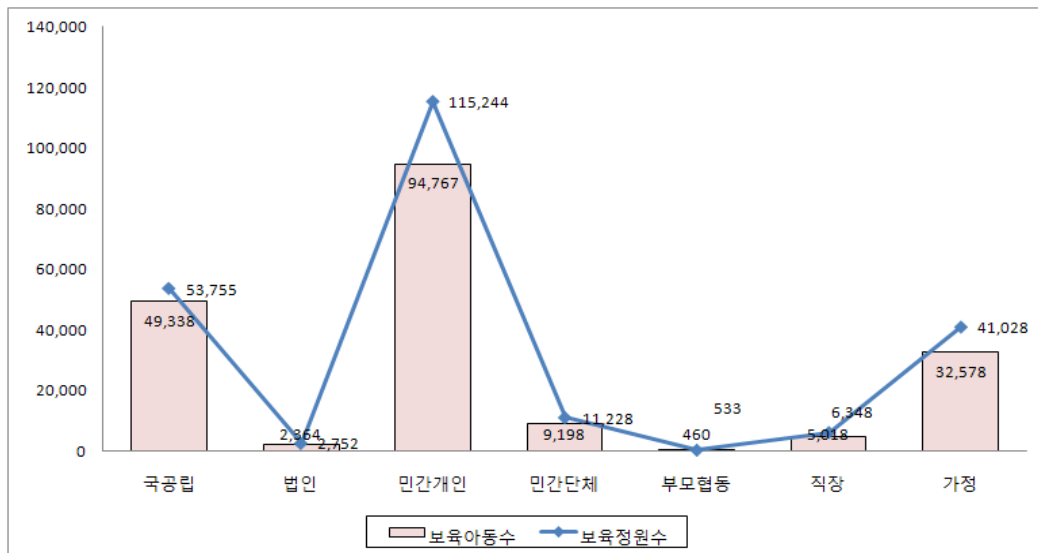
## ■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 대안 :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

###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

- 서울시의 경우 보육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23%수준임
- 전체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아동정원수가 이용아동수보다 많아 양적으로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수준은 아님
- 그러나, 수요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은 약 5만 4천여명으로 전체의 약 23%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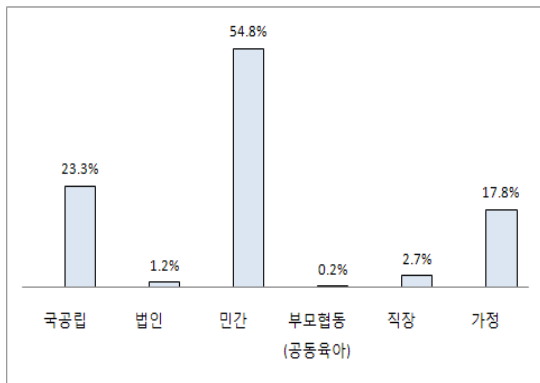
〈그림 17〉 서울시 보육현황



자료 : 서울특별시(2010), 서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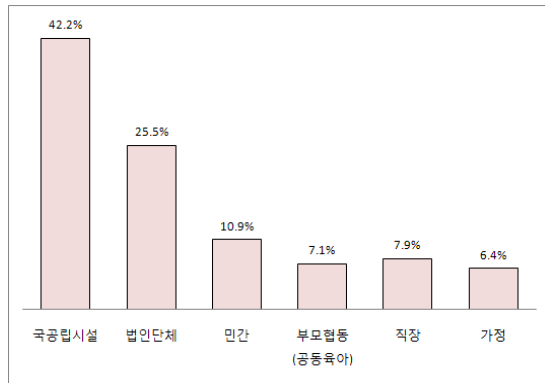
-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54.8%로 가장 높으나, 부모들이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42.2%로 수요가 가장 높음
-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경우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23.3%에 불과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54.8% 정도를 차지, 놀이방 등 가정보육시설은 약 20%를 차지하고 법인시설의 비율은 1.2%이며, 직장보육이나 공동육아는 2% 미만으로 매우 낮음
-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 보육시설에 대한 형태는 국공립시설이 42.2%로 가장 높고, 어린이집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10.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18〉 자녀보육시설 유형



자료 : 서울시(2010), 서울통계

〈그림 19〉 희망보육형태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민선5기 여성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프로슈머조사(미간행자료)

#### □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한계

- 일하지 않는 엄마(재가보육형태)가 자녀에 대한 육아 고민을 같이 의논하고, 자녀들을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영유아플라자 운영 활성화 필요
-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사업은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1월 현재 총 13개가 운영 중임.
- 복합시설인 영유아플라자 내에는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정보 나눔터, 놀이시설, 체험학습장, 어린이 도서관,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육아상담, 보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정보센터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보제공, 육아카페, 교육, 체험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서울특별시, 2009, [2010 서울시보육사업안내])

#### ▣ 일본 우라야수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아동센터

- 오전9시~오후3시까지의 주로 취학전 아동을 둔 엄마가 아동과 같이 센터에 와서 놀이
- 오후 3시 이후에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놀이
-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네트워크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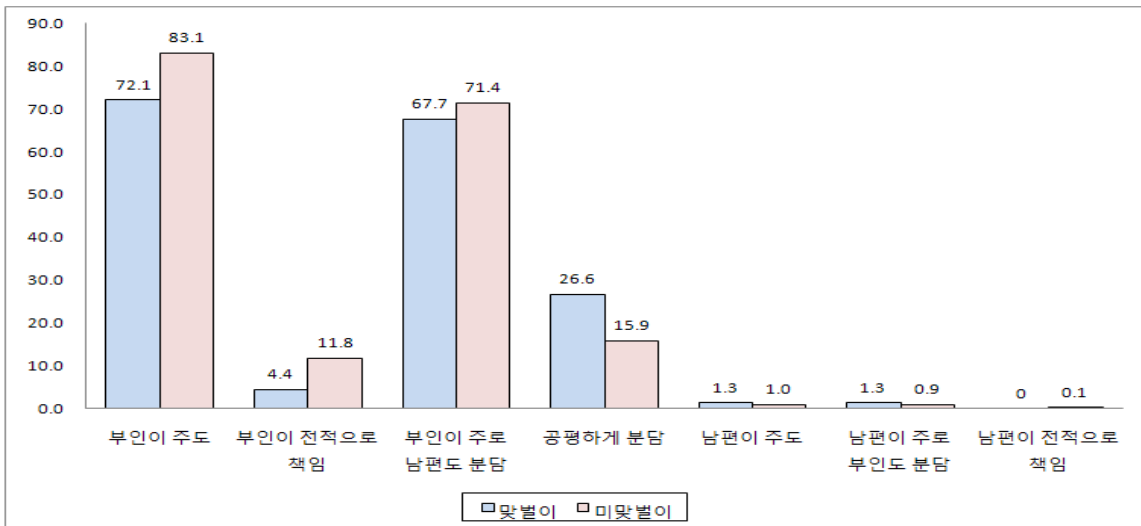
⇒ 대안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문화 조성, 가정 내 성 평등한 가사 및 돌봄노동

### □ 여전히 높은 여성의 가사분담

○ 여성의 경제활동 유무와 관계없이 가사에 대한 책임이 여성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음

- 부인이 주도해서 가사 일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72.1%, 미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83.1%로 나타나며,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의견은 맞벌이 가정(26.6%)이 미맞벌이 가정(15.9%)보다 높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그림 20〉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자료 : 통계청(2008), KOSIS자료

○ 여성의 경제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내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임

- 맞벌이 부부나 남편 홀벌이 부부에 상관없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보다 훨씬 적은 편임
- 맞벌이 부부 경우 남성의 무급노동시간(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은 평균 42분이며, 남편 홀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평균 44분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율은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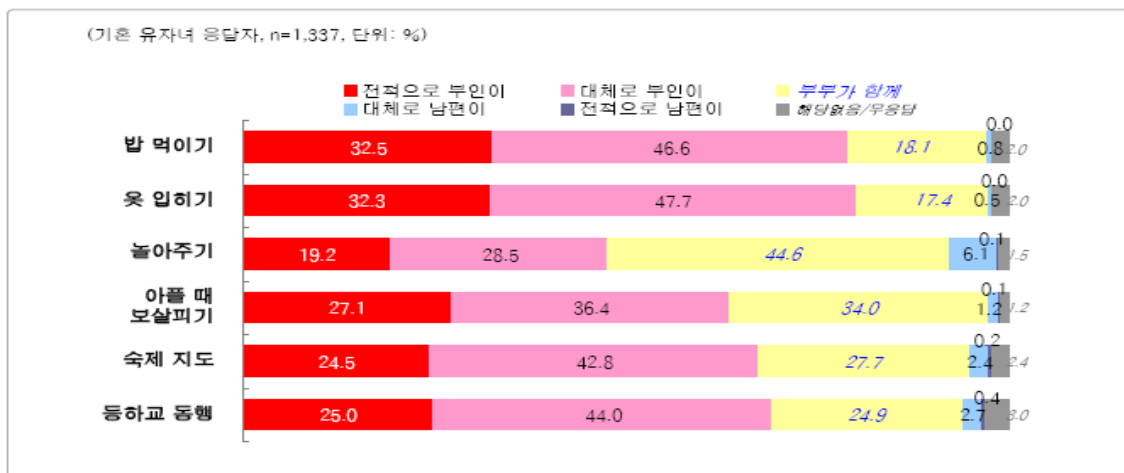
〈그림 21〉 맞벌이가구와 남편 홀벌이가구의 하루평균 생활시간

(단위 : 시간)

구분	맞벌이 부부				남편 홀벌이 부부			
	전체		미취학 자녀 있음		전체		미취학 자녀있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시장노동시간	5:53	4:46	5:37	4:05	5:42	0:05	5:45	0:02
무급노동시간	0:42	3:27	1:20	4:42	0:44	6:15	1:11	7:54
가정관리	0:27	2:45	0:31	2:32	0:22	4:11	0:24	3:54
가족보살피기	0:15	0:42	0:49	2:10	0:22	2:04	0:47	4:00
여가시간	4:19	3:16	3:56	2:36	4:22	5:16	3:52	3:53
여가 및 레저	2:13	1:40	2:02	1:18	2:13	2:41	1:58	1:48
미디어이용	2:06	1:35	1:54	1:18	2:09	2:35	1:54	2:05
개인유지시간	10:46	10:34	10:52	10:43	10:52	10:45	10:55	10:44
이동시간	2:05	1:40	2:01	1:37	2:05	1:21	2:03	1:10
기타	0:15	0:17	0:14	0:17	0:14	0:18	0:14	0:18
소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료 :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재인용)

- 기혼 유자녀 응답자들의 자녀돌봄 분담 정도는 주로 부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기혼 유자녀 응답자들의 자녀돌봄 분담 정도는 밥 먹이기와 옷 입히기, 놀아주기, 아플 때 보살피기, 숙제지도, 등하교 동행 모두 '주로 남편이'(전적으로+대체로 남편이) 담당하기보다 '주로 부인이'(전적으로+대체로 부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놀아주기를 제외하면 '주로 남편이'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 미만에 그친 반면 '주로 부인이'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60% 이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실천하고 있음



자료: 공선희외(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환경

- 취업중인 기혼남녀는 일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하루의 반이상의 시간을 노동에 투여하고 있음
  - 취업중인 기혼남녀(979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6시간으로 일일 평균 10시간 이상(10.32시간) 근무, 특히 주당 평균 5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비율도 39.7%에 달하고 있음.
  - 성별로는 기혼여성이 주당 평균 48.8시간 일하고 있고 남성은 53.2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혼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5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비율이 매우 높은 44.2%에 달하고 있음

〈표 9〉 기혼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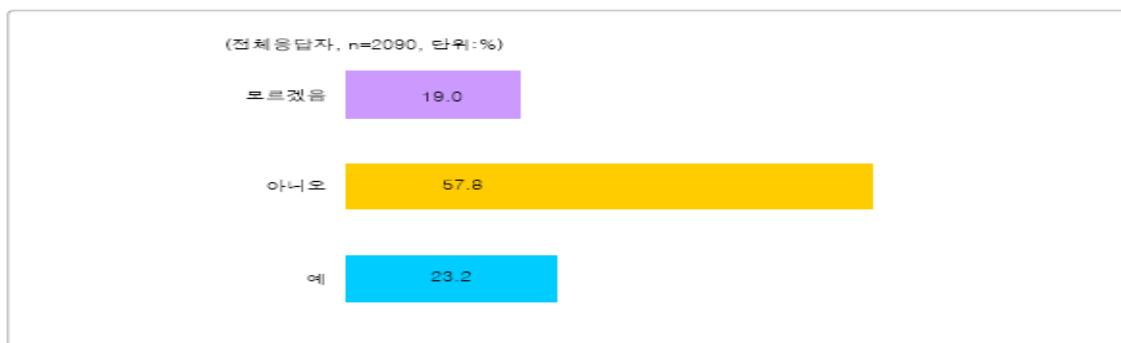
(단위 : %)

		빈도(명)	30시간 이하	31~40시간	41~50시간	51~60시간	61시간 이상	평균(시간)
전체		(979)	3,2	18,9	38,2	28,3	11,4	51,6
성 별	여성	(357)	7,4	22,1	38,7	24,4	7,4	48,8
	남성	(622)	0,8	17,1	37,8	30,5	13,7	53,2

자료: 공선희외(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 취업상태에서 육아휴가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며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취업자 및 취업경력자(2,090명) 중 23.2%만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종사자라고 응답하였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장 종사자 비율은 57.9% 수준
  - 육아휴직제도의 운용사실을 '모른다'는 응답도 19.0%를 차지해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매우 필요함

〈그림 22〉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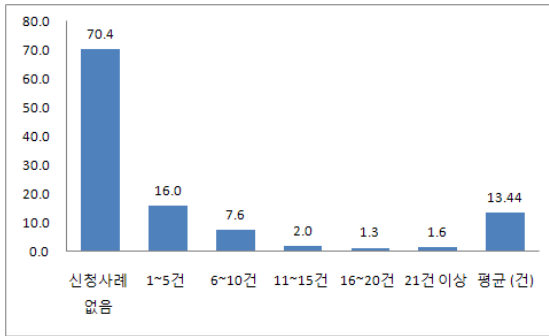


자료: 공선희외(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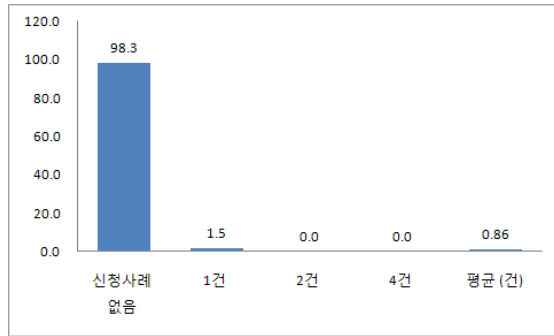
○ 특히, 남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음

- 남성의 출산휴가 신청사례조사결과 신청사례가 없는 기업이 70.4%이었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98.3%가 신청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에 대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남성의 출산휴가 신청사례



〈그림 24〉 남성의 육아휴직신청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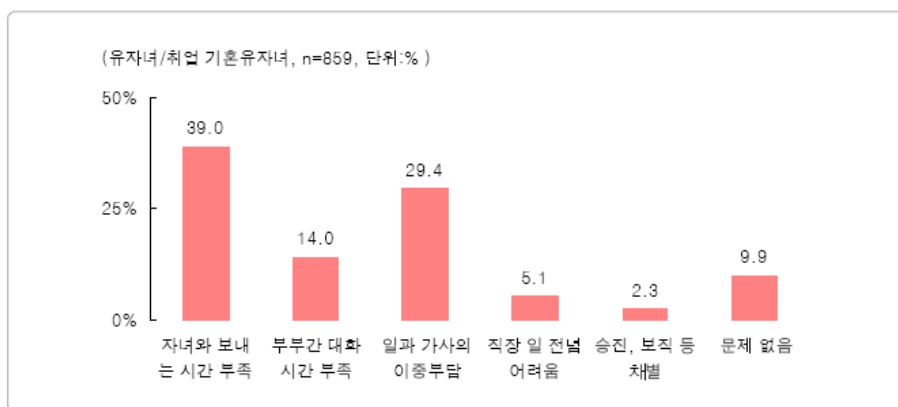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2008),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기혼 유자녀 취업자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부족과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일과 가족의 병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일가족 병행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기혼 유자녀 취업자 859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 39%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부족'(39.0%),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29.4%), '부부간 대화시간 부족'(14.0%) 등으로 순으로 조사

〈그림 25〉 일-가정 양립 시 어려운 점



자료: 공선희외(2008), 서울시 저출산 정책 발전방안 연구

# III

## 저출산 정책평가 및 선진국 저출산 정책 시사점

### 1. 저출산 정책 평가

#### 1) 제1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평가

- 취약계층 위주 복지차원의 제한적 지원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
- 3자녀 이상 가정 위주지원에서 1자녀 가정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 양육·보육 중심 저출산 정책으로 결혼·출산지원 정책 미흡
  - 결혼기피, 만혼화, 소자녀관 등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출산·양육 사회적 지원체계 및 분담 인식부족
  - 여성위주 가사·양육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적 문화기반 미흡
- 서울시 전반의 포괄적 사업추진 체계구축 및 충분한 재원 투입 미흡
  - ⇒ 저출산 현상은 특정계층에서 뿐만 아니라 소득과 관계없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더 이상 한정지원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 개인적 차원의 출산·양육 부담 해소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

#### 2) 중앙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

- 기존 저출산 정책은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성장 동력 기반 붕괴와 국가경쟁력 약화라고 하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저출산 문제와 괴리감이 존재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중앙정부의 출산율 제고정책이 국민 개개인에게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한계

- 부모들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추가적인 아이 출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양육비 경감대책은 개인적인 체감 면에서는 조족지혈(鳥足之血)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은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저소득층 위주의 비용지원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맞벌이 부부가 제외되는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존재
  - 부부 합산 소득기준으로 비용지원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에 한계
  - 자녀양육가정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 취업여성의 47.7%가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2009, 보사연)
  - 근로자의 평균 정년은 57세에 불과하고, 특히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 대기업(300인 이상) 평균정년: 57.2('00)→56.7('03)→57.1세('08)
-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
  - 양육 부담,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은 자녀를 양육하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저조
  -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 인지율/경험율(보사연, 2009) : 보육·교육비 지원 (84.2%/19.7%), 다자녀 주택특별공급(47.6%/1.4%), 산모도우미 지원(43.2%/4.3%)
  - 베이비 붐 세대 문제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지연
-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영역에 편중
  - 저출산 분야는 보육 지원 부문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에 편중
  - 교육·주택 등 각 부문의 상당한 과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

## 2. 선진국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점

### 1) 총평

-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있는 국가의 특징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에 있음
  -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통해 여성의 고용 신장과 출산율 제고가 가능했으며, 기업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 반면, 출산율 제고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문제점은 세금공제와 현금급여가 낮고, 보육시설 활용이 부족하며, 남성의 양육활동을 독려하는 제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OECD 보고서(d'Addio & d'Ercole, 2005)는 국제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결론을 도출
  - 첫째, 가정과 직장의 양립: 여성 고용 신장과 출산율 제고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대체율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파트타임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 증가
    - 여성의 실업률과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율 감소
    -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여성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 출산 여부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 파트타임 고용 등을 통한 근무시간의 유연성은 보육 구조의 부족을 보완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은 여성 고용 신장과 출산율 제고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주요 과제
  - 둘째, 보육의 양·질 개선: 출산율 제고, 여성 고용 촉진과 자녀투자 양립
    - 3세 미만 아동이 공보육에 참가하는 비율은 덴마크가 60% 이상
    - 3~6세 아동이 공보육에 참가하는 비율은 벨기에,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경우 100% 수준에 육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20%를 약간 상회
    - 공공 보육시설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
  - 셋째, 기업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직장에서 조성되기 때문
    - 가족을 위한 다양한 휴가, 탄력근무제,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제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절대적인 탄력적인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
    -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성공요인은 아동수당이나 세제 지원보다도 일과 가족

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보육과 휴직), 모든 정책이 '평생 노동시장 참여 지원'이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태도와 연계

## 2) 국가별 시사점

○ 프랑스 : 셋째 낳기와 직장과의 양육의 균형 유지에 중점

- 프랑스는 1인당 2.00명(2008년)의 출산율로 EU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
- 셋째부터는 지급되는 보조금액이 커지는 등 자녀 셋 낳기를 권장하고 직장과의 양육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점
- 프랑스 출산율 제고의 특징은 특정 정책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성공했기 때문

○ 노르웨이 : 출산·부모휴가와 양질의 공공보육센터 보급

- 노르웨이는 1인당 1.84명(2005년)의 출산율
- 노르웨이의 가족 정책 또한 출산율 제고에 목표를 두는 대신 남녀평등 및 자녀와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 개선에 초점
-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출산·부모휴가와 양질의 공공보육센터 보급, 보육센터는 공공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이지만 모두 정부의 보조, 현재 보육비의 40%는 주(州) 정부가, 나머지 60%는 지자체와 부모가 부담

○ 덴마크 : 부모휴가, 사회 환경 조성, 공공보육센터의 질적 제고

- 덴마크는 1인당 1.80명(2005년)의 출산율
- 최대 1년간 쉴 수 있는 유급 부모휴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공공보육센터의 질적 제고 등으로 요약
- 덴마크 공공보육센터의 질은 교사 수준과 재정지원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높은 편,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은 보육센터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부모는 보육비의 3분의 1 이상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

○ 일본 : 1995년 엔젤플랜, 2000년 新엔젤플랜, 2005년 新新엔젤플랜을 5년 주기로 시행한 결과, 출산율제고 정책의 방향성이 육아의 남녀양성평등으로 귀착

- 엔젤플랜을 통해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하였고, 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주력
- 新엔젤플랜은 육아휴가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소득대체 수준을 높이고 3세 이하 미취학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
- 新新엔젤플랜은 양성평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젊은이의 경제적 독립과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가족 지원 등을 장려

# IV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종합계획 정책 방향

## 미래희망 2.0 프로젝트

비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울
----	----------------

목표	'09년 0.96명 → '14년 1.4명(민선5기) → '20년 1.6명(OECD 평균)
----	---

정책방향	첫째, 둘째아 부터는 서울시가 키운다.	셋째아 이후 → 둘째아 이후
	둘째, '정부+사회+가정' 이 함께 한다.	가정책임 → 정부·사회·가정 공동책임
	셋째,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모두가 체감한다.	복지정책 → 사회투자정책
	넷째, 결혼에서 자녀양육까지 틈새없이 지원한다.	양육지원중심 →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테마 (Theme)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이고, 균형을 찾아, 생각을 바꾸면 아이가 태어난다!
-----------------	---

정책영역 생애주기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이고!	균형을 찾아!	생각을 바꾸면!	
	부담경감 (재정지원 등 직접지원)	지원확대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생각·가치 변화	
결혼	주거비 등 결혼에 따른 비용 경감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	일-생활 양립 프로그램	아동부터~성인까지 가족가치교육	
임신/출산	의료비 등 임신출산비용 경감	임신/출산 지원 토달케어시스템 구축	임산부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출산 가치 확산 홍보 캠페인	
자녀 양육	영유아	보육료 등 양육비용 경감	보육시설 확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남녀가 함께 하는 돌봄 환경 조성	가족친화 지역사회 캠페인
	아동 청소년	아동수당 등 양육비용 경감	방과 후 서비스 등 교육지원 서비스 확대	가족친화경영 지원 및 주도	가족친화기업 상담교육



## 1. 비전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울

성장 동력 기반 붕괴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저출산 정책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은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부모가 행복할 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2. 정책방향

<b>첫째, 둘째아 부터는 서울시가 키운다.</b>	<b>셋째아 이후 → 둘째아 이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까지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은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한자녀 가정이 많은 서울시 현실을 고려할 때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li> <li>- 특히, 희망자녀수가 1.96명임을 고려할 때, 실제 자녀수와 희망 자녀수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둘째아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임</li> <li>- 따라서 2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첫 번째 방향으로 지원대상의 타겟을 둘째아로 집중하고,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li> </ul>	
<b>둘째, ‘정부+사회+가정’이 함께 한다.</b>	<b>가정책임 → 정부·사회·가정 공동책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家·社·政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 필요</li> <li>- 그동안은 자녀양육이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모든 자녀비용이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결국 자녀비용의 증가, 여성경제활동의 확산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저출산을 초래하였음</li> <li>-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해결 가능</li> <li>- 무엇보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는 것이 중요함</li> </ul>	
<b>셋째,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모두가 체감한다.</b>	<b>복지정책 → 사회투자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위주의 비용지원 정책을 벗어나 맞벌이 부부 등을 포함한 중산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li>- 이제까지 저출산 대응 정책은 취약계층 위주로 복지차원의 제한적 지원에 머물러 있었음</li> <li>- 그러나, 소득계층별 출산 현황을 살펴보면 중산층이 가장 저조함. 즉, 저출산 현상은 특정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정</li> </ul>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 따라서, 저출산 대책의 수혜대상을 서민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함으로써, 정책과 지원의 효과성 및 출산을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넷째, 결혼에서 자녀양육까지 틈새 없이 지원한다. 양육지원중심 → 생애주기별 지원**

- 저출산은 결혼이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되는 만혼에서부터, 임신·출산,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각종 부담과 출산에 불리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임  
 - 그러므로,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서울시 제2차 저출산 중장기 종합계획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하지 않고, 결혼부터 임신·출산, 자녀양육 전 단계에 걸친 틈새 없는 지원 정책 설계

### 3. 정책영역

**Theme**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이고, 균형을 찾아, 생각을 바꾸면 아이가 태어난다

- 저출산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습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총체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대응 정책은 전 방위적인 종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정책 중장기 계획’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을 다음의 네 가지 정책 테마(Theme)를 갖고 종합적으로 추진해가고자 함
  - i) 자녀양육 비용 등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ii) 보육환경 개선 등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iii)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 조성 등 생활의 균형을 찾아, iv) 출산과 가족에 대한 가치와 생각을 변화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설계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함

#### 정책영역 I : 부담경감

- 출산을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 부담임. 결혼단계에서 경험하는 주거비 부담에서 부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양육비 부담 등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임.
- 따라서, 결혼단계에서부터 자녀양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요구됨.

- 이에, 제2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재정적인 부담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에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을 설계함

#### 정책영역Ⅱ : 지원확대

- 저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정책들이 꾸준히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 각 단계별로 출산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인한 고용과 소득불안정은 결혼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여성과 남성의 생식보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은 임신과 출산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여전히 자녀 돌봄의 책임을 부모, 특히 여성들이 주로 전담하고 있는 현실은 출산률 저하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제2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정책에서는 지원확대를 두 번째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결혼단계에서부터 자녀양육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경험하는 여러 장애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및 지원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설계함

#### 정책영역Ⅲ : 일·가정양립(균형)

- 선진국 사례와 여러 선행 연구결과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사회·직장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권과 노동권을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사회(기업)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에, 제2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정책에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균형)을 세 번째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친가족 근로형태(family-friendly work patterns)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영역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정책을 설계함

#### 정책영역Ⅳ : 생각·가치 변화

-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중시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독신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치의 변화임.
-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하고 양육하며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며, 이와 동시에 자녀와 가족에 대한 생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제2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정책에서는 가치변화, 생각변화를 네 번째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10대 아동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 상담, 홍보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가치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함



## 제2차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 전략과제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이고, 균형을 찾아, 생각을 바꾸면 아이가 태어난다!						
정책 영역	부담경감			지원확대	일·가족양립	생각·가치 변화
	양육비 보육·교육· 아동수당	주거비	의료비			
생애 주기	결혼	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확대		Reproductive health care check-up		아동청소년 행복가정 준비 프로젝트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전세 자금지원				부모됨이 즐거운 서울 만들기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확대				저출산대응 가족친화정책 교육
임신 · 출산	빠른출산우대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지원 토탈케어시스템 인프라 구축	직장에서 “당당한 D 라인”	
						저출산관련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영유아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할인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다자녀특별공급 비율확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튼튼 쓱쓱카드) 바우처	영유아발달·건 강센터 설치	남성육아 휴직자를 위한 플러스휴직수당 지원	가족친화 지역사회만들기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확대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전세 자금지원 :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직무공유(Job Sharing)제도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확대	자녀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임 대료 차등화 시행		보육품질 관리센터	육아기 근로형태 선택의 다양화 -공무원대상-	기업관리자의 조직관리 교육강화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상하수도, 도시가 스요금) 누진요금 감면	월세임대료 주택 바우처 지급		영유아플라자 확충	워킹맘/워킹대 디를 위한 기업연합 보육지원	출산이 자랑스러운 서울만들기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이고, 균형을 찾아, 생각을 바꾸면 아이가 태어난다!

정책 영역	부담경감			지원확대	일·가족양립	생각·가치 변화
	양육비 보육·교육· 아동수당	주거비	의료비			
생애 주기	영유아	돌째아 양육수당 지원	자녀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임 대료 차등화 시행	병아영유아 일시보육 지원사업	기업맞춤형 컨설팅 제공	
	영유아	조부모 육아수당 지급	월세임대료 주택 바우처 지급	역세권 영유아 돌보미 센터	서울형 가족친화선도기 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영유아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적용범위 확대		가정방문 서비스	워킹맘 상담실 'I love Working Mom'	
	영유아	보행자동행 유아 대중교통 요금 면제 확대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세자녀 가족 아동수당 지급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아동· 청소년	다자녀가정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 방과후 서비스 확대		
	아동· 청소년	아동인지능력 향상 바우처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강화		
	아동· 청소년			가정사고 예방사업(safe house start)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아동· 청소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아동· 청소년			빈곤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강화		

결혼부터 양육까지 시민부담을 줄이면 아이가 태어난다!

정책영역 : PART

I

부담경감





정책영역 생애주기	양육비			주거비			의료비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결혼				신혼부부 주택 자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내집 마련기회확대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전세자금 지원			
					신혼부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기존주택 전세 임대 지원확대			
임신·출산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시행)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서울맘카드 발급(미시행)	

정책 영역 생애 주기	양육비			주거비			의료비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다자녀가정 세제지원		다자녀가정 주차 요금 할인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다자녀특별공급 비율확대	민간시설 점중비지원수준 확대	국가예반 점중사업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전액지원(튼튼속 쑥카드)바우처
			다자녀가정 소득공제확대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금리 우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전세자금 지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누진요금 감면						
		차등 보육료 지원							
		만 5세 무상 보육료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자녀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임대로 차등할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활아관리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지원							

영 유 아  
자 녀 양 육

정책영역 영역 생애 주기	양육비			주거비			의료비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영유아 자녀양육	맞벌이 가구의 보육·교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돌짜아 이상 보육료 지원				월세임대료 주택 바우처 지급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급여) 실시	
	다문화가족자녀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농업인 영유아보육,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돌짜아 양육수당지원 (캠퍼루 통장)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0만원							
			조부모 육아수당 지급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제 다둥이 행복카드	다자녀가정우대 카드제 적용 범위 확대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할인 확대	보호자동행유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 영역	양육비			주거비			의료비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중앙 새로마지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생애 주기		2.0 캣거루 통장-아동수당 지급 (미시행)	세자녀 가족 아동수당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다자녀가정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바우처 강화						
	아 동 · 청소년								

## 1. 양육비(보육비, 교육비, 아동수당)

양육비				
생애 주기	중앙정부 (새로마지 2015)	서울시 (민선 4기)	서울시 신규 (민선 5기)	
결혼				
임신출산		출산지원 세제혜택 검토	빠른 출산 우대제	
영·유아	다자녀가정 세제지원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할인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확대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누진요금 감면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차등 보육료지원	
			만 5세 무상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지원	
	맞벌이 가구의 보육·교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지원	
	다문화가족자녀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농업인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 (캥거루 통장)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0만원		
			조부모 육아수당 지급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다둥이 행복카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적용범위 확대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할인 확대	보행자동행 유아 대중교통 요금 면제 확대	
아동·청소년		2.0캥거루 통장-아동수당지급(미시행)	세 자녀 가족 아동수당 지급	
		한부모 가족 아동 지원		
			다자녀가정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바우처	

## 1-1. 세부내용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1	[민선4기]출산지원 세제혜택검토	- 6세미만 양육 육아 한부모가 정, 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양육가정	- 부동산 취·등록세 100%감면
2	[민선5기]빠른출산우 대제	- 첫째아 출산 후 3년 이내 출 산한 24개월 이하 둘째아	- 월 10만원(시비:구비=7: 3)지원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용 60만원 지원
3	[중앙]다자녀가정세 제 지원	- 다자녀가정	- 세제지원: 기본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
4	[민선5기]다자녀가정 주차요금 할인	- 둘째 자녀이상 가정	- 주차요금할인: 2자녀 가구부터 50% 할인 - 문화시설, 대형할인점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5	[민선5기]다자녀가정 소득공제 확대	- 둘째 자녀이상 가정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확대 - 자녀 2인: 100만원 - 자녀 2인 이상: 200만원
6	[민선5기]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 면확대	- 18세 미만 2자녀 가정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100%감면
7	[민선5기]다자녀가정 공공요금 누진요금 감면	- 2자녀 이상 가정	-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2자녀이상 20%감면
8	[중앙]다자녀가정 세 제 지원	- 다자녀가정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공제 - 18세 미만 3자녀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 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면제
9	[중앙]보육·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 둘째 자녀이상 가정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 자녀 2인: 추가 50만원 → 100만원 - 자녀 2인 이상: 추가 100만원 → 200만원
10	[민선4기]차등 보육 료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보육시 설 이용 만 5세 아동	- 보육료 100% 지원
11	[민선4기]만 5세 무 상 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만 5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소득 하위 70% 이하 100% 보육료 지원
12	[민선4기]두 자녀 이 상 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보 육시설 이용 둘째 자녀이상 가정	- 소득하위 70%이하 100% 보육료 지원
13	[민선4기]장애아 무 상 보육료 지원	- 소득무관, 모든 장애아	- 보육료 100%지원
14	[중앙]맞벌이가구, 둘 째아 이상 보육·교 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둘째아 이상	- 맞벌이 가구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 소득 70%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
15	[민선4기]맞벌이 가 구의 보육·교육료 지원	- 소득하위 70%의 둘째아 이상	- 보육료 100%지원
16	[중앙]다문화가족자녀 보육교육비전액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17	[중앙]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 농업인 영유아	- 보육교육비지원
18	[민선4기]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	- 다자녀가족 영유아: 0~5세	- 보육료 50% 지원 또는 양육수당(10만원) 중 선택
19	[민선5기]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캥거루 통장)	- 둘째아	- 생후 72개월까지 월 10만원지급 - 캥거루 적금통장 개설→지원액적립→교육비활용
20	[민선4기]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0만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24개월 미만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 양육수당 10만원
21	[민선5기]조부모 육아수당	-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 육아수당: 평균 가국소득 100% 이하 0~24개월 영유아의 주돌봄자가 조부모인 가구에 월 10만원 지급
22	[민선4기]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다둥이 행복카드	- 2자녀 이상 가정 (막내가 만 13세 이하)	- 협약을 체결한 참여업체로부터 포인트 적립 및 할인
23	[민선5기]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적용범위 확대	- 2자녀 이상가정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문화시설, 체육시설, 유아용품업체, 대형서점, 대형마트로 참여업체 확대
24	[민선4기]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할인확대	- 영유아 3인까지	- 시내버스, 지하철 영유아 3인까지 무임승차
25	[민선5기]보호자동행 유아 대중교통 요금 면제	- 보호자 동행 유아	- 대중교통 요금 면제 확대 : 성인1인당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3인까지 무임승차
26	[민선4기]2.0캥거루 통장-아동수당지급(미시행)	- 서울시민의 둘째아이 (신청일~아동 월령 72개월까지)	- 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을 위한 1개월 기본 식료품비 수준)
27	[민선5기]세자녀 가족 아동수당 지급	- 셋째자녀(0세~72개월까지)	- 보육료 전액지원 또는 양육수당 선택 - 매월 양육수당 20만원 지급
28	[민선5기]다자녀가정 하이서울장학금지원	- 둘째 자녀이상 가정	- 하이서울장학금지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둘째자녀: 입학금수업료 50% 감면 셋째자녀 이상: 입학금수업료 100% 감면 <대학교 교육비 지원> 둘째자녀: 입학금수업료 10% 감면 셋째자녀 이상: 입학금수업료 20% 감면
29	[민선5기]아동인지능력 향상 바우처 강화	- 세자녀 이상 가구 만 2~6세 아동	- 월 2천원~28천원 본인 부담.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 도서지급, 정보 제공, 교육 등 지원

## 빠른출산 우대제

### 1. 현황 및 실태

□ 출산율이 2.0을 크게 밑도는 요인 중 첫째자녀 출산율이 낮은 원인도 있지만 둘째자녀 출산은 기피하는 요인도 커서 둘째자녀 출산을 유인하고 첫째자녀-둘째자녀 출산 간격이 짧아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대책이 필요함

○ 첫째자녀 경우: 첫째자녀 출산 평균연령은 상승했지만 기피가 아닌 출산지연으로 늦은 연령대에서 출산율 회복

→ 25세~28세 연령별 출산율 큰 감소(64%), 29세~35세 연령별 출산율 큰 증가(81%)

○ 둘째자녀 경우: 출산지연보다는 출산기피를 선택

→ 25세~32세 연령별 출산율 큰 감소(60%), 33세 이상 연령별 출산율 크게 증가하지 않음(30%)

25~39세 여성	첫째자녀 출산율	25~39세 둘째자녀 출산율
1995~2000년	7.2% 감소	14.7% 감소
1995~2006년	18.8% 감소	43.5% 감소

○ 시사점: 서울시 여성의 경우 첫째자녀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낳는 반면, 둘째 이상 자녀는 기피하여 아예 낳으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인구학적 관점에서 첫째 자녀 출산의 연령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보다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한 전략이 합리적인

※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 우대보다는 1명 출산을 2명 출산으로 유도하는 정책과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필요(2009 서울시 저출산 대응 국제 포럼,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장기적으로는 둘째아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가구의 둘째아 출산을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빠른 후속 출산으로 영유아 2명을 양육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첫째아 출산 후 3년 이내(cf. 첫째와 둘째 출산 평균간격 3.04년) 출산한 24개월 이하 둘째아 33,795명(16,847명\*2년)
- 지원액
  - 월 10만원(시비:구비=7:3)
  - 출산 시 산후건강관리비용 60만원(빠른간격출산순 한 해 1,000명)

### □ 기대효과

- 첫째아와 둘째아 사이 출산 간격 감소
- 출산 간격 감소로 가중되는 양육부담 완화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둘째아 빠른 출산 건강관리비용	2011년 출생자부터	전체	전체	전체	전체
둘째아 빠른 출산 이동수당	소득하위 50이하가구	소득하위 60이하가구	소득하위 70이하	전체	전체

### □ 연차별 예산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둘째아 빠른 출산 건강관리비용	3,000	600	600	600	600	600
둘째아 빠른 출산 이동수당	154,965	22,481	30,337	32,193	34,049	35,905

##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할인

### 1. 현황 및 실태

□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주차장 이용률이 높음

-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자가용을 소유하고 자녀들을 동반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장 이용이 불가피함

□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할인 현황

- 현재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두자녀 30%, 세자녀 이상 50% 주차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2차 계획은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두자녀 가구와 세자녀 가구의 할인혜택 차이를 감소시킬 필요 있음

□ 주차장 할인대상 민간 확대

- 민간 협력업체에도 주차장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자녀가구가 어린이들을 동반하고 이용할 때 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할 필요 있음
- 특히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에 2~3명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 인해 줌으로써 시설 이용률과 편의성을 증진시켜야 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다자녀 가구가 다자녀를 동반할 경우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문화시설·대형 할인점 등 주차장 이용 시에도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유도함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2자녀(13세이하) 이상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현재 2자녀 가구 30%, 3자녀 가구 50% 할인율 적용하던 것을 공히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늘리고
- 문화시설, 대형 할인점 등의 주차장에도 주차요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함

#### □ 기대효과

- 다자녀 가구가 공공기관·문화시설 등 이용 시 교통 편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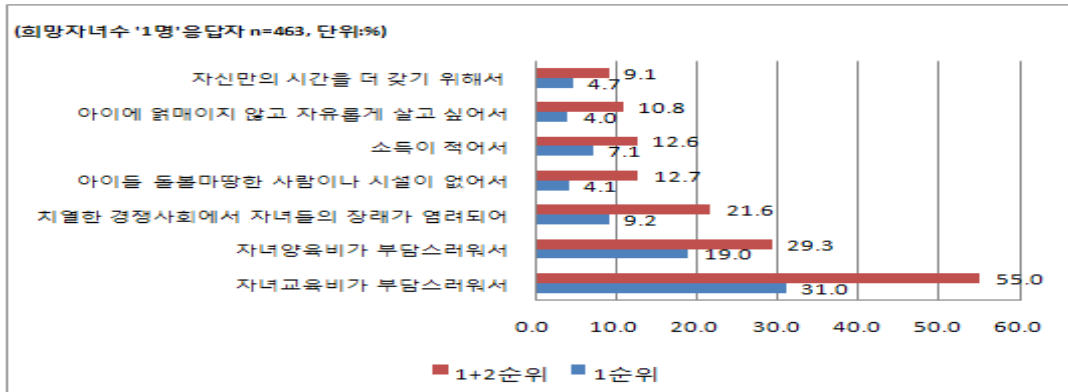
### 4. 소요예산 : 비예산

##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확대

### 1.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20~44세 기혼여성이 추가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등 31.0%가 교육비용 부담, 19.0%가 양육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함

〈그림 26〉 서울시민이 자녀를 1명만 갖기를 원하는 이유



- 서울시 20~44세 기혼여성이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18.4%가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15.7%는 교육비용 부담, 10.2% 양육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함
-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음

〈표 10〉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단위: %, 명)

사업내용	지원대상내역
기본공제	자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 해당자녀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가 2인인 경우: 추가 50만원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100만원

교육비공제(한도)	영유아: 1인당 300만원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의료비공제(한도)	자녀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금액(최대 700만원)
보험료공제(한도)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최대 100만원)

## 2. 목표 및 추진방향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 대한 추가적 공제 확대
- 추가적 자녀 출산으로 인한 추가적 양육비용 보상의 의미를 가짐

## 3. 세부추진과제(사업설명 포함)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인: 추가 50만원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시: 추가 100만원 → 200만원

### □ 기대효과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 지출 증가,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

## 4. 소요예산 : 비예산

##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 1. 현황 및 실태

- 현재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혜택 제공
- 3자녀 이상 가정에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시민 수가 적고, 3자녀 이상 가정뿐 아니라 2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혜택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18세 미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세 혜택의 대상을 3자녀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높임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18세 미만 2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100% 감면

#### □ 기대효과

- 18세 미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인식 확산
- 3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 역시 다자녀가구라는 인식 확산

### 4. 소요예산 : 비예산

##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누진요금 감면

### 1. 현황 및 실태

- 현행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 전기요금 20% 감면 혜택 제공하고 있음
- 다자녀 양육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하여 혜택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자녀 이상 가정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 시민 수가 적고, 3자녀 이상 가정뿐 아니라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이라는 인식 확산필요
  - 도시가스 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서울시 재량으로 인센티브 확대 가능

### 2. 목표 및 추진방향

- 18세 미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공요금 감면 혜택의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함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수혜대상 확대: 2자녀 이상인 가정까지
- 사업 확대: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 차등 감면
  -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2자녀이상 누진요금 감면
  - 전기요금 2자녀 10%, 3자녀 이상 20%(기존)

○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7조 개정(상수도사업본부)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 제8조 개정(맑은환경본부)
- 전기공급약관 개정(지식경제부)

□ 기대효과

- 18세 미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인식 확산
- 3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2자녀가구 역시 다자녀가구라는 인식 확산
-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에 대한 지방세 혜택 확대로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용 부담 완화

#### 4. 소요예산 : 비예산



##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 (캥거루 통장)

### 1.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가구의 경우 영유아를 자녀의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64.2%로 전국의 62.6%보다 높음
  - 따라서 시설아동의외 재가아동에 대한 보육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특히 1세미만의 아동은 86.4%가 부모에 의해 돌봐지고 있음

〈표 11〉 서울시 가구의 영유아 보육실태

(단위: %)

지역	연령별	자녀의 부모	부모외 가족친인척	탁아모, 가정부, 이웃사람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집에 그대로 둠	기타
전국	계	62.6	11.9	0.7	4.3	6.3	11.2	2.8	0.1
	1세미만	86.4	11.0	0.9	0.2	1.5	-	-	-
	1~3세	70.5	15.4	1.2	2.5	9.3	0.8	0.2	0.1
	4~6세	57.7	11.0	0.4	11.0	11.1	7.5	1.3	0.1
서울 특별시	계	64.2	11.6	1.2	4.2	5.9	9.3	3.5	-

자료: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현재 셋째아 이후는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72개월\*월 10만원, 시구 각 50% 부담)되고 있으나 수혜인원(7.8%)이 적어 효과 미흡, 대부분이 희망자녀수(2명)에 못미치는 1자녀 가정 증가 추세
  - 프랑스의 경우 세자녀 이상 여성에게 정액제 급여(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 APE)를 제공하던 것을 1994년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이후 출산율 소폭 상승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장기적으로는 후속출산을 연기·기피하는 가구를 감소시키고 단기적으로는 둘째아출산으로 추가적인 양육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가구의 소득 보전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지원방법: 생후 72개월까지 월 10만원 지급(시:구=7:3)
  - ※ 셋째아 이후는 기존 다자녀 양육수당·보육료 지속 지원
  - ※ 영아 양육수당(최저생계비 120% 이하)은 72개월까지 월 10만원(아동을 위한 1개월 기본 식료품비 수준) 지급
- 지급대상: 178,900명
- 중복지원 배제: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수급아동(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 18% / 보육시설 미이용으로 '양육수당' 수급아동(최저생계비 120%이하 가정) 18.3%
- 쉼터·적금통장 개설 → 지원액 적립 → 교육비 활용 등

### □ 기대효과

- 둘째아 출산으로 휴직·퇴직하여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가구의 양육비 보전과 둘째아출산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 보상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둘째아 양육수당	1,073,400	214,680	214,680	214,680	214,680	214,680

## 조부모 육아수당 지급

### 1. 현황 및 실태

#### □ 상당수의 영유아 동거 또는 비동거 조부모에 의해 양육

- 특히 영아기(0세~2세) 자녀의 경우 동거·비동거 조부모가 주돌봄자인 비율이 높음
- 저소득층의 경우 조부모에 의한 아동 양육시 보육료지원(보육시설이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비용을 보전할 수 있음
- ※ 프랑스의 경우 조부모가 자녀를 돌볼 경우 월 180유로를 지급

〈표 12〉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관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33.5	49.9	8.2	30.5	61.9	60.6	49.2	39.5	41.3
유치원	0.5	39.4	-	-	1.7	23.6	40.6	53.8	19.4
선교원	0.1	1.0	-	-	0.2	1.4	0.2	0.8	0.6
반일제이상 학원	0.1	4.5	-	0.2	0.2	4.3	5.1	4.2	2.3
특기 및 보습학원	0.2	13.5	-	0.3	0.4	3.1	9.6	27.1	6.6
지역아동센터 등	0.3	1.2	-	0.2	0.8	0.6	1.0	2.1	0.8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8.5	4.4	4.1	13.3	7.8	3.9	5.1	4.2	6.5
개인양육지원	27.7	23.6	31.3	26.9	26.4	21.5	24.0	24.9	25.8
동거 조부모	9.8	8.0	10.1	9.8	10.1	7.8	7.8	8.7	9.1
비동거 조부모	13.8	11.4	16.3	13.3	12.1	11.5	12.0	11.7	12.8
동거 친인척	0.5	0.7	0.4	0.5	0.4	0.2	1.0	0.8	0.5
비동거 친인척	2.0	1.8	1.7	1.4	2.7	0.8	2.5	1.9	1.8
동거 비혈연	0.3	0.1	0.7	0.3	-	0.4	0.2	-	0.3
육아전문파견인력	0.5	0.2	0.9	0.2	0.6	0.2	0.2	0.2	0.4
기타비혈연	1.6	1.5	1.9	2.1	1.1	1.0	1.2	2.9	1.7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2.7	3.7	0.7	3.0	4.0	4.3	3.5	3.5	3.1
예체능 방문	0.1	1.0	-	-	0.4	0.4	1.0	1.5	0.5
과외	-	0.7	-	-	-	0.4	0.6	1.2	0.3
학습지(방문 포함)	7.1	42.3	0.9	5.2	15.6	29.4	44.5	52.7	24.2
기타(인터넷 포함)	0.1	0.1	-	-	0.4	0.2	0.2	-	0.1
수	1,744	1,559	535	576	528	516	512	523	3,179

\*중복응답결과임.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보육실태조사보고서: 가구조사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저소득층 취업부모가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육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평균 가구소득 100%이하 0~24개월 영유아로서 부모의 직장생활로 인해 주돌봄자가 조부모인 가구(맞벌이가구로서 주돌봄자가 동거/비동거 조부모인 가구)
- 지원액: 월 10만원

### □ 기대효과

- 영유아보육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조부모에 의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보육, 노후세대 경제적 보전 및 저소득 가정 경제적 지원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조부모 육아수당	소득하위 500이하가구	소득하위 600이하가구	소득하위 700이하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 적용범위 확대

### 1. 현황 및 실태

- 서울시의 소득계층별 출산 자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저소득층일수록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하는데,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표 13〉 서울시 가구 소득수준별 자녀 수

(단위: %)

가구소득수준	자녀 수						평균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전체		
60%미만	17.2	31.0	46.6	5.2	(100.0) 58	1.39	23.0
60~80%	12.5	35.4	43.8	8.3	(100.0) 96	1.49	
80~100%	9.4	36.2	50.0	4.3	(100.0) 138	1.50	
100~120%	12.6	31.5	51.2	4.7	(100.0) 127	1.47	
120~140%	9.8	23.2	59.1	7.9	(100.0) 164	1.65	
140~160%	7.5	24.7	58.1	9.7	(100.0) 93	1.70	
160%이상	15.5	17.2	58.6	8.6	(100.0) 58	1.58	

-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녀 양육에 드는 문화, 교육, 식료품, 육아용품 등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동이 행복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협력업체가 914개에 지나지 않고, 할인율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10~20%에 불과하여 다른 카드 할인혜택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다동이 행복카드 이용의 실질적인 혜택을 증가시켜 서울시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실질적 비용 부담은 감소시키되 자녀양육 관련 상품·서비스 소비는 진작시켜 협력업체의 매출도 증가시키는 win-win 전략 추구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대상: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지원: 협약을 체결한 참여업체로부터 포인트 적립 및 할인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 체육시설: 수강료, 연회비 등 할인
  - 육아용품업체: 물품구매 시 할인
  - 대형서점, 대형마트: 포인트 적립 등
-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확인용카드

#### □ 기대효과

- 자녀양육에 따른 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 할인혜택 참여 업체 확대로 다둥이 행복카드 효용성 증가 자녀
- 할인혜택, 참여가정, 참여업체 확대로 서울시 엔젤산업 활성화

### 4. 소요예산 : 비예산

## 보행자동행 유아 대중교통 요금 면제 확대

### 1. 현황 및 실태

-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를 분석한 조사에서 가족공동비용(가구의 전체 지출액을 가구원수로 균등하게 나눈 비용인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등)에서 교통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4〉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 가족공동비용 중 개인 자녀 몫

(단위: 명, 만원)

	분석아동수	주거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 출	전체
전체	11,496	5.5	1.3	2.6	11.2	20.4	41.0
0-2세	1,347	4.8	1.5	2.2	10.0	19.0	37.5
3-5세	1,227	4.6	1.4	2.4	9.7	18.7	36.8
6-11세	3,176	4.7	1.2	2.4	9.8	18.3	36.4
12-14세	1,791	5.1	1.3	2.5	10.8	19.4	39.1
15-17세	1,778	5.7	1.3	2.6	12.0	20.8	42.4
18세이상	2,177	7.7	1.4	3.3	14.4	25.8	52.6

자료: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통통신비 지출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익도 제고 노력 필요

- 서울시는 대도시로서 대중교통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성인 혼자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요금 계산 등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이용요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어린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통통신비 지출도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편익도 제고할 수 있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다자녀가구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하여 다자녀가구의 부모-자녀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
- 다자녀가구의 교통편의 증진을 통하여 출산장려적 사회분위기 조성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지하철과 버스 이용 시 성인 1인당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3인까지 무임 승차
- 추진상황: 2006년 11월 1일부터 지하철, 버스에 적용하여 '09년 기준 일평균 약 21천명 혜택

### □ 기대효과

- 다자녀가구 부모·동반 어린이 교통 편의 증진
- 다자녀 가구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보행자동행 유아 대중교통 요금 면제(운영기관 수입감소분 재정지원 형태 보조)	17,500	3,500	3,500	3,500	3,500	3,500



## 세자녀 가족 아동수당 지급

### 1. 현황 및 실태

- 현재 서울시 가구의 평균 영유아 보육비는 0세의 경우 383천원으로 타 연령보다 높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비는 감소하고 있음

〈표 15〉 평균 영유아 보육비

(단위: 천원)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총비용	383	337	278	191	172	155

자료: 보건복지부(2010)

-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영유아 보육비는 3배로 많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속적 추진
  -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 경감을 추진하고 자녀 양육방식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여 재가/기관 이용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음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대상연령: 0세~만5세(72개월) 셋째 자녀

- 지원방법: 보육료 전액지원 또는 양육수당 중 선택
- 지원액: 매월 기준보육료 전액 또는 양육수당 20만원

□ 기대효과

-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울시에서 다자녀 가구를 양육할 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셋째아 보육료 전액 지원	소득하위 500이하가구	소득하위 600이하가구	소득하위 700이하	전체	
양육수당지급 (정액 20만원)	소득하위 500이하가구	소득하위 600이하가구	소득하위 700이하	전체	

□ 연차별 예산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셋째자녀 아동수당	419,720	75,944	79,944	83,944	87,944	91,944

## 다자녀가정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 1. 현황 및 실태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자료에서 서울시민 중 학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담스럽다(80.4%), 매우 부담스럽다(40.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부담스럽다 79.8%, 매우 부담스럽다 39.8%)보다 높아 서울시민이 교육비에 대해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또한 교육비 부담 요인에 대해 학교납입금 20.15, 보충교육비 77.5%, 교재비 0.4%, 하숙·자취·기숙사비 1.5%, 기타 0.5%로 나타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고 다음으로 학교납입금 부담도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는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의 출생~대학졸업까지의 총비용은 2억6,204만4천원

- 이중 고등학교~대학교에 드는 비용이 1억 966만원 정도로 고등학교~대학교 학비가 매우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음

□ 하이서울장학금 지급

- 현황
  - 장학재원은 SH공사에서 수익금 중 일부를 청소년 장학금으로 기탁
  - 연도별 지원 실적('04~'09년도): 123,322명, 54,140백만원

최근, SH공사 수익성 악화로 서울시로 장학금기탁이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안정적인 장학출연(기탁) 어려움

○ 대상

- 하이서울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기준 120%이하의 자녀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조례 제6조)
- 현재, 법정 차상위계층(60%) 및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자녀(40%) 6:4의 비율로 장학금 지급중임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지원중임

시 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 「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4인기준 5만원 이하) 자녀에 대하여 학교 교육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지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전액지원) : 63,000명 778억원('10년)

- 현재는 장학금 대책이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비 감소 대책이 비단 영유아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중학교~대학교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임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서울장학재단의 하이서울장학금 다자녀분야 신설을 통해 다자녀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자녀 장학기금 조성
-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을 받도록 하여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
-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둘째 자녀: 입학금, 수업료 50% 감면

- 셋째 이후 자녀: 입학금, 수업료 100% 감면
- 대학교 교육비 지원
  - 둘째 자녀: 입학금, 수업료 10% 감면
  - 셋째 이후 자녀: 입학금, 수업료 20% 감면
  - ※ 서울시립대에서 시범적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입학금 100% 감면, 수업료 20% 감면 시행

#### □ 기대효과

- 다자녀 가구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대학교육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효과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다자녀가정 하이서울 장학금	294,00	3,880	4,880	5,880	6,880	7,880

## 아동인지능력 향상 바우처

### 1. 현황 및 실태

- 취학전 아동인지발달에 대한 조기투자로 국가 인적자본 개발 및 아동기 지적 환경 격차를 개선하여 출발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실시
- 현재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만 2~6세 아동으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1등급 지원액(2만7천원)을 바우처 형태로 받을 수 있음
-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많아 부모가 미처 신경써 주지 못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을 가능케 하고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다자녀 가구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바우처를 이용하여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
  - 가구평균소득 이하 저소득계층에게만 제공하던 바우처를 모든 세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하여 다자녀 가구 부모의 유아기 교육 부담을 완화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세자녀 이상 가구 만 2세~6세 아동
- 서비스 신청: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 신청
- 정부지원: 월 2만원 또는 2만 7천원 전자바우처 10개월간 지원
- 본인부담금: 월 2천원 ~ 2만 8천원(총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본인 부담)
- 서비스 내용: 독후지도사가 주 1회 대상아동에게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는 책 읽어주기와 독후활동을 포함하는 1:1 맞춤형 독서지도서비스(방문 1회당 10~20분), 독서지급(또는 대여), 부모에게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 방법 교육
- 서비스 제공업체 직접 선택

#### □ 기대효과

- 다자녀가구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 다자녀가구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	13,847	11,995	12,665	14,665	16,665	18,665

## 2. 주거비

주거비			
생애 주기	중앙정부 (새로마지 2차 플랜)	서울시 (민선 4기)	서울시 신규 민선 5기
결혼	신혼부부 주택 자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내집마련 기회확대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전세 자금지원
		신혼부부가구 장기 전세주택 우선 공급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확대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장기전세 주택 우선공급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다자녀특별공급비율확대
	다자녀가정주택자금 대출 금리 우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전세 자금지원 :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자녀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임대로 차등화 시행
			월세임대로 주택 바우처 지급



## 2-1. 세부내용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1	[중앙]신혼부부 주택 자금 지원	신혼부부	- 주택 자금 지원
2	[민선4기]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
3	[민선5기]신혼부부 내집 마련기회확대 : 주택구입자금 지원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국민주택자금 지원을 시중 금리보다 50% 감면 - 주택구입자금의 50%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4	[민선5기]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전세 자금지원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 전세자금지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주택전세자금의 70% 범위 내, 최고 5천만원 대출, 금리 2%, 15년 상환, 18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차등화(둘째자녀부터 3년씩 상환 기간 연장 가능)
5	[민선5기]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기존주택 전세 임대지원 확대(기존)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6	[민선4기]신혼부부가구 장기 전세주택 우선 공급	신혼부부	장기 전세주택 우선(특별)공급
7	[중앙]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 주택 특별공급
8	[민선4기]다자녀 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다자녀 가구	- 장기전세 주택 우선공급
9	[민선5기]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비율확대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공급물량의 20%범위내에서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우선 입주
10	[중앙]다자녀가정주택자금 대출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 주택자금 대출 금리 우대
11	[민선4기]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 금리 우대	다자녀가구	- 주택자금 대출 금리 우대(금리 4.7%)
12	[민선4기]다자녀가구 전세 자금대출 지원	다자녀가구	- 전세자금대출: 8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자에 보증금 70%, 연리 2%, 15년 상환
13	[민선5기]자녀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임대료 차등할인	두 자녀 이상 가구	자녀수에 따라 국민 임대 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행 - 미성년 두 자녀이상인 국민임대주택입주 가구 중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50%이하(소득1-2분위가구)인 가구 - 둘째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를 할인 경감
14	[민선5기]월세임대료 주택 바우처 지급	두 자녀 이상의 월세 가구	- 매달 월세 임대료를 지출하는 가구에 상한 범위 내에서 매달 월세의 20~30% 감면 금액을 주택 바우처로 지급 - 월평균소득의 150%이내인 월세 형태: 보증부 월세 및 월세가구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두 자녀 이상가구

## 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주택구입 자금 지원

### 1. 현황 및 실태

#### □ 서울시의 주택 구입 여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결혼 후 내집 마련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점차 길어져 2006년 8.3년에서 2009년 9.7년에 이르고 있음
- 주택구입 비용을 판단할 수 있는 연소득대비 주택가격(PIR)도 2009년 전국 7.7배에 비하여 서울은 8.9배에 이르고 있어 전국에서 주택마련이 가장 어려운 지역임

〈표 16〉 내집 마련 소요기간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결혼 후 내집까지 마련기간 (년)	전국	8.0	7.7	7.2	6.8	7.4	7.0	6.7	6.8	7.7	8.2	9.4	9.0	9.4
	서울	-	-	-	-	-	-	-	-	-	8.3	9.0	9.2	9.7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배)	전국	4.6	4.2	4.6	5.0	4.6	5.5	6.2	5.5	5.6	6.4	6.6	7.6	7.7
	서울	6.3	6.7	6.7	7.9	7.5	6.4	8.9	7.2	8.0	8.9	9.8	10.5	8.9

자료: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각 연도

- 내집 마련까지의 이사 횟수도 서울은 전국 수준에 비하여 이사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내집 마련 연령도 전국 평균 36.4세에 비해 높은 37세로 나타남.

〈표 17〉 내집 마련 평균 연령 및 내집 마련까지의 이사 횟수

구분	지역	2007	2008	2009
내집 마련까지의 이사횟수(회)	서울	5.6	4.8	5.1
	6대 광역시	5.0	4.5	4.7
	전국	5.1	4.6	4.8
내집 마련 평균 연령(세)	서울	35.8	36.3	37.0
	6대 광역시	36.7	36.2	36.1
	전국	36.0	36.2	36.4

자료: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각 연도

## □ 신혼부부 가구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 이러한 주택구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민선 5기 저출산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신혼부부 가구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 자금 지원 조건도 차등화 함으로써 자녀 출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자녀수에 따른 주택구입 자금 상환조건 차등화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녀가 1명 이상 또는 임신 중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고 장기 상환하게 함으로써 주택 구매력을 지원
- 자녀수에 따라 주택구입 자금 상환 조건을 차등화하여 2인 이상 자녀 출산을 유도. 이는 신혼 새둥지 프로그램에서 제안(2010.4.21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강화한 것으로 자녀수에 따라 구입 자금 조건을 차등화한 것임

### □ 추진 방법

-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을 통하여 추진

### □ 2011-14년간 추진 방향

- 국토해양부의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하여 2011년부터 적용토록 함

### 3. 세부 추진과제

#### □ 사업대상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녀가 1명 이상 또는 임신 중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중·저소득층) 가구

#### □ 사업내용

-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시중 금리보다 50% 감면, 최장 20년 상환하는 것으로 기본 조건으로 하되, 둘째 자녀 출산 시부터 이후 자녀 출산 때마다 3년씩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대출금액: 주택구입 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 기대효과

- 가족형성기에서 조기 내 집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이사 걱정 없고 월세 부담 없는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녀 출산의 저해 요인을 최소화시킴
- 서울시의 낮은 자가점유율 44.3%(2005년 센서스 기준)를 감안할 때, 내 집 마련 비율 제고로 안정적 주거 생활 유도 및 이를 저출산 가족 문제와 연결하여 지원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출산률 제고 효과가 기대

##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를 위한 전세 자금지원

### 1. 현황 및 실태

#### □ 서울시의 전세가격은 2009년 초 부터 계속 상승세

- 서울시 전세가격은 2008년 대비 2010년 9월 현재 11.1%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년 전국의 전세가격 상승률 8.8%에 비하여 높음. 특히 2008년 전세가 감소세에 비하여 2009년 전세가의 지속적인 증가는 새로이 가정을 형성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전세는 주택구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경제적 점유형태로 계속 선호되고 있으나,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해 전세가 지속 상승. 서울 지역 신규 임대차 구성비를 보면, 2007년~2009년 전세 계약 비중이 57%~59%에서 2010년 중반부터는 55%~56% 수준으로 하락, 반면 보증부 월세 비중은 40%~42% 수준에 이름

####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지원실적 미흡

-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전세 지원책으로는 신혼부부들에게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 자체 시행은 하지 않고 LH가 지난 2년간 서울에 910호를 지원.
- 전세난이 가장 심한 서울의 경우 LH 지원 실적도 전국 대비 16.8%에 불과함

〈표 18〉 LH 공사의 신혼부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실적

(단위 : 호)

구분	계	2008	2009
서울	910	76	834
전국	5,445	185	5,260

자료: 국토해양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 실적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전세제도 지원책 강구

- 전세는 2년 동안 목돈을 맡겼다가 되찾는 형태여서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전세 지원 형태는 중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국민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을 확대 지원함
- 중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은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 및 서울시 주택기금에서 지원 확대하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서울시 SH 공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물량 확보하여 지원함

### □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의 2011-14년간 추진 방향

- 지원대상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총소득 50% 범위 내 신혼부부 가구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세대주로 자녀가 1명 이상 또는 임신 중인 부부) 및 맞벌이 가구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70% 범위 내)
- 지원 규모: SH 공사 지원 기존 주택 전세임대 500가구 지원

	2011-14	2011	2012	2013	2014
지원 가구	100	100	100	150	150

## 3. 세부 추진과제

### □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전세자금 지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총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 사업내용: 주택전세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 시중금리보다 낮은 2%,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형태와 마찬가지로 18세 이하 자녀수의 자녀수에 따라 차등화 (둘째 자녀부터 3년씩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 신혼부부 및 맞벌이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확대

- 사업대상: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총소득 50%이하 가구,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총소득 70%이하가구로 미성년 두자녀 이상 가구
- 사업내용: 기존 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 시 자녀수에 따라 우선 입주.

###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비율 확대

- 사업대상: 서울시민으로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 사업내용: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85㎡이하)에 대하여 공급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 우선 입주

### □ 기대효과

- 전세자금의 안정적 조달로 주거 불안이 크게 해소되며, 이는 자녀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
- 기존 주택 전세임대 방식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영구임대주택 수준임을 감안할 때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및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입주는 임대료 부담을 현재 수준에서 50%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
- 기존 주택 전세임대 방식의 경우 입주 전에 비하여 임대료가 50% 실제 절감됨.

〈표 19〉 기존주택 전세임대 방식 도입시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비율 완화도(2009년말 기준)

구분	유형	이전 주택	현주택	변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	국민임대주택	23.8%	17.5%	1.4배 감소
	다가구 매입임대	27.4%	11.7%	2.3배 감소
	전세임대	27.6%	14.1%	2.0배 감소

자료: LH, 2009,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 실태 조사

LH 토지주택연구원, 2009,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성 효과 제고 방안

## 자녀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할인

### 1. 현황 및 실태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다자녀 입주율 미흡

-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총소득 70% 이하(소득 4분위)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 및 자동차 자산 기준에 적합한 자가 입주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저출산 지원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2010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약 26만 가구 중 다자녀 입주율은 2.4% 수준임(자료: LH 토지주택연구원(201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파악 방법 연구)

#### □ 입주자간 임대료 부담 형평성 문제제기

- 반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 범위가 소득1분위에서 소득4분위까지 편차가 큼에도 임대료 기준은 단일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입주자간 임대료 부담의 형평성 시비가 많음

〈표 2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계층에 따른 임대료 부담 비중(%) 추이

소득 구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실태 조사 결과 RIR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득 1~4분위 평균	17.7	20.9	21.7	23.8	21.4
소득 1분위	35.4	47.3	48.7	56.1	36.1
소득 2분위	19.0	22.4	24.4	23.8	20.0
소득 3분위	14.7	16.3	17.4	15.6	15.4
소득 4분위	13.0	14.2	14.0	13.1	13.2

자료: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각년도

- 이에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 소득 1~2분위 두자녀 이상 가구 임대료 부담경감 유도 필요

-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계층 중 임대료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1~2분위 계층에 해당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를 할인하여 줌으로써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는 것이 자녀 출산 유도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임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두자녀 이상 출산 유도 및 임대료 부담 경감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두 자녀 이상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가 해당)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를 10%씩 차등 할인하여 줌으로써 자녀 출산 유도 및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

### □ 추진 방향

- 서울시 SH 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 단 임대료가 할인되는 부분은 환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환보증금으로 예치 혹은 SH 공사가 보유 후 지원대상자가 되거나 지급토록 함(할인되는 임대보증금이 타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유의)
- 임대료 할인은 임대보증금 및 월세 부분에 각각 10%씩 감면 혜택하며, 둘째 자녀가 10%씩 감면하여 자녀수에 따라 20%, 30%씩 감면 지원함

## 3. 세부 추진과제

### □ 자녀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행

- 사업대상: 미성년 두자녀 이상인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 중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50%이하(소득 1-2분위 가구)인 가구
- 사업내용: 둘째 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를 할인 경감

## □ 기대효과

-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장기 안정적 주거 기반 속에서 저소득층들이 둘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 소득 1분위 계층의 임대료 부담비율이 현 수준보다 30%이상 감면 효과

## 월세임대로 주택바우처 지원

### 1. 현황 및 실태

#### □ 월세가구 지원책 필요

- 현재 출산 및 임신 장려 정책은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지원, 장기전세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집중되어 있지만, 서울시내 실제 이용 가능한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수혜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중저소득 임차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 서울시 중저소득 임차가구의 차가 점유형태를 보면, 전세가 41.3%로 가장 많으나 보증부 월세 및 월세가구 비중이 47.9%에 이르러 전세 가구 비중보다 높음 (토지주택연구원 2010년 2월 조사 결과: 표 참조)

〈표 21〉 서울시 중저소득 무주택 임차가구의 생애주기별 현주택 차가 유형

(단위:%)

구 분	차가 유형	결혼준비기	신혼기	자녀양육기	자녀성장기	자녀독립기	은퇴준비기	중저소득 전체
서울 (N=2,000)	전세	21.9	19.1	45.6	71.8	55.6	52.7	41.3
	보증부 월세	41.3	8.7	5.7	10.5	13.8	10.9	13.8
	월세	24.4	60.7	39.5	11.3	19.8	20.9	34.1
	기타	12.4	11.5	9.2	6.4	10.8	15.5	1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N=10,000)	전세	24.5	39.4	61.2	81.6	55.5	52.8	53.9
	보증부 월세	36.7	7.9	8.4	9.5	10.2	8.9	11.5
	월세	21.8	41.7	22.3	5.5	18.8	19.5	23.1
	기타	17.0	11.0	8.1	3.4	15.5	18.8	1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0년 전국 1만 중저소득가구(소득 5분위이하) 주거실태 조사 결과

## □ 서울시 및 신혼기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 높음

- 특히 월세 가구의 경우, 신혼기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이 타 생애주기에 비하여 매우 높은 47.2%를 차지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두 자녀 이상 중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 제도는 출산 유도 및 안정적 주거생활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
- 서울시 월세 가구의 임대료 부담률은 전국 26.6%에 비하여 높은 36.7%이며, 생애주기별로 볼 때 서울시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비율이 가장 높음

〈표 22〉 서울시 중저소득 무주택 임차가구의 생애주기별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RIR)

(단위:%)

차가유형	결혼준비기	신혼기	자녀양육기	자녀성장기	자녀독립기	은퇴준비기	중저소득 전체 가구
전세	34.6	36.5	32.2	36.1	29.0	44.2	34.4
월세	26.5	47.2	38.0	30.4	52.4	42.4	42.6
보증부 월세	31.0	30.2	23.7	19.8	25.8	31.3	28.4
서울시 평균	31.7	42.2	35.2	33.5	33.8	41.6	36.7
전국 평균	24.9	29.1	24.9	25.4	26.2	30.3	26.6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0년 전국 1만 중저소득가구(소득 5분위이하) 주거실태 조사 결과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두자녀 이상 중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 매달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두자녀 이상 중·저소득 임차가구 중 서울시가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매달 월세 지출의 20%~30%를 지원
- 서울시 중저소득 임차가구의 평균 월세는 30~35만원 수준이므로, 월세 지원금은 월 6만원~10만원 수준임

### □ 지원방식

- 지원금이 임대료 지출 전용으로 쓰일 수 있게끔 주택바우처(쿠폰) 형태로 지급

## □ 2011-14년간 추진 방향 및 규모

○ 2011-2014년간 총 500가구를 지원

	2011-14	2011	2012	2013	2013
지원 가구	500	100	100	150	150

## 3. 세부 추진과제

### □ 사업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인 월세 형태(보증부 월세 및 월세 가구)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두 자녀 이상 가구(두 자녀 기준은 신청 시점 둘째 자녀 임신 중인 가구까지를 포함)

### □ 사업내용

○ 월세로 매달 임대료를 지출하는 가구에 대하여 서울시가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매달 월세의 20~30% 감면 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주택바우처(쿠폰)으로 지급  
○ 주택바우처 전달 체계: 서울시가 매달 발행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대상자가 수령하는 방식

### □ 기대효과

○ 전세 가구와의 형평적 지원을 통하여 유사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월세 가구를 지원  
○ 현재 월세 가구의 높은 임대료 부담 비율 42.6%가 3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무주택 중저소득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유도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

### 3. 의료비

의료비			
생애 주기	중앙정부 (새로마지 2015)	서울시 (민선 4기)	서울시 신규 (민선 5기)
결혼			
임산 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시행)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서울맘카드 발급(미시행)	
영 유 아	민간시설 접종비지원수준 확대	국가예방 접종사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튼튼썩썩카드)바우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영유아건강검진(의료급여)실시	

### 3-1. 세부사항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2	[중양]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 체외수정 지원비를 현 1회 15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맞벌이 난임부부, 낮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산정
3	[민선4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만 44세 이하 여성)	- 전국가구 평균 150% 이하로 체외수정시술비 50%, 3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시술비, 5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 확대(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하여 수혜 확대)
5	[민선5기]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강화)	-난임부부	- 체외수정시술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확대(기존 평균시술비 50%지원) - 인공수정시술비 4회까지 확대(기존 3회 지원)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 확대(부부중 소득이 낮은 50%를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여 수혜확대)
4	[민선4기]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미시행)	- 불임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 1회 시술비 150만원 이내(원하는 경우 최대3회 지원)
6	[중양]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산모	- 모든 임신부에게 산전 진찰 등 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
7	[민선4기]서울맘카드 발급	- 산모	- 서울맘 카드 발급 - 임신 시 100만원 지원(임신진료비 30만원, 출산의료비 30만원, 출산용품구입 40만원)
8	[중양]민간시설 접종비지원수준 확대	- 만 12세 이하 영아 아동	- 민간시설 접종비(8종)지원수준 단계적 확대
9	[민선4기]국가예방접종사업	- 영유아	- 서울시 국가필수예방접종 76.9%(연인원 2,036,574명 중 1,566,750명) - 국가필수예방접종 B형간염등 14종 예방접종실시 - 보건소 및 민가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후 SMS로 접종내역 알림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운영
10	[민선5기]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튼튼썩썩카드)(바우처)	- 영유아	- 서울시-병원협회, 의사협회 제휴를 통한 의료수가 조절(1회 접종 시 10,000원~15,000원) - 필수예방접종과 비필수예방접종 백신 회사제휴-출산장려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 무료예방접종 알리미사업과 연계접종카드(바우처) 발행
11	[민선4기]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최고지원금 범위내에서 각각지원
12	[민선4기]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전원	- 검사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될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200%이하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13	[민선4기]영유아 건강검진(의료급여)실시	-만 6세미만 영유아	-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건강검진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중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우식증 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 1. 현황 및 실태

- 만혼에 의한 고령임신 등 고위험 임신 및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부족
  - 서울시 혼인연령: 여성 '90년 25.5세→'08년 29.3세, 남성 '90년 25.5세→'08년 29.3세
  - 서울시 첫 자녀출산연령: 여성(모 기준) '95년 27.03세→'08년 30.46세(통계청)
  - 불임진단 후 26.6%가 비용부담으로 치료포기, 83.2%가 심각한 경제부담 호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

### 2. 목표 및 추진방향

- 노산에도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서울시에서 마련함

### 3. 세부 추진과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 사업대상: 전국가구 평균 150%이하(2인 4,807,690원), 만44세 유배우자
    - 기혼여성의 난임율은 13.5%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중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비를 2010년 150만원에서 2011년 200만원, 2012년 250만원까지 확대
  -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비: 평균시술비의 50%(1회 150만원, 기초수급자의 경우 27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를 지원하였으나 이를 300만원까지 확대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하였으나 이를 4회까지 지원 확대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 확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하여 수혜확대
- 사업추진체계: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대상자 선정, 의료기관추천

□ 기대효과

- 서울시 불임부부가 출산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출산율하락예방

#### 4. 연도별(2011-201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추진부서, 특이사항 등

구분	2011	2012	2013	2014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확대 (국비 30%, 시비 35%, 자치구비 35%)	11,175백만원	16,946	16,946	16,946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튼튼 쓱쓱 카드」 바우처

### 1. 현황 및 실태

#### □ 영유아 건강을 위한 높은 부모 부담

-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8종, 22회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민간병의원은 30%만 지원함.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부모 부담임.
- 신생아에서 2세까지 이뤄지는 기초예방접종률은 90% 이상이지만,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은 59.5%에 불과함.
- 현재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한 전염병 예방 접종시 약 49만원 정도가 들어감. 필수 예방접종 외의 비필수예방접종 비용도 상당한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A형 간염, 뇌수막염 등 기타 예방접종시 125만원이 들어감.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목표

- 필수예방접종 8종 22회 접종 무료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과 정상적 발달 환경 제공함.
  - ※ 8종 백신: B형간염, 결핵(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자녀양육비용 중 의료비 부담 경감

#### □ 추진방향

- 영유아 건강권에 대한 예방적, 보편적 접근
-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 무료접종 카드발급

- 보건소 이외 병원과 협약을 통한 의료수가 최소화

□ 정책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12세 미만 아동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세부추진과제

- 서울시-병원협회, 의사협회 제휴를 통한 의료수가 조절(1회 접종시 10,000원~15,000원)
- 필수 예방접종과 비필수 예방접종 백신 회사 제휴-출산장려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 무료 예방 접종 알리미 사업과 연계 접종 카드(바우처) 발행: 예방접종 날짜 인지와 중복 접종 방지

□ 기대효과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 자녀양육에 따른 의료비 부모 부담 절감
- 후천적 장애 예방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추진 부서: 서울시 보건정책주무부서 및 각 구청 보건소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예방접종 관행수가 조사	서울시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서울시 예방접종 위탁 단가 협약 체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협약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백신 제약회사 협약	녹십자 등 협약				
영유아 부모 예방접종 카드발행과 알리미서비스 홍보 및 실시		예방접종 카드발행 홍보 및 교육			

결혼부터 양육까지 필요한 지원을 늘리면 아이가 태어난다!

정책영역 : PART

# II

지원확대



정책 영역	지원확대		
	중앙정부 (새로마지 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생애 주기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		Reproductive health care check-up
	학생부부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저소득층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임 신 · 출 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임산·출산지원 Total care system 인프라 구축
	분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인프라 지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산부인과 건강보험 수가 개선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영 · 유 아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센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운영)실시	보육품질관리센터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 구축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맞벌이 부부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바우처 및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마련	시간연장형 보육활성화	
		영유아플라자 설치	영유아플라자 확충
		서울 키즈센터 건립	
		병아영유아 일시보육 지원사업	
		역세권 영유아 돌보미 센터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정책 영역	지원확대		
	중앙정부 (새로마지 2015)	서울시 (민선4기)	서울시 (민선5기)
생애 주기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사업추진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발달지원계좌추진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추진		지역사회 방과후 서비스 확대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 및 지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민간 돌봄 서비스 시장 창출 위한 인프라 구축		
영· 유아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확충 및 내실화	
	아동학대 예방 보호 체계 강화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강화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아동, 청소년 생활 안전 강화		가정사고 예방사업 (safe house start)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조성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위기청소년 서비스 제공 위한 인프라 확충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드림스타트 사업(아동보호 통합서비스)	빈곤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위기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두드림존(토털자활지원서비스 체계) 확대, 보급		
			자립지원 강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동행(동생행복도우미)프로젝트	
	스스로 공부하기(자기주도학습)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 지원확대 세부내용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1	[중앙]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 예비역 편입혜택 부여	- 현역병 (배우자 출산)	- 현역병으로 복무 중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가능
2	[중앙]학생부부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 대학별 기혼학생	- 신규 기숙사 건립시 기혼자실(수용규모 5%수준)우선 설치 유도
3	[중앙]저소득층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 기혼자	- 국가 근로장학사업 대상 선정시 기혼자에게 우선부여 -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국가장학제도 신설시, 수혜가능 인원수가 정해진 장학금의 경우 기혼자에게 우선부여
4	[중앙]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일반인	- 결혼준비, 건강한 가정생활 등 결혼과 관련된 종합정보제공 - 지자체, 지역기관, 기업등과 임신출산육아체험 등 결혼준비 프로그램 도입 운영 - 기초교양센터를 구축하고, 결혼관련 교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유도
5	[중앙]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 일반인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족문제 유형별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6	[민선5기] Reproductive health care check-up	- 20세~39세 이하의 여성	- 생식보건 건강검진의 의무화 - 20대 초, 후반, 30대 초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7	[중앙]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강화	- 산모	- 서비스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및 여성인력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 - 수요예측을 위한 실태조사 및 서비스 - 교육과정 재개편을 통한 전문성확보 및 원활한 도우미 확보
8	[민선4기]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산모도우미 파견(1명, 12일, 쌍생아 18일간) - 바우처 제도활용
9	[민선5기]임산·출산지원 Total care system구축	- 산모, 신생아, 영유아	- 임신출산 Total care system인프라 구축 - 산모도우미 지원확대(현 소득수준 50%이하에서 소득수준 100%까지 확대)
10	[중앙]분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 분만취약지역	- 관내 분만을, 의료기관 접근성, 취약지 가임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만취약지 선정 - 분만취약지 유형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 고위험 분만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마련
11	[중앙]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지원 지속 추진
12	[중앙]산부인과건강보험 수가 개선		- 산부인과 분만실 유지를 위한 자연분만수 인상 - 임신유지를 위한 의학적 전문교육상담 수가 등 수가신설 검토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13	[중앙]모상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산모 어린이 건강수첩 배부 및 철분제 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	- 산모·어린이 건강수첩 배부 및 철분제 지원(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민선4기]임산부 철분제 지원	-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보건소 방문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임신성 빈혈이 확인된 임산부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조기지원 가능 (임신4개월부터 지원 가능)
	[민선4기]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임산부, 영유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영양 의학적 스크리닝 및 고위험군 영양평가관리 - 단체영양교육, 개인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식품관리교육 등 실시 - 대상자별 6종 식품패키지 공급 - 서울형으로 자비부담금 지원 및 대상자 확대
	[중앙]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자 (둘째이상 출산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1인당 평균 연 260천원
14	[중앙]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 임산부	- 임신 중, 수유 중 노출된 약물, 방사선, 흡연 등 위험물질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 임신초기 노출되는 다빈도 약물 등에 대한 DB 구축연구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민선5기]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센터	- 임산부, 영유아	- 각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센터 설치 - 서울 공동의 영유아 건강발달센터 서비스 매뉴얼 개발 - 지역내 영유아관련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중앙]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공급률이 낮은 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 - 민간시설 매입, 폐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 의무설치 보육시설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 활용
	[민선4기]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15개소	- 폐지되는 동청사 활용 보육시설 설치 - 종교단체운영 보육시설의 국공립시설 전환 - 재개발, 뉴타운지역 등 공동주택 국공립시설 설치
	[민선5기]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현 11%에서 15%로 추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은 직접설치, 기존공공기관 활용, 기업등의 후원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전개 -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및 적용
	[중앙]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 평가인증지표고도화, 운영체계합리화 등으로 보육시설 질적수준 향상 유도 - 평가인증결과 공개방안 마련 - 인증참여, 유지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공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도입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민선4기]서울형 어린이집 인 증제(운영)	- 민간보육시설	- 일정한 기준을 갖춘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 집으로 공인하고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지 원과 운영기준 적용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민선4기]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	- 민간보육시설	-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보육실환경개선, 건강 및 안전시설 설치, 교육 기자재 보강)
	[민선4기]보육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	- 종사자 처우수당 지원 및 대체교사 지원
	[민선4기]보육시설 상시평가체 제 구축		-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분야별 보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제도 개선 및 평가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조치
	[민선5기]보육품질관리센터		- 보육서비스 질적제고를 위한 보육품질관리센터 설립 - 보육품질관리센터는 연구기획팀, 평가인증팀, 교육연수팀, 정보관리팀 등 4개의 팀과 서울형 공인 심의위원회로 구성됨
	[중앙]사립유치원 평가내실화		- 2주기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유치원 선 택권을 보장하고 재정지원과 연계 - 우수사례는 적극발굴하여 교원연수 및 일반화 자료로 활용
	[중앙]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 춤형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연 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다 양화 - 유치원 종일반 '12년까지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 -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우선보육이 시급한 가 정에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 우선권 부여추진
	[중앙]시간제 보육바우처 및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 바우처를 가구의 보육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 고, 맞벌이 가정, 장애아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보육시간을 차등화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 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민선4기]시간연장형 보육활성화		- 시간연장보육시설 신규지정, 휴일보육시설 신 규지정 - 교사인건비 지원
	[민선4기]영유아플라자 설치		-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하여 육아카페, 북스타트, 체험학습, 장남감대어, 상 담기능 수행
	[민선5기]영유아플라자 확충		- 각 자기구별 1개씩의 영유아플라자 설치 - 영유아플라자와 지역내 유아관련기관과의 연계 성 강화 - 영유아플라자를 통한 부모와 가족에게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민선4기]서울키즈센터 건립		- 부모와 함께 놀면서 배우는 체험놀이 위주의 테마파크 조성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민선5기]병아영유아 일시보육 지원사업	- 일시적 병아영유아	- 병아보육을 위한 거점 기관 인프라 구축 -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사업 중 병아보육서비스 기능강화와 연계추진 - 지역내 보육시설, 유치원 등과의 연계
	[민선5기]역세권 영유아 돌보미 센터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부담없이 맡길수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에 영유아 돌보미센터 마련
	[중앙]이웃간 돌봄나눔 사업활성화(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전국건강가중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품앗이'그룹을 구성하여 자녀돌봄에대한 품 나눔과 이웃간 연계 활성화 - 지역사회 유휴시설 등을 활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여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중앙]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시간제 돌봄지원확충 - 영아 종일제 돌봄지원 확대
	[민선4기]아이돌보미사업추진		-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
	[중앙]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활성화		- 가정내 돌봄서비스 자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돌봄인력 교육지원 - 가정내 파견 돌봄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사고 공제제도 도입
	[민선5기]가정방문서비스		- 가정방문가들이 임신중 혹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들의 태도, 지식, 행동상의 변화를 통해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 서비스패키지(보편적 조기진단서비스,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역량강화 필요가정 방문서비스)를 대상가정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선택
	[민선4기]아동발달지원계좌추진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0세~만 17세)	- 보호아동이 후원금에서 월 3만원 내로 적립하면 국가가 1:1매칭펀드로 3만원 내에서 지원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중앙]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 유망사회서비스로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모델을 마련, 지자체 사업개발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직접연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매칭 시스템 구축
	[민선5기]지역사회 방과후 서비스 확대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일돌봄사업간의 연계와 통합 - 지역아동센터 질관리를 위해서 '인증체제'와 '성과관리체제'도입 - 방과후 서비스 기관 확충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방과후프로그램의 허브기능 담당 추진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중앙]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직지원 확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수요를 감안,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li> <li>-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속확대</li> <li>- 학교여건, 지역특성고려 "초등돌봄교실"확대</li> <li>- 학생교육의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지원을 위해 예술강사 파견확대 및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li> </ul>
	[민선4기]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 및 지원	- 초등 4~6학년 중등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보호,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li> <li>- 월~토, 1일 5시간</li> </ul>
	[민선4기]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 자치구 청소년 독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독서실 설치 운영</li> <li>-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비중 시비와 구비 50%씩 지원하고 공부방 규모등을 고려 차등지원</li> </ul>
	[중앙]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킹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멘티풀구성확대</li> <li>- 멘토-멘티 연계활성화 및 기술지원</li> </ul>
	[중앙]민간돌봄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기업육성, 보습학원 전환, 소규모 가정돌봄 등 민간돌봄서비스 시장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li> <li>-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유휴인력활용, 돌보미 자격인증제, 등록제를 통해 인력수급조절</li> <li>- 운영자 자격인증, 이용료 한도, 설치기준 등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법적근거마련</li> </ul>
	[민선4기]지역아동센터, 지역 아동복지센터 확충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여건 및 수요를 감안 연차별 시설확충</li> <li>- 기존 양육시설의 유휴공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설치 운영</li> <li>- 방과후 아동의 학습지도, 예체능교육, 상담 등 아동복지서비스제공</li> </ul>
	[중앙]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예방인프라 강화</li> <li>- 대상자별 집중적 홍보 및 교육강화</li> <li>-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대책 추진</li> <li>- 아동학대예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li> </ul>
	[민선4기]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시행</li> <li>- 각급학교와 연계하여 부모대상 예방교육</li> <li>-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24시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응급조치</li> <li>- 아동학대 예방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역점</li> </ul>
	[민선5기]아동학대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아동보호체계구축</li> <li>-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li> <li>- 방임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전체 위탁사업 실행</li> </ul>
	[중앙]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강화</li> <li>-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예방사업 지속추진</li> <li>-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li> <li>-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li> </ul>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중양]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생활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민선5기]가정사고 예방사업 (Safe house start)		-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보급 확대 - 부모대상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
	[민선4기]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아동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안전글쓰기, 안전체험교실운영, 어린이안전체험박람회, 안전강사뱅크제, 안전협의회 지원)
	[중양]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초등학교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 추진 -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지원체계 구축 -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강화
	[중양]성범죄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민선4기]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 스쿨존을 중심으로 CCTV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구역에 총 480대의 CCTV를 설치
	[민선5기]성범죄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확산
	[중양]위기청소년 서비스 제공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실시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민선5기]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중심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청소년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보강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확대 및 기능보강
	[중양]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위기아동보호강화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전국 207개 지역에 1개소씩 거점지역을 설치, 이후 확대)
	[민선4기]드림스타트 사업	- 0세~만2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 복지, 교육, 보건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민선5기]빈곤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드림스타트센터는 시군구 주관으로 설치 운영
	[민선5기]아동청소년 종합적 발달 지원		-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바우처 서비스 확대 -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중양]위기 아동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아동복지법에 자산형성지원(CDA, 디딤씨앗통장)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
	[중양]두드림존(토탈자활지원 서비스 체계) 확대, 보급		- 자립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 두드림존 확대하고, 매뉴얼 수시운영
	[민선5기] 자립지원 강화		- 전문직업경로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지식직업경로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조기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한 예방체계 강화
	[민선4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 25개 자치구의 위기 청소년	- 찾아가는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실시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18개 청소년지원센터에 청소년동반자 배정 운영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민선4기] 동행(동생행복도우미)프로젝트		- 대학, 각급학교 등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홍보를 통해 보아자 및 수혜자 수의 양적도모증가
	[민선4기] 스스로 공부하기(자기주도학습)지원		- 학생대상 자기주도학습관련 방과후 프로그램 - 학부모대상 “자녀학습도와주기” 프로그램 - 교사대상 외부특강지원
	[민선4기]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 이중언어교실 운영

## Reproductive health care check-up

### 1. 현황 및 실태

#### □ 20-30대의 낮은 건강검진율

-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실태 및 의식조사(인구보건복지협회, 2006)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중인 만 20-39세의 기혼 여성 중 전체의 50.1%만이 2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음
- 직장인과 대졸이상, 고소득층에서의 검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20-24세의 젊은 여성층, 저소득 계층에서의 검진율은 매우 낮음
- 이때 검진도 일반 건강검진이지 생식보건과 관련한 건강검진이 아님

#### □ 여성과 남성은 생식보건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주로 산전·후 시기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 뿐만 아니라, 남성의 비뇨기과적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부족함. 이 때문에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과 남성은 생식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서울시 주관 하에 지속적인 생식건강증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검진 기회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



### 3. 세부 추진과제

#### □ 사업대상

- 15-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 중 실질적으로 자녀출산을 담당하는 20세-39세 이하의 여성
- 그 중 아직 첫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20대 초반,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각 1회씩 생식보건 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함
- 출산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남성의 노력도 필수적이므로 함께 고려되어야 함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식보건과 관련한 need가 크지 않으므로 추후에 진행하여도 무방할 듯)

#### □ 사업내용

- 서울시 주관 하에 20세-39세 이하 여성의 생식 보건 건강검진을 의무화 함.
- 이 때 일반 건강검진과 동시에 실시할 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 하지만 가능하면 일반 건강검진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은 물론 부인과 검진내용을 추가하여 건강검진을 강화함. 이때 부인과 검진 목록에 내진을 비롯한 자궁경부암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부인과 질환 여부를 확인함
- 20대 초반,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각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인 건강상태 확인은 물론, 본인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질병들(특히,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생식건강을 증진시킴
- 서울시가 지정한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은 후, 전 비용 또는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함. 이후, 서비스 이용률, 만족도, 개선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모든 산부인과로 확대 적용
- 이때 월 소득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 검진을 시행하고 임신부의 정기적인 산전검사 및 기본적인 초음파 검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함
-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 모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 시도 universal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들의 성기능 검사, 전립선염 검사, 정자 검사 등 비뇨기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

-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공공성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

**□ 기대효과**

- 경비 지원 및 홍보에 따른 효과로 현재 50%에 불과한 건강 검진율이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산과관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향후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여성과 남성의 생식 건강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차세대 건강증진이 이루어짐

**4. 연도별(2011-201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추진부서, 특이사항 등**

구분	2011	2012	2013	2014
Reproductive health care check-up	서울시에 거주 중인 20세-39세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연령 및 소득을 고려하여 비용을 차등 지원함			

## 임신·출산지원 Total care system 구축

### 1. 현황 및 실태

#### □ 서울시 낮은 출산장려 프로그램 만족도와 접근성

-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접근성이 낮은 실정.
  -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우수하고 경제적이며 장소와 시설도 쾌적하지만 이용자가 국한되어 있음. 예를들어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의 경우 검진율이 실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40%를 넘지 않음
  - 산모 및 그의 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알지 못함.

#### □ 프로그램과 서비스 공급자의 정책대상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 최근 노산이 증가하면서 미숙아 출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은 물론 이후 영아 및 유아기까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급자(보건소)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Total care 시스템은 이러한 의미에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료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출산장려프로그램의 접근성 향상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Total - care 시스템망을 구축함으로써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개인의 불안함과 부담을 경감.
- 언제 어디서든지, 산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고 자동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system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 3. 세부 추진과제

#### □ 임신·출산지원 total care system 인프라 구축

##### ○ 사업대상

- 임신부 및 산후 18개월 이하의 아이를 가진 여성과 산모납편의 database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 Total-care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대상은 산모, 신생아 및 영유아

##### ○ 사업내용

-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보건소 모자보건 사업을 수요자인 임신부와 영유아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임신부에게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과 산후관리까지 그리고 출산한 영유아에게는 출산 직후 예방접종부터 영양플러스, 영유아 건강검진 등 4세까지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정보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의미함
- 사업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와 그들의 영유아 자녀가 건강검진을 비롯한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의료자원과의 연계까지 시켜주는 것을 사업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사업대상의 database를 구축하여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산모의 시기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알림이 서비스' 실행
- 해당 출산장려프로그램으로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 영유아 영양플러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 임신 및 출산 가구 지원 :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신 및 출산 비용 지원, 임신 축하카드

##### ○ 동작구 보건소 시범사업 추진예정

#### □ 산모도우미 지원(서울시 강화사업)

##### ○ 사업내용

- 현재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에 대해 12일간(쌍생아 18일간)산모도우미 파견, 도우미가격은 단태아 53,500원/1인, 쌍생아 65,556/일이 지원되고 있음
- 사업대상기준을 소득수준 100%까지 확대하도록 함

소득수준	지원액	본인부담	비고
소득수준 50~70%	504	138	
소득수준 70~100%	252	390	

○ 추진방법

- 국고보조 부분은 그대로 두되, 추가사업은 시비: 구비=70:30으로 지원
- 기존 지원대상자는 1주 연장지원 및 본인부담금 전액 시비지원

□ 기대효과

- 출산장려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정책의 신뢰도 구축
  -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산모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지속적인 정보 및 교육을 통한 산모의 높은 질적 관리
  - 임신부터 출산까지 시기적절한 정보 및 교육을 통해 산모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음.
- 향후 출산장려프로그램에 대한 산모의 선호도 파악에 용이
  - Total - care 시스템을 통해 각 시기별 산모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실행해야 할 프로그램 결정에 용이
- 출산 패러다임 변화
  - 그 동안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전적으로 한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보건소 나아가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 경감.

4. 연도별(2011-201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추진부서, 특이사항 등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임산출산지원 total care system 인프라 구축					
산모도우미 지원	4,402	14,742	14,742	14,742	14,742

## 영유아건강·발달지원센터 설치

### 1. 현황 및 실태

#### □ 통합적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 미흡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저출산 정책을 보면, 임신부와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각각의 정책들이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갖거나, 국민들의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보건의료 공공전달체계로 보건소가 있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무료 예방접종 등 영유아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보건소마다 내용이 상이하고, 체계적 접근은 부족한 상황임.
- 서울특별시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양육정책 중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으로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외 지역마다 다양한 영유아 보건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23〉 서울특별시의 임신 및 출산지원정책

구분	사업명	내 용	담당부서
임신 지원	철분제 지급	○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신부 ○ 지원내용 : 분만 전후 철분제 지원 ※ 단, 임신성빈혈 의심되는 임신부는 조기지원가능	건강증진 담당관 6360 -4885 지역보건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 상태에 불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 지원내용 : 1회 시술 150만원이하, 최대 3회(450만원) 지원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시술비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2회(810만원) 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직장인 임신부 토요진료	○ 대상 : 직장인 임신부 ○ 지원내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09:00~13:00)에 임신부 산전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각 자치구마다 일정 다를 수 있음)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 대상 :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중 건강진단(빈혈, 매독, B형간염항체검사), 선천성기형아 검사, 교육 등의 산전·후 관리	

구분	사업명	내 용	담당부서
출산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으로 지역보건소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료 납부로 산정(4인가족 기준)</li> <li>- 직장가입자 50,090원 납부</li> <li>- 지역가입자 48,090원 납부</li> </ul> </li> <li>○ 지원기간 : 2주(12일)</li> <li>○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산모 식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목욕 등)</li> </ul>	건강증진 담당관 6360-4885 지역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출생시 2.5kg 미만이거나 37주이내 분만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li> <li>○ 지원내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로 입원비중 본인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li> </ul> </li> </ul>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출생아 전원</li> <li>○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 이상6종 무료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아로 판명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미만 가정의 환아로 판명시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li> </ul> </li> </ul>	건강증진 담당관 6360-4885 지역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li> <li>○ 지원내용 : 건강검진 총7회 실시 (일반검진5회+구강검진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시기 : 4, 9, 18, 30, 60개월</li> <li>-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검진, 취학전 준비 등)</li> </ul> </li> </ul>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의 임산부 및 만6세미만 영유아</li> <li>○ 지원내용 : 영양의학적 스크리닝 및 고위험군 지속적 영양평가관리, 교육, 상담, 대상자별 6개 식품패키지 공급, 가정방문 식생활 관리</li> </ul>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목표

- 각 지치구별 영유아건강·발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태아부터 영유아까지의 모든 건강, 발달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 □ 추진방향

- 영유아 건강권에 대한 예방적, 보편적 접근
-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들의 체계적 발달, 건강관리
- 기존의 보건소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태아 및 영유아 관련 사업을 특화, 효과적 제공

□ 정책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세부추진과제

- 각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센터 설치(각 자치구 내 간호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 위탁운영실시-지역사회연대)
- 서울시 공동의 영유아건강·발달지원센터 서비스 매뉴얼 개발
- 지역내 영유아관련기관(보육시설, 유치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 건강한 서울, 행복한 양육, 희망 있는 미래 ”

□ 기대효과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 영유아 발달, 건강문제와 관련 부모들의 부담 완화 및 정보 제공



- 영유아 발달, 건강서비스 체계화 및 전달체계 구축
- 질병, 장애 등 조기 발견과 치료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추진 부서: 서울시 보건정책주무부서 및 각 구청 보건소

#####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영유아건강·발달지원센터 모형 개발	모형 개발 (강동사례중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 센터 설치		8개소 (누적 8개소)	8개소 (누적 16개소)	9개소 (누적 25개소)	각 지자체 별 추가 설치
사업 평가					사업 평가

##### □ 연차별 예산

(단위: 천만원)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영유아건강·발달지원센터 모형 개발	3	3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 센터 설치	250		80	80	90	
사업 평가	3					3
계	256	3	80	80	90	3

비고: 운영비는 별도임.

설치비는 서울시 지원 개소당 1억원 기준임.

〈참고〉

강동보건분소; 영유아건강보육지원센터

1.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1)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 대 상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 종 류 : 결핵,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2) 지역사회 주치의와 함께 하는 영유아 건강상담

- 대 상 :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운영기간 : 매월 넷째주 금요일
- 상담시간 : 오전 9:30~12:00
- 참여방법 : 사전예약

3) 주별 산전관리

- 임신 중 산전관리
  - 초기검사(6~10주), 기형아검사(16~18주) : 매주 수요일 오후3시 이전까지 실시
  - 복부초음파(12~30주)
  - 철분제 지원(20주~출산 전)
- 산전·후 우울검사(24주~출산 후 6주)
- 산모·신생아 일산화탄소 동시 측정 : 사전 협의 후 직·간접 흡연으로 부터 노출정도 확인

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지정 의료기관 쿠폰제출 후 무료검사 실시
- 대 상 : 강동구(주민등록상)주소를 둔 가정의 출생아
- 신청기간 : 출생 전·후 한달

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대상 및 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 50%이하의 출산가정
- 신청방법 : 출산 전 6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6) 연계상담

구분	영 유 아	임 산 부
구 강	구강건강교육 /잇솔질 교육	임산부 구강검진
영 양	이유·유아식 교육 /편식교정 올바른 젓가락질 / 소아비만	임산부 및 수유부 식이 / 빈혈예방 식이 / 임신성 당뇨 식이요법 / 산후비만 체중조절 식이
	영양플러스(소득확인) : 보충식품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보 육	발달스크리닝(K-ASQ) 및 보육상담	

## 2. 스마트러브 보육상담실

- 1) 육아상담 : 일상에서 겪는 육아에 대한 고민, 문제행동
- 2) 발달진단 및 상담 : 연령에 맞게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할 때 이용
- 3) 보육상담 :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찾기,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등
- 4) 운영 프로그램
  - 오감발달놀이(프로그램 변동 가능)
    - 10~36개월 영아와 엄마를 대상으로 오감자극을 통한 발달증진
    - 진행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3:30~4:30(4회/월)
    - 참여인원 : 13가족
  - 사회성증진 음악놀이(프로그램 변동 가능)
    - 36~72개월 유아와 엄마가 함께 하는 사회성 증진
    - 진행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3:30~4:30(4회/월)
    - 참여인원 : 13가족
  - 모아치료 놀이(1~12월)
    - 24~72개월 영유아와 엄마가 놀이를 통한 애착증진 프로그램
    - 진행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30~4:30(4회/월)
    - 참여인원 : 5가족
  - 장난감반납 서비스
    - 강동어린이회관(동동레코텍)에서 대여한 장난감 반납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00~오후 4:00
  - 부모교육(연 10회, 월1회 실시)
    - 전문강사 초빙, 육아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 진행시간 : 넷째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1. 현황 및 실태

#### □ 낮은 보육 공공성 수준

- 서울시 보육시설 5,684개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의 11.0%인 626개이며, 이용 아동 19만 3,723명 중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전체의 25.5%인 49,338명임.
- 서울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전국과 비교해 높은 비율임. 그러나 서울시의 자치단체 별 국공립보육시설과 이용 아동 수의 편차가 심함. 지역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일정정도 맞출 필요가 있음.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은 역진 현상 있음.
  - 보육시설의 경우 종로구는 전체의 33.8%가 국공립보육시설이지만, 노원구는 5.3%에 불과함. 노원구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표적 지역의 하나임.
  - 보육아동 현원을 기준으로 할 때도 종로구, 성동구, 강남구 등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아동의 40%이상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은평구, 금천구 등은 그 비율이 15%도 되지 않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표 24〉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2009)

자치구	보육시설 수			보육아동 수		
	총계	국공립	비율	총계	국공립	비율
서울시	5,684	626	11.0	193,723	49,338	25.5
종로구	71	24	33.8	3,534	1,644	46.5
중구	50	16	32.0	2,920	1,551	53.1
용산구	100	17	17.0	3,886	1,262	32.5
성동구	141	32	22.7	5,854	2,397	40.9
광진구	204	21	10.3	7,282	1,669	22.9
동대문구	223	26	11.7	7,316	1,896	25.9
중랑구	245	24	9.8	9,069	2,285	25.2
성북구	306	27	8.8	9,500	1,950	20.5
강북구	198	23	11.6	7,807	1,578	20.2

자치구	보육시설 수			보육아동 수		
	총계	국공립	비율	총계	국공립	비율
도봉구	285	20	7.0	8,072	1,389	17.2
노원구	525	28	5.3	12,180	2,551	20.9
은평구	294	18	6.1	9,954	1,172	11.8
서대문구	172	24	14.0	6,377	1,611	25.3
마포구	183	33	18.0	6,766	2,604	38.5
양천구	287	26	9.1	9,601	2,434	25.4
강서구	363	35	9.6	11,843	2,353	19.9
구로구	291	28	9.6	9,404	1,983	21.1
금천구	203	14	6.9	6,776	964	14.2
영등포구	217	23	10.6	8,007	1,702	21.3
동작구	189	29	15.3	7,083	2,521	35.6
관악구	272	33	12.1	9,252	2,666	28.8
서초구	146	20	13.7	5,638	1,717	30.5
강남구	165	35	21.2	6,937	3,085	44.5
송파구	327	31	9.5	10,345	2,653	25.6
강동구	227	19	8.4	8,320	1,701	20.4

자료: 서울시특별시, 2010, [서울통계] 재구성

-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e-보육포털'을 통해 파악한 서울시의 국공립보육시설 대기 아동 수는 6만 8천명임. 그러나 이는 한 아동이 여러 개의 보육시설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까지 다 포함된 수치임. 2010년 (재)한국보육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복등록을 제외한 실제 대기아동 수는 등록아동 38.7%로 26,316명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서울시민의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5〉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대기 아동 수(명)와 추가 공급(개소) 요구

자치구	전체 아동 수 (A)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서울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대기 아동 수 추가 수요		추가 국공립보육 시설수(100 인규모)
		정원	현원 (B)	(현원/전체 아동수)* 100	현원 (C1)	(현원/정원)*100	(현원/자치구 총 아동)* 100	(C1/B)* 100	대기 아동 수	실 대기 아동 수		
계	600,593	230,888	193,723	32.26	49,338	91.78	8.21	25.47	68,000	26,316	263개소	

- 단순 국공립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질 개선, 민간보육시설 지원, 지역주민의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정착할 필요 있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목표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모델 개발

### □ 추진 방향

- 국공립보육시설이 미흡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공적 전달체계 확립, 서비스 지원 모델 개발 운영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세부 추진 과제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현 11%에서 15% 목표로 약 227개소 추가 요구됨.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대기 아동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 가능(100인 규모 시설로 기준할 때 263개소)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은 직접 설치, 기존 공공기관 활용, 기업 등의 후원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전개
-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
  - 민간보육시설이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모델 개발(예, 시간제보육 확대, 지역주민 지원, 인근 보육시설 지원 등)
  -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인근민간보육시설 지원(예, 국공립보육시설에 배치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인근 민간보육시설 지원)
  - 최소 동 단위 1개~2개 이상 실시(동당 평균 1.26개)

### □ 기대 효과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서울시민의 욕구 해결 및 공공성 확보
- 틈새보육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시간제 등)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
- 국공립보육시설 중심 민간보육시설 지원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추진 부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확충 40개소 지정 40개소	확충 40개소 (누적 80개소)	확충 40개소 (누적 120개소)	확충 40개소 (누적 160개소)	확충 40개소 (누적 200개소)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시행(최소 읍면동 1개 이상)	모델 개발 및 시범 100개	적용 200개	적용 300개	적용 400개	적용 500개
모니터 및 사업 평가	-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	사업 평가

□ 연차별 예산

(단위: 천만원)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시행(최소 읍면동 1개 이상)	3,002	사업비 200 개발비 2	사업비 400	사업비 600	사업비 800	사업비 1,000
모니터 및 사업 평가	3	-	0.5	0.5	0.5	1.5
계	53,005	101.5	100.5	100.5	100.5	103

비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1개소당 10억 기준(국고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별도) 사업비는 1개소당 연간 2천만원 지원(1명 인건비와 약간의 사업비)

## 보육품질관리 센터

### 1. 현황 및 실태

#### □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미흡

- 서울형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보육시설의 안전, 급식, 위생 및 아동인권 분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시 평가체계 유지와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보육관련 예산 연간 5,360억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필요
-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을 공인에서 사후관리 중심의 평가와 품질관리 사업으로 전환
- 서비스 품질 평가 시스템 정착으로 낙후시설의 자발적 퇴출 및 서비스공급자간 자율 품질 경쟁 관행 정착

#### □ 현황

- 서울형어린이집은 2009년 3월 공인과정을 시작으로 2010년 6월 말 기준 2,385개소로 서울시 전체보육시설의 42%임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서울형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6.3%임

〈표 26〉 서울시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현원과 서울형어린이집 개소 수/현원

(단위: 개소 수, 명, %)

		전체	국공립법인	민간법인외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체	보육시설 수	5,684 (100.0)	670 (11.8)	2,497 (43.9)	2,404 (42.3)	17 (0.3)	96 (1.7)	
	이용 아동 수(현원)	193,723 (100.0)	51,702 (26.7)	103,965 (53.7)	32,578 (16.8)	460 (0.2)	5,018 (2.6%)	
서울형	'09	보육시설 수	2,025 (100.0)	560 (27.7)	751 (37.1)	698 (34.5)	1 (0.05)	15 (0.7)
		이용 아동 수(현원)	97,224 (100.0)	47,160 (48.4)	38,378 (39.5)	10,525 (10.8)	28 (0.03)	1,133 (1.2)
	'10	보육시설 수(상반기)	360 (100.0)	11 (3.1)	193 (53.6)	152 (42.2)	2 (0.6)	2 (0.6)
		이용 아동 수(정원)	11,814 (100.0)	942 (8.0)	8,261 (69.9)	2,337 (19.8)	55 (0.5)	219 (1.9)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2009.  
서울시 내부자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목표

-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보육시설 확충
- 아동이 있는 부모의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제공

### □ 추진방향

-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보육품질관리 체계도 구성
- 보육품질관리센터 준비팀 구성을 통한 타당성과 인프라 확충
- 보육품질관리센터 개소와 방향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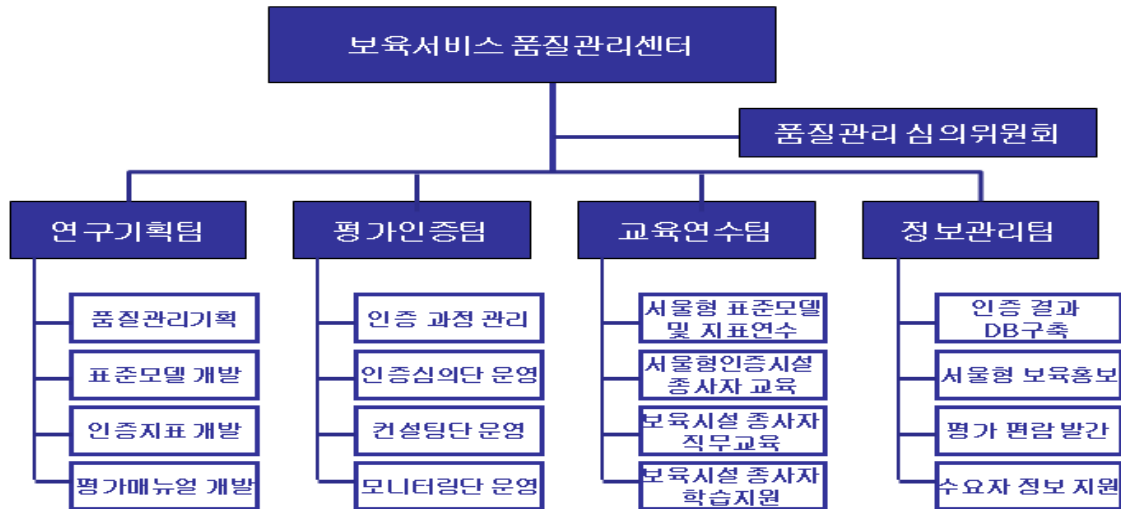
### □ 정책대상

- 서울시 보육시설 5,684개소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세부추진과제

- 서울시 보육조례 개정: 품질관리 센터 설치 및 서울형 공인인증 사업 관련 조항 삽입
- 서울형 보육 품질관리 센터 준비팀 구성
  - : 구성 - 위원장(서울시 보육담당관), 서울시 보육평가팀, 서울여성재단, 서울보육정보센터 등 사업 관련 담당자로 구성
  - : 기능 - 품질관리 센터 설치에 필요한 추진 계획안 및 장·단기 발전계획안 수립, 필요 시설 및 설비, 운영 예산 확보
- 품질관리 센터 구성(안)
  - 보육품질관리센터는 연구기획팀, 평가인증팀, 교육연수팀, 정보관리팀 등 4개의 팀과 서울형 공인 심의위원회로 구성됨
  - 평가인증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전문가 풀 구축과 인증 심의단 구성, 보육과정 및 경영 컨설팅단 및 모니터링단을 구성함



#### □ 기대효과

- 보육시설이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양질의 서비스와 책임 경영을 수행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공인을 통해 서울시 보육의 수준 향상
- 주기적 평가실시를 통하여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중장기적 개선 노력 유도
- 공인인증과 행·재정적 지원 연계를 통하여 보육 서비스에서 자율 경쟁 원리 도입
- 시설 경영의 효율성 및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 신장 촉진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추진 부서: 서울시 보육담당관

####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시설수, 횟수, 건수)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형 공인/재공인, 모니터링 사업	신규공인(*재공인)	1,000	1,000(1,153)	285(730)		
	서울형컨설팅(사후관리)	3,440	4,440	5,448		
	모니터링	1286	285			
교육사업	평가단 교육	24	24	24		
	컨설팅단 교육	24	24	24		
	모니터링단 교육	24	12	12		
	서울형 어린이 집 교육	8	16	8		
	교사 직무 교육	-	6	12		
DB	DB 구축	1,000	1,000	1,000		
	연구개발	3과제	3과제	3과제		

□ 연차별 예산

(단위: 천만원)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보육품질관리센터 운영		50	50	50		
보육품질관리 DB 구축			10	10		
안심보육모니터링		24	30	30		

## 영유아플라자 확충

### 1. 현황 및 실태

#### □ 영유아 플라자는 영유아를 위한 종합적인 전달체계임

-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사업은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10 현재 총 15개가 운영 중임.
- 복합시설인 영유아플라자 내에는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정보 나눔터, 놀이시설, 체험학습장, 어린이 도서관,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육아상담, 보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정보센터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보제공, 육아카페, 교육, 체험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정보제공 : 베이비&맘 포털사이트 구축
  - 저출산, 양육 보육에 관한 종합 정보제공
  -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과 연계망 구축
- 육아카페 :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장소
- 교육기능 :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 체험학습 :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 상담기능 :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자료: 서울특별시, 2009, [2010 서울시보육사업안내]

#### □ 현재 8개 자치구에 미설치

- 서울시 영유아플라자는 서울시의 특색사업의 하나임. 영유아플라자가 영유아관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자치구에 설치하여 서울시 영유아와 그 가족 누구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 있음. 따라서 현재 영유아플라자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27〉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현황(2010.1 현재)

설치운영	강동구, 도봉구, 동작구, 서초구, 노원구, 영등포구, 강남구, 성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종로구,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송파구
추진 예정	양천구(2011년 1~2월 완공)
미설치 지역	강북구, 중구, 금천구, 성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중랑구, 용산구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목표

- 각 자치구별 1개씩의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 □ 추진방향

- 공공건물 리모델링 또는 복합건물 신축을 통해 영유아플라자 확보.
- 영유아플라자 설치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 서울시내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영유아플라자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활동의 기회 제공
-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운영하여 육아지원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함.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세부 추진 과제

- 각 자치구별 1개씩의 영유아플라자 설치: 설치중 2개소(양천구-'11년 2월 초 완공), 미설치 8개소(강북구, 중구, 금천구, 성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중랑구, 용산구)
  - 센터 운영 규모: 4명 (센터장 1명, 운영요원 2명(보육교사 1인 포함), 특수보육교사 1인)
  - 기본 시설: 베이비&맘 포털사이트 구축, 육아카페(수유실 포함)(33㎡이상), 시간제 보육시설(33㎡이상), 놀이공간 20㎡이상(아동 1인당 2.64㎡ 기준), 장애아동을 위

한 놀이 프로그램 등

- 영유아플라자와 지역내 유아관련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 영유아플라자를 통한 부모와 가족에게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기대 효과

- 지역사회 내 영유아관련 전문 인프라 확보를 통해 육아 지원
-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가족들의 육아부담 경감
- 영유아에게 다양한 활동 제공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추진 부서: 서울시 보육담당관실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영유아플라자 설치	4개소 (누적 21개소)	4개소 (누적 25개소)	-	-	-

□ 연차별 예산

(단위: 천만원)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영유아플라자 설치(건축비)	200	100	100	-	-	-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23,232	4,032	4,800	4,800	4,800	4,800
계	23,432	4,132	4,900	4,800	4,800	4,800

비고: 건축비는 2010년 현재 4개소 확충 예산 10억원(행정과 특별교부금)을 기준으로 함.  
 운영비는 2010년 기준 연간 1억5천2백만원을 참고하여 1억6천만원으로 함.

## 병아 영유아 일시보육 지원사업

### 1. 현황 및 실태

#### □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병아 영유아 지원 부재

- 보육시설 확충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으나, 자녀가 갑자기 감기 등 질병에 걸려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할 상황에서는 곤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보호자들은 병아 보육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음.
- 병아보육과 관련하여 2007년 안성시가 최초로 ‘어린이간호보육센터’를 설치하여 병아에 대한 일시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08년 이 시설이 폐쇄되었음. 현재 병아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없음.

#### 〈참고〉

#### 안성시 어린이간호보육센터

##### 1. 어린이간호보육센터 설치와 폐지

- 안성시는 2007년 10월 11일에 전국 최초의 어린이간호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에 폐지하였다.
- 어린이간호보육센터는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자녀가 아플 때 맡길 곳이 없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와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곳으로, 안성요양병원(구 이소아과의원)에 설치하였었다.

##### 2. 어린이간호보육센터 조직

- 대상은 직장여성의 자녀 중 생후 24개월부터 취학전까지의 아픈 아이였으며, 수용인원 1일/15명, 근무인원 4명(소아과 의사 1, 간호사 1, 보육교사 1, 일반행정요원 1)의 규모로 운영했었다.
- 2009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고 있다.

- 중앙정부의 아이돌보미사업이 확대되면서, 병아가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그러나 아이돌보미사업이 일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등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참고〉

### 아이돌보미 사업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5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이 원하시는 곳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 대상자는 0세(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이다.
- 서비스 내용은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안전 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 제공(가사활동은 제외됨)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user/business/family\\_care\\_child.php](http://www.familynet.or.kr/user/business/family_care_child.php)

- 따라서 병아가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병아보육 지원서비스가 필요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목표

- 각 자치구별 병아보육서비스 체계 마련

### □ 추진 방향

- 일시적 장기적 병아보육이 가능한 인프라와 센터 구축함.
- 병아보육을 위한 (가칭) 영유아건강발달지원센터 내 기능 혹은 독립된 센터 설치: 각 자치구별 간호대학 또는 의과대학 간호학과 위탁 운영 및 거점화.
- 보육시설, 유치원, 병원과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함.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세부 추진 과제

- 병아보육을 위한 거점 기관 인프라 구축
  - 25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 병아보육관련 거점 기관 설치
  - 거점 기관은 ‘영유아건강·발달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으며 각 자치구별 간호대학<sup>1)</sup> 또는 의과대학 간호학과 위탁 운영 및 거점화.
  - 거점 센터는 1개구에 생활권역을 고려 3~4개 지정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사업 중 병아보육서비스 기능 강화와 연계 추진
  - 아이돌보미를 병아가 있는 가정에 일시적으로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 강화와 수요에 대비한 공급체계 마련
  - 서비스 비용은 일정 기간 이하는 감면 조치를 하며,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함.
- 지역내 보육시설, 유치원 등과의 연계
  - 병원 송영서비스 등의 경우 병원송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보육시설, 유치원 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또한 보육시설 내 전염병 감염 아동 발생 시, 지역의 병아보육서비스 기관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기대 효과

-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가 질병 등에 걸렸을 때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함.
- 아동이 적절한 보건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권을 보장함.
-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내 전염병 감염 아동 등 병아에 대한 보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다른 영유아들의 건강을 유지시킴.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추진 부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 연차별 추진계획

---

1) 적십자 간호대학에서 센터설립에 따른 위탁운영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병아보육 거점센터 지정 (생활권역 단위, 최소 평균 2개)	모형 개발 지정 10개소	지정 10개소 (누적 20개소)	지정 10개소 (누적 30개소)	지정 10개소 (누적 40개소)	지정 10개소 (누적 50개소)
아이돌보미 병아보육서비스 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	매뉴얼 개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모니터 및 사업 평가	-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	사업 평가

## □ 연차별 예산

(단위: 천만원)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병아보육 거점센터 지정(설치비) (생활권역 단위, 최소 평균 2개)	501	개발비 1 설치비100	설치비100	설치비100	설치비100	설치비100
아이돌보미 병아보육서비스 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	0.5	0.5	-	-	-	-
모니터 및 사업 평가	3	-	0.5	0.5	0.5	1.5
계	504.5	101.5	100.5	100.5	100.5	103

비고: 설치비는 리모델링비를 기준으로 개소당 1억원인.(운영비 제외됨)  
아이돌보미 병아보육서비스는, 이용료를 지원할 경우 사업비 추감됨.

## 역세권 영유아 돌보미센터

### 1. 현황 및 실태

#### □ 영유아 재가양육 현황

- 09년말 현재 서울시 만 5세이하 보육시설이용 영유아는 263,947명(유치원 79,633명 포함) 52.1%이며 재가 영유아는 242,808명 47.9%를 차지
  - 특히, 0~1세 영유아의 경우 재가양육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연령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재가 영유아수	65,692 (87.5%)	55,399 (71.3%)	48,406 (50.1%)	26,509 (32.5%)	19,795 (23.9%)	25,995 (29.3%)

#### □ 사회적 양육환경 개선으로 재가 영유아 지원확대 필요성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경우 지원율이 59%이나 재가영유아의 경우 지원율이 12%에만 그쳐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 맞벌이 가정, 전업주부의 양육선택권 강화 필요
  - 1세까지 영아는 가정보육이 78%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
- 일시적 보육필요 발생시 탄력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필요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재가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으로 양육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강화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세부추진과제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부담없이 맡길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에 영유아 돌보미센터를 마련하여 보육필요 발생시 탄력적 서비스 제공

#### □ 기대효과

- 일시적인 보육필요 발생시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
  - 전업주부 및 재가 전담양육자들의 보조적 양육지원 및 안전망으로 기능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역세권돌보미센터 설치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 □ 연차별 예산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역세권돌보미센터 설치 (1개소 465,264천원)	11,631	58,155	58,155	58,155	58,155	58,155

## 가정방문 서비스

### 1. 현황 및 실태

-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에는 생애초기가 매우 중요하며 아동의 삶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핵심적 요소
  - 임신기와 출산 직후는 아동과 가족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로 이때 가족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직접 그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가족이 생활하는 거주 환경을 직접 관찰하여 가족의 욕구에 보다 적절히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필요
  - 임신, 출산 직후를 포함한 영유아기의 건강이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됨
- 영유아조기검진, 건강관리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용이 저조
  - 또한 0~2세의 경우 재가양육의 비율이 높고, 이때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고 보육수요는 높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를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 대표사례 : 미국의 헬스스타트(Healthy Start) 서비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기간 및 방문횟수	프로그램 대상	가정방문가 배경	가정방문가 자격요건
The Comprehensive Child development Program (CC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신체, 사회, 정서, 지적 발달 향상</li> <li>■ 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지지 제공</li> <li>■ 가족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출생부터 만5세까지 격주	저소득층 가족	준전문가 및 단기 교육을 받은 자 혹은 전문대에 해당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광범위한 현장훈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기간 및 방문횟수	프로그램 대상	가정방문가 배경	가정방문가 자격요건
Hawaii Healthy St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적의 아동발달</li> <li>긍정적 부모역할 촉진</li> <li>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li> <li>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li> </ul>	출생부터 만5세까지 격주, 이후 연간 4회	아동출생시 학대 및 방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	준전문가 및 학사 학위 소지자	서비스 시작 전일 주간 훈련 및 30시간의 현장훈련
Health Families America (H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 부모역할 촉진</li> <li>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li> </ul>	출생부터 만5세까지 격주, 이후 연간 4회	아동출생시 학대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	준전문가 및 학사 학위 소지자	시작 전 1주일간 훈련: 1년에 4번 1일 훈련; 처음 6개월 동안 80시간 추가훈련 권장
The Home Instruction Program for Preschool Youngsters (HIPP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를 아동의 주요 교육자로서 역량강화</li> <li>학교 및 지역사회 활동에 부모참여 증진</li> <li>아동이 성공적인 조기교육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li> </ul>	유치원 입학 혹은 입학 2년 전부터 졸업시까지 격주	모든 아동 가족	준전문가(대부분 파트타임)	시작 전 집중적인 프로그램 훈련 및 매주 훈련 진행
Nurse Home Visitation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 결과의 개선</li> <li>아동건강 및 발달 개선</li> <li>가족의 경제자립도 개선</li> </ul>	태아기부터 만2세까지 격주, 이후 매월	저소득, 초산인 모	공공보건 간호사	시작할 때 프로그램 모델에 대한 2주간의 훈련, 부모-아동 상호 작용 사정에 대한 46시간의 교육, 기타 필요시 추가 교육
Parents as Teachers (P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가 아동에게 가능한 최상의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li> <li>아동이 학교에서 성공하도록 확고한 토대 마련</li> <li>아동 학대 예방 및 감소</li> <li>부모의 효능감 증대</li> <li>아동을 위한 가정-학교-지역 사회 파트너십 개발</li> </ul>	태아기부터 만 3세까지 가족의 욕구와 지금 수준에 따라 매주에서 매월	모든 아동 가족	준전문가 및 고졸학력 이상으로서 단기교육을 받은자, 학사학위, 석사 이상 소지자	서비스 시작 전 1주간의 훈련과 처음 6개월 중 1일 훈련; 첫째 중 20시간의 현장 훈련; 매년 일정 시간 현장훈련; 특수 PATNC훈련 권장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발달 지원 및 부모의 양육기술을 촉진

-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세부추진과제

- 아동역량을 초기에 최대화하는 헬스스타트(Healthy Start)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정 방문가(Home Visitor)들이 임신중 혹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들의 태도, 지식, 행동상의 변화를 통해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 부모들에게 사회적 지지, 물질적 도움(아기용품,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 부모들에게 부모역할 및 아동발달에 대한 아동양육 기술을 교육. 부모기술을 훈련 시키며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
  - 조기검진을 통하여 장애, 건강상의 문제 등에 대한 조기개입
  - 저소득 부모의 경우 일부 서비스는 부모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자활 사업 등과 연계

### ○ 헬스스타트 프로그램의 바우처사업

서비스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가정 및 출산 가정에 아동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 및 양육지도</li> <li>- 아동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 영양관리, 추가 서비스 필요여부 판단, 부모의 양육방법 모니터링</li> <li>- 추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집중 지원</li> </ul>
서비스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패키지를 3가지로 구분하고 대상가정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편적 조기진단서비스</li> <li>2. 보편적 가정 방문서비스</li> <li>3. 역량강화 필요가정 방문서비스</li> </ol> </li> <li>- 서비스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찾아가는 서비스: 병원연계 방문, 가정방문</li> <li>2. 부모 지원: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필요에 따라 물질적 도움 제공(아기용품,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약품 등)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li> <li>3. 아동학대방임 예방 및 조기발견</li> <li>4. 가구맞춤형 서비스: 가정방문가가 거주 환경을 직접 관찰하여 가족의 욕구에 보다 적절히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li> </ol> </li> </ul>

	보편적 조기진단	보편적 가정방문	역량강화 필요가정
서비스 대상	- 임신부, 출산 가정 영유아 및 부모	- 0 ~ 3세	- 0 ~ 5세
제공 방식	- 산부인과 병원 연계	- 가정방문, 전화방문	- 가정 방문
제공 횟수	- 출산전, 출산직후	- 격주(가정방문,전화방문)	- 격주(가정방문,전화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간호사, 아동 전문가	- 훈련된 가정방문 준전문가	- 사회복지사, 간호사, 아동 전문가, 훈련된 가정방문 준전문가
서비스 장소	- 산부인과 병원	- 방문 대상자 가정	- 방문 대상자 가정
서비스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아동을 따뜻하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학대와 방임의 위험을 감소시킨다.</li> <li>- 아동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된다.</li> <li>- 산전보호, 예방접종, 소아과 검진 등과 같은 예방차원의 건강서비스 이용율을 높임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li> <li>- 이러한 생애초기의 포괄적인 지원과 개입은 아동이 학교에 갈 준비가 되도록 도우며 나아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li> <li>- 지역사회 출산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단기교육을 통하여 가정방문가(Home Visitor)로 육성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가정방문가들의 교육, 훈련과 지도는 가정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게 된다.</li> </ul>		

## □ 기대효과

- 부모에게 아동발달에 대한 전반적 지식,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부모로서의 자신을 보는 시각에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모역할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
- 부모의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 위험 감소.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및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 가능
-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아동이 가정 내에서 다양한 장난감과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적 발달을 촉진
- 산전보호, 예방접종, 소아검진 등 예방차원의 건강서비스 이용율 높임으로써 아동의 건강 향상 가능
- 생애초기 포괄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아동의 취학준비를 도우며, 나아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지역사회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단기교육을 통하여 가정방문가(Home Visitor)로 육성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 볼 수 있음. 이때 가정방문가들의 교육, 훈련 및 지도는 가정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담당
- 영국의 경우 이러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보편적 서비스



로 정립될 경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정립 가능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보편적 조기진단	15,100	2,369	2,666	3,291	3,316	3,458
가정방문서비스	335,000	50,000	60,000	70,000	75,000	80,000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1. 현황 및 실태

-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조기투자, 건강관리를 통한 균형발달 지원, 다양한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국가 인적자본 개발 및 출발 기회의 형평성 제고 필요
  - 비만 및 과체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1,691억원으로 추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문제행동 및 정서발달적 장애를 경험(보건복지부, 2006)
-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소외로 인해 발달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입법 및 제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바우처 서비스 확대
  -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 영유아 발달초기부터 1: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지급(대여),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관계법 지도 등 취학전 아동 인지발달에 대한 조기투자를 통해 국가 인적자본 개발 및 출발기회 형평성 제고
    -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2~6세 아동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25천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지급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비만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운동처방,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 아동의 균형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가 인적 자본 확보. 만 7~12세 경도(비만지수 20%) 이상 비만아동에게 월 40천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지급

○ 심리, 정서, 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동 및 장애아동에게 시의적절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

- 문제행동이 가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부모 및 가족상담을 병행
- 정서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 개입이 가능한 문제행동아동 및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72천원~200천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지급

○ 빈곤아동 체험활동 서비스(100천원~200천원)

- 취약지역 빈곤아동의 출신배경 및 성장환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동의 성장단계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양질의 발달경험 서비스 제공
- 아동 초기 발달에 필요한 경험이 결여되기 쉬운 아동에게 양질의 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100천원~200천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지급

□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 장애아동청소년 부양수당 지원대상 확대

- 장애아동청소년 부양수당 대상자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현재의 1급 대상자에서 중증장애인 범주까지로 확대하여 지급

○ 장애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 초·중·고 장애환경평가제 도입
- 초·중·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청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연차별 예산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바우처서비스	13,847	11,995	12,665	14,665	16,665	18,665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85,400	13,300	15,300	17,600	19,200	20,000

## 지역사회 방과 후 서비스 강화

### 1. 현황 및 실태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등의 공급을 늘려왔지만 6~8세 아동의 9.1%, 9~11세 아동의 23.8% 정도가 방과후 방치 상태(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09)
  - 방과후돌봄 분야는 영유아 보육 못지않게 아동의 보호와 발달지원,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여 촉진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 대상임
  - 현재 방과후돌봄 정책의 대표적인 문제는 각 사업들 간의 연계조정 기능이 취약하고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하여 돌봄의 질 저하,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서비스 연속성의 미흡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예방중심의 발달환경 조성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극적 개입전략 개발 및 수행 필요
  - 아동과 청소년의 다면화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아동과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각종 발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포괄적 보호·육성체계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별,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반의 편차가 발생
  - 급속한 양적인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시설당 월 운영비 220만원 지원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인건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

※ 해외 방과후프로그램 특징(영국, 미국, 일본)

- 해외(영국, 미국, 일본) 방과후프로그램 사례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공통적 특징은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
  - 교육과 복지를 이분화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적 관점에서 접근
    - 이러한 접근은 학업성취의 제고라는(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복지와 돌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토대에 기반
  -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들 국가에서는 관련 부처가 통합되거나 강한 연계조직을 두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지자체의 교육담당 부서와 아동복지 담당주서가 통합되어 운영됨
- 또 다른 공통된 특징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교육복지 개혁의 일환으로 법제화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방과후 프로그램의 추진체계에서 학교가 방과후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담당
    - 열린학교의 개념을 강조하고 학교 밖 서비스 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망 구축을 강조
    - 여기서 학교가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학교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과 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아동과 학부모에게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들도 관찰됨
  - 중앙집중의 전통이 강한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필요 재원을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재원의 1/3을 부담
- 자원마련에 있어서 기관단위 지원이 아닌 학생단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바우처 방식의 지원은 서비스 공급기관이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에 더욱 충실하도록 만들 것이며, 동시에 저소득층에게 재정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홀로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 강화, 사교육비 경감,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보완 측면에서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도모 가능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접근과 질 제고를 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함

- 학교체계를 활용한 방과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교를 지역사회 방과후돌봄 허브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일돌봄 사업간의 연계와 통합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유기적 통합
  - 두 사업을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이 바람직
  - 청소년 수련관의 사회체육시설·도서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체능 활동,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친목활동, 도서관 등 학습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인근 지역아동 센터 학생들에게 제공 가능
-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지역아동센터체제의 구축 필요
  -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울러 학부모와 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의 전문화는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형과 청소년형으로 나누거나 하나의 센터 안에 아동반과 청소년반을 분리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

#### □ 지역아동센터 인증체제 및 성과관리체제 도입

- 지역아동센터의 질관리를 위해서 '인증체제'와 '성과관리체제'를 도입. 서비스 제공방식을 센터 지원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 수요자중심 지원방식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늘려주고, 서비스 공급 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요와 서비스 불균형 현상을 시장기제를 이용해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바우처 방식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음
  - 저소득층에 재정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 돌봄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방과후 서비스 기관 확충

- 방과후 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특기적성 교육 제공과 급식지원 및 쾌적하고 능률적인 학습공간 지원

- 다양한 방과후활동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육·문화적 격차보완과 학습능력 향상
  -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체험위주의 전문선택 과정 운영
  - 건강검진, 상담, 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복지지원 강화

####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파악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치료, 자활 등 청소년 보호서비스를 통합지원

#### □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허브 구축

- ‘학교’를 학령기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방과후프로그램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도록 추진
- 학교가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비스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를 서비스의 장으로 개방
  -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핵심서비스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장려
- 영국의 Expanded School의 주요 내용을 모델로 핵심서비스 제공 가능
  - 정규수업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내 혹은 학교와 연계된 학교 밖 지역 내 보육기관에서 보육서비스 제공. 이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보육기관 이동시 아동을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아동에게 정서, 건강, 행동적 어려움이 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 □ 등교전 프로그램(Before School) 구축

- 등교 전 오전시간(Before School)에 아침식사 제공 등의 돌봄서비스를 시행
- 아동의 보호 보다는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 가정에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는 있음

#### □ 방과후정보센터 구축

- 기존 보육정보센터나 새로운 방과후정보센터의 신설을 통해 학생, 부모 및 양육자들에게 필요한 방과후프로그램 정보 제공
- 이를 통해 교육과 복지를 이분화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적인 접근을 기대할 수 있음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방과후돌봄기관 통합 및 확충	69,000	10,540	12,688	13,985	15,034	16,753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1. 현황 및 실태

- 아동학대와 방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요구됨
  - 중앙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의 신고 및 접수·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방임사례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24시간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실시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내실화,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치료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성학대 전문상담원 양성, 보수교육의 정례화, 임상심리사 등 전문치료인력의 배치

〈표 28〉 연도별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 및 학대의심 사례건수

(단위: 명/건)

	2006			2007		
	상담원수	상담신고건수	아동학대의심 사례건수	상담원수	상담신고건수	아동학대의심 사례건수
전체	249	8,903	6,452	255	9,478	7,083
서울시	45	1,450	920	37	1,353	991
비율	18%	16%	14%	14%	14%	14%

자료: 통계청

- 학대 및 방임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목표로 교육·홍보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아동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 아울러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전문적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입법 및 제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학대와 방임의 근본적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체계 마련
- 지역별로 활용 가능한 공공·민간의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학교, 종교단체, 병원 등과 네트워크 형성
  - 서울시 교육청-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확산 및 시설과 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 아동보호체계의 접근성 제고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문상담원 확충
  - 신체학대, 성학대 등 학대 유형별 전문 대응기법 개발 보급

###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TV, 라디오 등 다양한 대중매체와 포스터, 캐릭터 제작 등을 통해 학대예방 교육·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 신체학대, 성학대 등 학대 유형별 홍보 및 교육 실시
  -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소관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 적극 전개 및 지도감독 실시
  - 아동학대 주요 가해자로 주목되고 있는 성인(부모 포함) 교육 등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다양화 및 대상별 세분화·전문화
- 아울러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보호서비스의 전달과 학대아동의 자립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방임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 전체 위탁 사업 실행

- 현재는 학대나 방임 등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만 가정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아동에게 분리 충격이 생기지 않고 가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족 전체를 위탁하는 형태를 실행하기 바람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연차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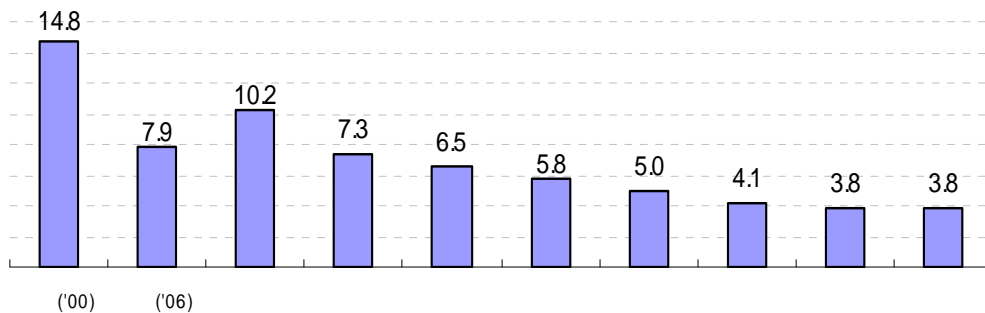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예방홍보(천매)	350	80	85	90	95	
예방교육(연인원/천명)	110	25	25	30	30	
연도별 소요예산(백만원)	3700	850	900	950	1,000	

## 가정사고 예방사업 (Safe House Start)

### 1. 현황 및 실태

- 2006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국가차원의 노력으로 지난 2000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OECD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을 차지

〈그림 27〉 OECD 국가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 최근 3년간 위해발생장소별 「가정 내 안전사고」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한국소비자원, 2007)

- 특히, 사고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사고의 44.6%가 영유아기인 '3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예방중심의 사회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세부추진과제

-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보급·확대

※ **오스트리아 사례**  
 정부차원에서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용품이 들어있는 Safe Box 보급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부모교육
  - 부모대상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

※ **일본의 사례**  
 후생성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부모-자녀 21」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5개 중점과제 중 하나가 안전한 육아환경의 확보로 어린이 사고방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부모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캠페인 전개 및 홍보 강화

※ **유럽의 사례**  
 유럽아동안전연맹은 유럽연합 22개국에서 2006년부터 Home Safety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 □ 기대효과

-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가정 내에서부터 시작되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 마련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동안전사고예방	7,415	1,283	1,383	1,483	1,583	1,683

##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 1. 현황 및 실태

-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 지속적으로 증가. 2003년 대비 2009년 발생건수는 약 1.6배

〈표 29〉 아동청소년 성폭력 현황

(단위: 건)

신고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3세미만	642	721	738	980	1,081	1,220	1,017
13-20세	-	-	-	-	4,379	5,119	5,765
전체건수	-	-	13,446	15,326	15,325	17,178	18,351

- 08년 발생한 서울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756건으로 전체 청소년의 3.5%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 전국의 시도에서 광주 3.7% 다음으로 높은 수치

-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불기소율이 매우 높음. '08년 서울시 성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77.2%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불과 16.2%만이 신고했음을 보고함. 보고되지 않은 피해사례도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향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사업이 요구됨

- 서울시 청소년의 31%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성적 위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구축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센터 시범 운영
- 아동성폭력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치유·교정프로그램 개발

####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확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
- 교사대상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초중고교 '성인지적 인권교육' 정착·활성화

####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사전 예방 및 철저한 사후 대처 프로그램지원 강화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환경 구축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45,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성폭력 예방교육 확산	2,000	200	300	400	500	600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1. 현황 및 실태

- 위기상황별 아동규모를 기초로 추정해 보면 2003년 문제행동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폭력 및 범죄피해·학업중단·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 아동은 2005년 44만 5천명(3.7%)
  - 또한 가족적 위기와 학습부진 등을 겪고 있는 중위기 아동은 138만1천명으로 추정되어 전체 아동 중 이 둘을 합한 위기아동은 182만6천명(15.5%)으로 추정됨
  - 서울시 인구대비 위기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고위기 아동의 경우 48,720명이며 전체 위기아동은 198,832명

〈표 30〉 위기아동수 및 전체아동대비 비율

(단위: 명/%)

	고위기아동	중위기아동	위기아동 (고위기+중위기아동)	전체아동
전국	44만 5천명 (3.7)	138만1천명 (11.4)	182만 6천명 (15.1)	12,086,651 (100)
서울시	48,720 (3.7)	150,112 (11.4)	198,832 (15.1)	1,316,770 (100)

- 위기청소년의 상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곳,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17곳 등 44개소에 그치고 있어 4만 명에 달하는 고위기 아동의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상담수행 시설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효과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



〈표 31〉 위기청소년 상담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시)	청소년 지원센터(구)	청소년수련관 상담실	I Will 센터	비 고 (청소년쉼터)
개소수	1	17	11	4	11
기 능	·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 청소년 일반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중독 상담 및 치료 지원	가출청소년보호 및 상담, 지원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통합관리를 통해 청소년 보호·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상담·보호·지원의 맞춤형 서비스로 건전한 성장 유도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심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One-Stop 서비스 체계 마련
    -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합 운영(1388 해피콜센터 구축)
    - 관련기관 연계 지원 네트워크 강화(총 418개소)
      - 청소년쉼터(11), I Will 센터(4), Wee센터(6), 정신보건센터(1), 자살예방센터(1) 등
  - 청소년보호·복지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통합·연계 거버넌스 구축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구축, 운영(반기별 1회)
- 청소년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 보강
  - 청소년지원센터 자치구별 1개소 설치: 17개소 → 25개소
    - 지속적인 방문·협의를 통해 동대문구 ‘11년 설치 예정(미설치 자치구 연차별 설치 유도)
  -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

- 청소년지원센터에 상담뿐만 아니라 활동지원 업무 기능을 보장
- ※ 여성가족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연계추진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확대 및 기능 보장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지 역할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여 위기 청소년의 상황과 능력을 개선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통해 발견된 위기청소년 중 동반자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
  - 청소년동반자(YC)가 청소년의 집, 학교, 친구 등 주변 환경에 직접 찾아가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각종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지, 필요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위기청소년 One-Stop 통합관리 체계 구축	1388해피콜센터 구축				
청소년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보강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확대					

□ 연차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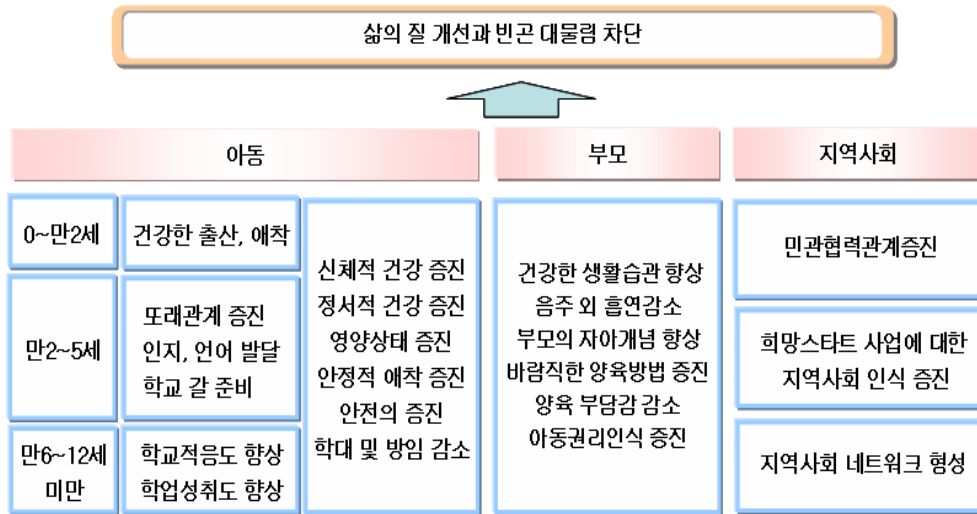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9,400	2,000	2,200	2,400	2,600	2,800

## 빈곤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1. 현황 및 실태

- 아동기는 청·장년기를 거쳐 전 생애의 방향과 사회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인간 발달 단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
  - 아동기 빈곤은 부모세대 빈곤이 대물림된 결과이며 이들은 또다시 빈곤한 아동의 빈곤한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빈곤 문제의 해결이 요구됨
  
- 아동빈곤 문제는 인간발달의 핵심적인 위험요인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실업과 소득 불안정, 질병과 장애, 약물중독, 일탈과 폭력, 복지의존 등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 비용 유발
  - 지역사회 물적·인적자원(소득수준, 교육수준, 주거환경, 교통, 고용여건, 도시화 정도 등)의 불균형 심화로 인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은 빈곤세습의 주요인
    - 취약지역의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제한된 공공서비스 접근권, 불충분한 사회간 시설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기회의 제약 및 탈선, 범죄, 폭력, 약물중독 등 일탈행위에 노출될 가능성 농후
  
- 정부는 아동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빈곤아동 개인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를 시행
  - 2010년 현재 서울의 드림스타트는 2개소로 25개 자치구의 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서울시 차원에서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확충 필요

〈그림 28〉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대상별 핵심 사업목표



자료: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 드림스타트사업 교육매뉴얼, 2008.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취약계층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동시 개입을 통한 2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을 지향하며, 임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종합적이고 능동적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세부추진과제

- 드림스타트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바, 국가인재 양성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견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바탕으로 아동발달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지원단을 통해 개별 단위사업의 기획과 평가,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

- 시도 및 시군구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드림스타트센터는 시군구 주관으로 설치·운영

□ 기대효과

-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맞춤형 복지체제 강화를 통한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 아동 및 가족단위에서는 아동의 긍정적 자기정체성 확립과 행복감 제고 및 부모의 자립·자활 의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
  - 지역사회 단위에는 생활환경 개선, 범죄율·자살률 감소, 행복감 증진, 능력발휘 등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 사회서비스 정책 차원에서는 파편적·분절적 서비스에서 통합적 연계서비스의 실현을 통해 복지체제의 효과성 제고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연차별 예산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드림스타트 확충	5,000	800	900	1,000	1,100	1,200

## 자립지원 강화

### 1. 현황 및 실태

#### □ 취약계층 청소년의 「회전문 현상」 발생

- 취약계층의 경우, 자립의 어려움으로 “빈곤 → 임시직 → 실업 → 빈곤 → 임시직 → 실업”의 회전문 또는 빈곤의 함정 현상 발생
- ‘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8세 아동청소년의 비율 25%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 반복, 빈곤 세습 우려

#### □ 자립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두보 필요

- 취약계층 청소년은 사회적응능력·취업동기 희박, 기초학습 능력 부족, 정서적 불안 상태 등의 사회심리적 특성 가짐
- 노동과 복지지원이 결합한 맞춤형 지원 필요
- 빈곤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사회가 제시해야 희망을 간직하고 노력할 수 있음
- 〈생산직 취업을 통한 전문직업 경로〉, 〈대학진학을 통한 지식직업 경로〉 등

#### □ 인적자본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투자적 아동복지를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

-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아동정책은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 최소한의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실정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가 필요

## 2. 목표 및 추진방향

- 대학준비 전후단계에 걸친 자립지원 강화
- 조기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한 예방체계 강화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전문직업 경로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전문계교육 특성화
    - 전문계고를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특성화 추진, 특성화 분야의 직업과 직능 수준을 설정한 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직능수준에 따라 취업 중심과 연계 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함으로써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성화 전략 수립
    - 마이스터고를 취업중심 명문 전문계고로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특성화고를 추진함으로써 전문계고의 취업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연계교육을 운영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 산학점임교사 제도 확대, 산업체 CEO, 기능명장 등 특강요원 인력풀을 구축하여 교원수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양성·임용·재직단계별 산업체 직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 직업훈련제도 개선
    -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산업수요에 맞는 신속성 있는 과정 개설
    - 강사의 즉각적 전화배치 가능하도록 유도
    - 저소득층 청소년 직업훈련 강화
    - 청소년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 및 저소득층 청소년 구직활동 수당 지급
- 지식직업 경로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지식직업 경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대학 준비단계서 예측가능하고 대학진학 후에는 안정적 대학생활이 가능한 장학제도가 필수적임
    -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기회는 빈곤탈출을 위한 유력한 경로

- 부모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제도를 통한 학비와 생활비 조달은 대학준비단계에서 학업성취도 제고 가능
- 장학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계곤란으로 인한 고등교육 포기를 사전 예방
- 저소득계층 할당제 도입
  - 대학 입학의 경우 특별전형, 수시모집 등에서 할당제 도입
    - 먼저 도입한 대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졸업에 이를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사관리 및 장학금, 생활비 지원 제도 마련
- 대학 장학제도의 혁신 추진
  - 모든 장학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종합장학정보시스템 구축
  - 예비 대학생·학부모의 정보접근 가능성을 제고하여 진학 목표 및 삶의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매 학기초 중고생에게 종합적인 장학정보를 제공
  - 대학 장학제도를 현행 성적우수자 위주에서 가계곤란자 위주로 전반적인 개편 추진
    - 국·공립대는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립대 참여를 유도
    - 가계곤란자 대상 장학금은 학비 및 생활비 조달에 충분한 수준을 지급
  - 대학등록금 후불제 시행
    -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이자 및 저리의 학자금대여제도 확대
    - 2009년 9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를 도입. 하지만 제대로 된 등록금 후불제 실시 위해서는 기준소득 높이고 상환율은 낮추며, 2%대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자원봉사와 연계한 생활비 지원제도 도입

## □ 조기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한 예방체계 강화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 발달단계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보급
- 만 15세이상 시설보호아동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 18세 퇴소 전 체계적 자립준비를 위한 개별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
  - 시설 종사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에 대한 교육·연수, 평가 포함
- 청소년 자립의지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
  - 학교복귀, 직장, 사회적응 등을 위한 적응기술 훈련·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전국



### 확대·보급

※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프로그램 '두드림존' 확대 운영

-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사회진출 증대
  - 만19세 이상 요보호 청소년 외 특별지원 청소년,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등의 지원대상 청소년 중 자립 필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보장
  - 취약계층 청소년 이용시설 및 주거지원 방안 확대
    - 전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 주거자금 지원
    - 공동임대주택·국민주택전세·공동생활가정 등 지원대상 확대
    - 유희 공공시설(학교, 보호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시설용도 전환을 통한 자립지원 시설 추가 확대 및 보급
- 아동발달계좌(CDA) 대상아동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현행 요보호 아동에 국한된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추진
  -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성숙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사업확충에 따르는 국가재정 부담을 완충
  - 현재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동 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립지원강화	7,700	1,500	1,600	1,700	1,800	1,900
아동발달지원계좌	6,545	1,209	1,309	1,409	1,509	1,609



남녀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면 아이가 태어난다!

정책영역 : PART

# III

일·가정 양립-균형



## 일·가족양립

일·가족양립			
정책 영역	중앙정부 (새로마지 2015)	서울시 (민선 4기)	서울시 신규 (민선 5기)
생애 주기			
결혼			
임신 · 출산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직장에서 당당한 "D라인"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자녀 양육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복귀 인센티브 도입		남성육아 휴직자를 위한 플러스휴직수당 지원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도입		
	육아 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육아휴직제도 대체 인력지원 체계 개발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도입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여건조성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가족간호휴직제활성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모성보호강화		
			직무공유(Job Sharing)제도를 통한 일·가정양립지원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직원근로형태 유연화	육아기 근로형태 선택의 다양화 -공무원대상-
	시간제근무활성화		
	단시간 일자리 확산, 지원		
	유연 근무제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워크 센터 도입 및 확산	원격근무(U-Work)센터구축 운영	

일·가족양립			
정책 영역	중앙정부 (새로마지 2015)	서울시 (민선 4기)	서울시 신규 (민선 5기)
생애 주기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직장 보육 시설 서비스제공 확대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기업 연합 보육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강제 방안 도입		
	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기반 마련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지원사업	기업맞춤형 컨설팅 제공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서울형 가족친화선도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가족친화직장조성을위한 지원 체계 운영		워킹맘 상담실 'I love Working Mom'
	노사정위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추진		
	공무원 정상근무관행 확산		

## 일·가족양립 세부내용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1	[중양]산전후휴가 분할사용 허용	- 임신부	- 임신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신기간 중 응급 상황 발생시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중양]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 공무원	- 현행 무급3일에서 유급3일로 하고, 필요시 5일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중양]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강화	- 비정규직 여성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대상 확대 노력 -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개선 -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4	[민선5기]직장에서 당연한 'D라인'	- 여성임산부	-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제 활성화 등 임신 기간 중 직장여성 모성보호 지원
5	[중양]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복귀인센티브 도입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통상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 - 다만,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
6	[민선5기]남성육아휴직자를 위한 플러스휴직수당 지원	- 남성육아휴직자	- 육아부담이 있는 남성근로자의 경제적 부담대폭 지원 -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3개월간 서울시 특별지원금 지원 (중양 40%+서울시 60%의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 보장)
7	[중양]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급여가 임금의40%정률제로 전환되는 것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경감을 60%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8	[중양]육아휴직제도 대체 인력 지원 체계 개발	- 대상: 고용주	- 대체인력풀제, 사업장내상시 대체 인력운영, 직업훈련기관의 연계방안 - 시범사업 후에 여성다수고용사업장부터 우선 시행, 확산
9	[민선4기]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 공무원	- 행정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인력뱅크(20명)와 전문직(연구, 지도, 전산직, 의료 등)의 경우 부서추천자를 활용 - 출산휴가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 - 시간당 5,700원(약 100만원/월)
10	[중양]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 육아기 근로자	-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권리(청구권)를 부여하여 제도 이용기회를 보장
11	[중양]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 여건 조성	- 육아기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 시간 단축비용에 따라 지급하여 육아휴직제도와 균형을 유지
12	[중양]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	- 근로자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여 육아기에 활용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13	[중양]육아 휴직시 건강 보험료 경감 확대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급여가 임금의40% 정률제로 전환되는 것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경감을60%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14	[중양]육아휴직제도 대체 인력 지원 체계 개발	- 고용주	- 대체인력풀제, 사업장내상시 대체인력운영, 직업 훈련기관의 연계방안 - 시범 사업 후에 여성 다수고용사업장부터 우선 시행, 확산
15	[중양]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도입	- 육아기 근로자	-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권리(청구권)를 부여하여 제도이용 기회를 보장
16	[중양]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여건조성	- 육아기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육아휴직제도와 균형을 유지
17	[중양]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 근로자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여 육아기에 활용
18	[중양]가족간호휴직제활성화	- 근로자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가족간호휴직(무급)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
19	[중양]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강화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모성보호급여대상 확대 노력,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추진,임신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개선, 임신, 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20	[중양]공공 부문 선도 모델 발굴확산	- 공무원	- 5개 분야 9개 유형 유연근무제 도입 - 공무원(부서장)의 인식변화를 위해 '홍보, 교육' 적극 추진, 우수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21	[민선4기]직원근로형태유연화	- 공무원	- 탄력근무제활성화추진 - 부서장이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분장업무의 특성,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출근 유형 조정
22	[민선5기]직무공유(Job Sharing) 제도를 통한 일-가정양립지원	- 일반인	- 하나의 전임직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이에 할당된 급여 및 복리후생을 자녀 양육기에 있는 여성근로자 2인 이상이 공유하는 직무공유 일자리 지원
23	[민선5기]육아기 근로형태 선택의 다양화	- 공무원	- 서울시 재직 남녀공무원 중 육아기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사용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서 자녀양육지원
24	[중양]시간제근무 활성화	- 공무원	- 전일제 1인 담당 업무를 시간제 2인이 담당하는 직무공유제도입,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화권 장,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보수상 불이익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25	[중양]단시간 일자리 확산, 지원	- 고용주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단시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토록하고 신규고용을 유도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26	[중양]유연근무제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강화	- 기업	- 정부지원 및 규제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선, 유연근무제에 대한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TV, 인터넷 등 매체홍보, 기업노동계 여성계등과 CEO포럼 등 공동행사 개최
27	[중양]스마트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 공무원	-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산, 분당 등 대도시 외곽에 구청, 주민센터유휴공간을활용스마트워크센터시범 구축, 본청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 원격 근무지원 시스템구축,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스마트워크 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으로 단계적 확산
28	[민선4기]원격근무(U-Work)센터구축운영	- 임산부, 육아, 장애자순	- 서울시데이터 센터 개소
29	[중양]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민간시설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활성화를 위해 설치 가능층수 및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완화 의무사업장별(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민간사업장)접근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설치지원 확대 및 인건비지원 강화
30	[중양]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강제 방안 도입	-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하여 의미 미이행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
31	[민선4기]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확대	-기업	- 상하반기에 직장보육서비스제공 이행 실태조사 실시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32	[민선5기]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기업연합보육지원	- 다자녀 워킹맘	- 서울시에서 방학동안 아이를 돌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워킹맘이 업무에 집중하고 아이들은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 - 다자녀 워킹맘에게 우선적으로 기회제공
33	[중양]기업의 가족 친화 경영기반 마련지원	- 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경영매뉴얼 제작, 컨설팅 및 교육지원, 인증 및 가족친화인증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
34	[중양]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 가족친화기업	- 중기청, 조달청 입찰가산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및 확산
35	[중양]가족친화직장조성을 위한지원 체계 운영	- 가족친화기업	- 인증기관 등사업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발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강화
36	[민선4기]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지원사업	- 가족친화기업	- 기업방문 가족친화직장 교육실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실시, 일-가정양립 가족친화프로그램운영
37	[민선5기]기업맞춤형 컨설팅제공	- 중소기업	-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투입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 경영진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정책의 도입방법이나 자원투입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도입을 지체하는 기업 최소화함

연 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38	<b>[민선5기]서울형 가족친화선도 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b>	- 가족친화기업	- 여성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 -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을 세심하게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함
39	<b>[중앙]노사정위합의를바탕으로 민간기업의근로시간단축추진</b>	- 민간기업	- 장시간 근로지도감독, 근로문화선진화 등이 반영 된 장시간근로기본계획수립, 추진, 근로시간단축 및 근로문화개선 사례 발굴 보급, 범국민 캠페인 실시 등, 경제단체와의협력을 통한 패밀리데이 활 성화추진
40	<b>[중앙]공무원정상 근무관행확산 -초과근무관리강화</b>	- 공무원	-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 해서는 감사, 인사, 조직담당부서에 매월 통보하 여 내역관리,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시간외근 무 인정하는 시간외근무사전승인제 도입, 부당수 령 승인권자에 대해 성과연봉(성과상여금)등급결 정시 불이익조치

## 직장에서 ‘당당한 D라인’

### 1. 현황 및 실태

#### □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 조성 필요

-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나 전체 저출산대응 정책에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정책은 난임부부 및 불임부부의 의료 비지원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시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가 정착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태아검진휴가의 실시율(12.9%)은 휴가휴직제도 중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음(문은영, 서울시 중소기업 저출산 대응 가족친화제도 지원방안연구)
-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출산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부를 위한 배려를 위한 제도 확산 및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모성보호측면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

- 시차출퇴근제, 태아검진휴가제 등 탄력근무제를 도입 및 활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 임신부들의 모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 임신부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임신부들을 위한 음악회 정기적 개최를 통해 임신부들의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모성보호측면 일가족양립제도 활성화

- 정책 대상 : 서울시, 자치구, 출연기관 공무원 및 가족친화기업의 근로자
- 정책 내용 :
  -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제(근로기준법 제 74조의2)의 확대시행 및 태아검진 휴가제 활성화
  - 임신부의 임신초기의 안정화 및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입덧 등)을 배려하기 위해 서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실시
  - 임신부를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게 한 부서장 및 관리자에게 평가시 가산점 적용
  - 가족친화기업인증시 인증지표화 및 가중치부여를 통해 임신부 배려정책에 대한 인식강화 및 활성화

#### □ 임신부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정책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부
- 정책내용 :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서울시향 및 서울시합창단이 함께 하는 태교음악회 개최
  - 자치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임신부들을 위한 강좌(임산부 요가, 태교음악감상실 등)을 운영

#### □ 기대효과

- 공무원, 기업, 일반인 대상으로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직원의 근무만족도 제고, 임신부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플러스 휴직수당 지원

### 1. 현황 및 실태

#### □ 남성의 육아휴직이용률 저조한 상황

- 육아휴직은 육아의 부담이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며, 부모의 직접양육지원으로 모성과 부성을 보호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와 기업문화에서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화되어있지 못한 실정임.
- 낮은 육아휴직수당 및 복귀후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특히 남성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고용보험통계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수급자는 2009년 1.07% ⇒ 2010년 1.65%로 '09년 대비 약간의 증가률을 보였으나, 여성육아휴직자수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육아휴직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년도	합	남	여
2009	19,431(100)	208(1.07)	19,223(98.93)
2010	22,134(100)	365(1.65)	21,769(98.35)

출처 : 고용보험통계현황, 2010

- 육아휴직은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책의 핵심요소임.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여성의 육아전담, 가사전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분담, 육아분담이 필수적임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목표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증진시켜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

###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육아기 남성근로자(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

### □ 이행방안

- 남성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남성육아휴직자를 위한 플러스 휴직수당지원
  -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3개월 간 서울시특별지원금 지원  
(중앙 40% + 서울시 60%의 육아휴직전 통상임금 보장)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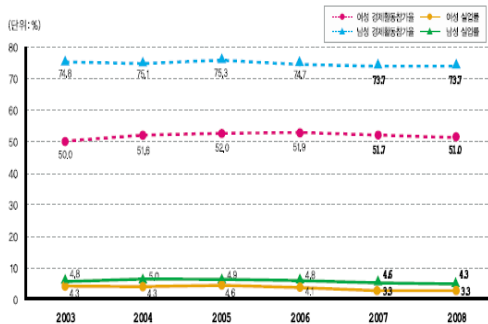
- 남성육아휴직자를 위한 플러스 휴직수당지원
  - [중앙정부 안]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통상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
  - [서울시 안] 육아휴직전 임금의 일정비율(60%)은 서울시에서 플러스 지원함으로써 육아의 부담이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대폭 지원
    - ⇒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3개월 간 서울시특별지원금 지원  
(중앙 40% + 서울시 60%의 육아휴직전 통상임금 보장)

# 직무공유(Job Sharing) 제도를 통한 일가정양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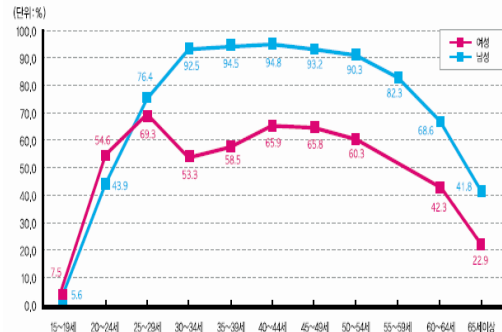
## 1. 현황 및 실태

- 서울의 여성경제활동인구 약 2,167천 명(2008)으로 전국 비교,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수준이나, 실업률 역시 높음.
-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네덜란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0.6%와 비교해 보면 무려 20% 가까이 낮음
- 서울의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22.7%임. 스웨덴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5.0%에 불과함.

서울시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서울시여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서울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M자형 곡선으로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sup>2)</sup>이 20대와 40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 20대 후반에서 최정점을 보인 후 30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대 후반에서 저점을 보이고 40대 초반에 다시 상승했다가 서서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출산 및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30대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워 노동시장을 이탈한 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40대에 들어 다

2)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한 사람과 일자리를 찾아보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

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함

- 네덜란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들이 가정에 소홀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 예컨대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개념)으로 불리는 유연근무제(또는 탄력근무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임.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직무 공유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공유직으로 전환되는 일자리 지원(연 300개)

- 2011년 300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사업성과가 좋을 시 매년 20%씩 확대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1) 세부 추진과제

- 직무 공유(job sharing)는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근로시간조절 통해 인건비절감 및 인력 구조조정 방법으로 사용

- 직무 공유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 한 사람의 직무를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해 잉여 인력의 해고를 회피하는 유럽식 인력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법임
- 직무 공유는 직무를 분할해 한 사람의 풀타임 직무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전체 구성원의 총량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와는 다른 개념임
- 사업 시작 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신규 직무공유 근로희망자(파트타임 구직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서울 지역 경제 단체 대상으로 직무공유제 도입 희망업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함
- 직무 공유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공유직으로 전환되는 일자리 지원(연 300개 정도)
- 20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직무공유제 도입 희망 업체와 신규 직무공유 근로희



망자(파트타임 구직자)를 파악 후 매칭

- 직무 공유적으로 전환되는 일자리 1개당 월 20만원 보조금 지급

## 2) 기대효과

### □ 사회적 측면의 기대효과

- 육아기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증진시킴
- 여성 취업을 활성화시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 개인적 측면의 기대효과

- 육아기 여성근로자는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양육시간 확보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음.
- 고용유지 효과와 더불어 고용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직무 공유로 하나의 전임직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므로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기업 측면의 기대효과

- 기업은 직무 공유를 통해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제고
- 기업의 공동체의식 고취 및 사회문제해결에의 동참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음
- 고용유지 효과로 인하여 기업의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 추진방법

- 1단계 : 2012년부터 직무 공유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공유직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300개에 대하여 일자리 1개 당 월 20만원씩 보조금 지급
- 2단계 : 사업성과가 좋을 시 매년 20%씩 직무 공유직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확대

※ 서울시에서 직무공유가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녀양육기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형태 선택의 다양화(공무원대상)

### 1.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4.2%에 머물고 있음.

- 육아휴직은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산대책의 핵심요소임. 그러나 공무원의 육아휴직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임.
- 육아휴직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꼽히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율이 낮다는 것은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훨씬 더 이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도임을 의미함.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 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제도의 실행이 필요함.
- 육아휴직 사용 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009년 서울시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률 현황

육아휴직 이용	대상자수	이용자수	이용률
서울	5,891	835	14.2
경기	7,052	1,132	16.84
전국	44,524	4,330	9.73

자료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용률 저조한 상황

- 육아휴직은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산대책의 핵심요소임. 그러나 공무원의 육아휴직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임.
- 특히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이용률은 1%(서울시 공무원 육아휴직이용률 자료로 대체). 남성공무원의 육아 휴직 이용률(1%)은 여성공무원(29.3%)의 1/27에 불과함.
-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여성의 육아전담, 가사전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분담, 육아분담이 필수적임

- 그러나 대부분의 육아 담당자가 여성이라는 사회통념은 공무원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목 표

- 육아휴직 사용 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증진시켜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킴.

### □ 대 상

- 서울시 재직 남녀 공무원 중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시공무원

### □ 이행 방안

-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대상 : 우선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및 점차 대상확대  
(만 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있는 서울시 남녀공무원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할 수 있도록 함)
-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의 범위에서 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① 연속해서 한 번에 사용하거나 ② 분할에서 사용할 수 있

으며, ③ 육아휴직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함.

- 육아휴직 사용 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육아의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생산성을 증진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강화를 통한 일가정양립지원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증진시켜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
- 서울시 재직 부부 공무원 중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부부공무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에 재직 중인 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편은 1개월 휴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행률을 부서장 목표관리제에 포함

#### □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도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있는 서울시 재직 남녀 공무원 대상, 자녀 출산전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휴가나 초과근로시간 저축하여 육아기에 육아휴가로 활용하도록 함.
  - 자녀 출산 3년 전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시간을 저축하여 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녀 출산 3년 전부터 연월차 휴가를 저축하여 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저축해둔 시간을 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출산장려효과가 기대됨.
  - 여성 근로자 활용 측면에서,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통해 인력 손실을 줄이고,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생산성을 증진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추진부서

- 행정국

##### □ 추진방법

- 1단계 : 서울시 시행(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후 '12년부터)
- 2단계 : 법제화 후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전국적 시행('13년부터)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1년까지 법으로 보장되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제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기업연합 보육 지원

### 1. 현황 및 실태

#### □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신뢰할만한 보육기관은?

-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질 높은 보육 기관을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무도중 갑작스럽게 호출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  
→ 따라서 워킹맘들은 가급적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육아를 원함
- 반면, 일부 기업들은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 제한(층 위치 등)의 부담으로 설립이 곤란한 상태
- 서울시 직장보육(의무사업장) 서비스 제공 현황: 78%

(단위 : 개소, %, '09년 12월 기준)

계	제 공				이행률	미이행
	소 계	설 치	위 탁	수 당		
204	160	94	15	51	78%	44

※ 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곤란 시 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

- 상시 여성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연합 어린이집 확충 필요
- 초등학교 이후에는 급식지원, 학교 청소 등 아이 학교 지원에 대한 부담, 방학 동안 아이 케어에 대한 부담을 호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워킹맘/워킹대디가 믿고 맡길수 있는 검증된 보육기관 확충

- 워킹맘/워킹대디는 직장에서 가까우면서도 고품질의 어린이집을 원하므로 기업의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

- 워킹맘/워킹대디의 수가 일정 수준이상 있으나 독자적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 □ 초등학교 이후 자녀 둔 워킹맘을 위한 방학중 아이 돌봄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방학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워킹맘/워킹대디가 업무에 집중할수 있고, 아이들은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
- 다자녀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우선적 기회를 제공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기업 연합 어린이집 장소 지원

- 독자적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기업 중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연합하여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일부 기업들은 연합하여 푸르니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
- 중견기업들이 연합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면 서울시는 적절한 장소를 장기 임대하여 기업들에게 제공
- 워킹맘/워킹대디가 아이를 케어하기 쉽게 공영주차장의 주차비를 50% 할인(어린이집 운영시 반드시 주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워킹맘 의견)
- 기업들은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

#### □ 응급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가 업무상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육아 공백을 임시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 서울시가 신분이 확실하고 훈련받은 육아 도우미 풀(Pool)을 운영
-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면 1시간 이내 필요한 인력을 원하는 장소로 파견시키는 서비스를 운영
- 수익자 일부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



□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근로자의 자녀들이 방학동안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수익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영어 캠프, 과학 캠프, 미술관/박물관 투어, 스키캠프, 공연 투어 등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연차별 운용방향

추진과제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연합 어린이집지원	• 지원 기준 마련 및 공지 • 1개 선정 시범운영 및 지원	• 2개 선정 및 지원	• 3개 선정 및 지원	• 3개 선정 및 지원	• 3개 선정 및 지원
응급 돌봄 서비스	•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육아 도우미 훈련	• 서비스 실시 • 시스템 개선	• 서비스 계속 실시	• 서비스 계속 실시	• 서비스 계속 실시
방학 프로그램 지원	• 5~6개 프로그램 기획	• 2~3개 프로그램 운영	• 5~6개 프로그램 운영	• 5~6개 프로그램 운영	• 5~6개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소요예산

추진 과제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연합 어린이집지원	(3백평 월세 15백만원 기준 1곳)	(3백평 월세 15백만원 기준 2곳)			
응급 돌봄 서비스	3,000만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3,000만원 (100명 훈련 인당30만원)	500만원 인건비의 50% 지원 (시간당 1만원 기준 연간 1천 시간 사용)	5,000만원 인건비의 50% 지원 (시간당 1만원 기준 연간 1만 시간 사용)	5,000만원 인건비의 50% 지원 (시간당 1만원 기준 연간 1만 시간 사용)	5,000만원 인건비의 50% 지원 (시간당 1만원 기준 연간 1만 시간 사용)
방학 프로그램 지원	5~6개 프로그램 기획	경비의 50% 지원	경비의 50% 지원	경비의 50% 지원	경비의 50% 지원

##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 1. 현황 및 실태

- 기업이 가족친화정책을 도입하고자 해도 체계적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사례가 미흡
  -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HR 컨설팅’ 2010년 상반기 현재 약 300개 실시(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에 위탁)
  -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실시 중(2009년에는 20개 기업 및 기관이 받은 상태)
  - 서울시 2009년 20개 기업, 2010년 매뉴얼개발, 100개 기업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단편적 인증 또는 컨설팅보다는 3~5년 간 장기적 관리를 통해 가족친화정책의 정착을 지원할 필요
  - 따라서, 가족친화정책과 관련된 기업의 전략적 목표(최소한의 도입 vs 전면적인 가족친화기업 지향)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 필요
    -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 목표를 달성 하도록 추가 컨설팅 실시

### 2. 목표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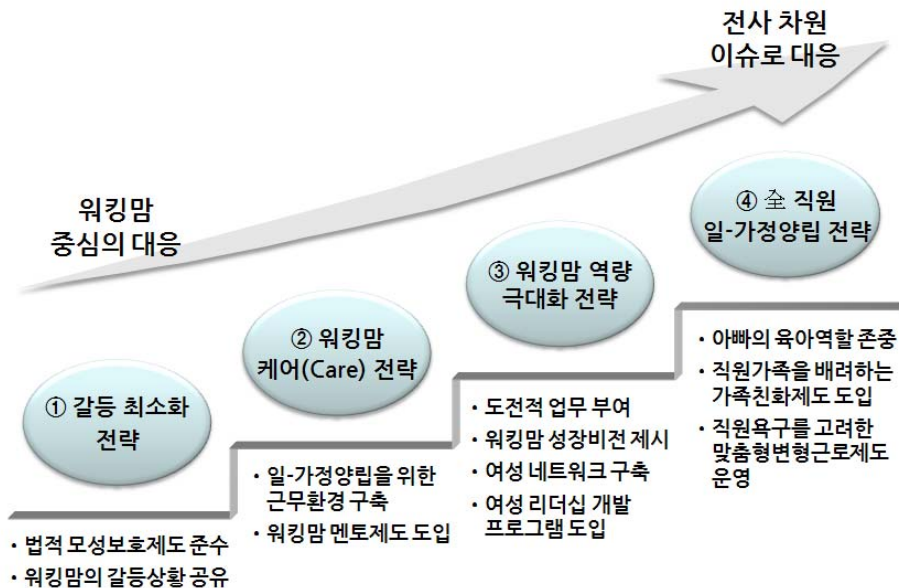
-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부합하는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도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특히,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투입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 이를 통해, 가족친화기업문화는 대기업에 국한된 논의라는 오해를 불식
  - 경영진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정책의 도입방법이나 자원투입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워 도입을 지체하는 기업 최소화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가족친화기업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여성인력의 규모 및 직급분포를 고려한 기업마다 차별적인 접근이 필수

- 또한, 투입자원 규모 등 기업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어느 수준까지 가족친화정책을 도입할 것인지 전략적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체계화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별 컨설팅을 통해 적용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 세부 추진방안(예시)



- 이를 통해, 각 기업이 가족친화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도입, 실행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① 갈등최소화전략 및 ② 워킹맘 케어전략에 맞춘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기업은 여성인력 규모에 따라 4단계 전략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운용방향

추진과제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컨설팅 (중소기업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개 중소기업 선정 및 컨설팅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년도기업 중간 점검</li> <li>• 2차 30개 중소기업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년도 기업 최종 점검</li> <li>• 2차년도 기업 중간 점검</li> <li>• 3차 30개 중소기업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년도 기업 최종 점검</li> <li>• 3차년도 기업 중간 점검</li> <li>• 4차 30개 중소기업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년도 기업 최종 점검</li> <li>• 4차년도 기업 중간 점검</li> <li>• 5차 30개 중소기업 선정</li> </ul>

## 서울형 가족친화선도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기존사업 명칭 : 여성고용환경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1. 현황 및 실태

#### □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의 필요성

-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아직 우리사회와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제도의 적용 정도는 초보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사업체(대체로 소규모)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형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기업이 우수여성 적극고용 및 장기적 고용관계 유지 위한 여성 고용에 필요한 인프라 및 제도 미흡

- 여성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여성 휴게실, 유축실, 직장내 보육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
- 여성 직원의 유지 및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뿐 아니라, 유연근무제 도입, 여성 부서원 관리를 위한 리더십 교육 등 제도 도입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 스스로 도입하기 쉽지 않음
- 아울러 여성을 지속 고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시되어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고용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고안 및 서울형가족친화기업 발굴

- 서울형 가족친화 선도기업(여성고용우수기업)의 선정 기준을 개발 및 제시

- 여성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
- 단순히 여성 고용 증가보다는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
- 서울형가족친화 선도기업발굴 및 홍보 확산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서울형 가족친화 선도기업 선정

⇒ 서울시 가족친화직장조성지원사업(2010)으로 진행한 ‘서울형가족친화경영 매뉴얼’에  
 준해 가족친화 선도기업의 평가지표 구체화

#### 1안) 서울형 가족친화 선도기업 선정기준(예시)

- 탄력적근무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 부양가족지원제도
- 근로자지원제도
- 가족친화문화조성
- 서울형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조성가이드  
 ⇒ 서울형가족친화제도시행가이드(2010년) 적용하여 가족친화 지표 개발

⇒ 많은 수의 여성을 고용하면서도 여성을 장기적으로 지속 고용하는 기업 여성 피고  
 용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

#### 2안) 서울형 가족(여성)친화 선도기업 선정기준(예시)

- 총 인원 10명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정규직 여성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정규직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 전체 피고용인 중 20% 이상이 여성인 기업
- 여성 피고용인 수가 최근 3년 동안 30명 이상 증가한 기업

## □ 가족친화선도기업을 위한 시설투자 및 컨설팅 제공

- 시설 투자 지원
  - 여성 휴게실, 유축실 시설 구축 및 개선시 서울시에서 경비 지원
  - 여러 개의 여성 고용 우수 중소기업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구축하는데 서울시가 비용 지원
- 여성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 컨설팅 제공
  - 여성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을 서울시가 지원
  - 유연근무제도 도입, 여성 직원 경력관리, 여성 부서원의 조직관리를 포함하는 리더십 교육 등 포함

## □ 가족친화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가족친화선도기업의 물품 우선 구매/입찰 시 인센티브
  - 서울시의 물품 구매시 가족친화선도기업의 물품 우선 구매
  - 서울시 공공 물품 입찰시 가족친화선도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 가족친화선도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 기간 5년
  - 지원방법 : 일자리플러스 참여기업 특별지원사업과 병행추진
- 가족친화 선도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해외 판로지원 : 해외 전시회, 해외 통상사절단, 인터넷무역 참가
  - 국내 판로지원 : 공동구매 상담회 참가, 대형 유통채널 입점 지원
  - 지원방법 :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조달청 입찰 가산점등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지원 및 확대

## □ 가족친화선도기업 발굴 및 홍보지원

- 가족친화선도기업 지표에 따른 우수기업 발굴
- 우수기업 홍보, 선도기업의 이미지 개선 지원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운용방향

추진과제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설 투자 지원	시설투자지원 • 휴게실, 유축실 구축지원) • 보육시설 구축 ( 개 기업)	시설투자지원 • 휴게실, 유축실 구축지원) • 보육시설 구축	시설투자지원 • 휴게실, 유축실 구축지원) • 보육시설구축	시설투자지원 • 휴게실, 유축실 구축지원) • 보육시설구축	시설투자지원 • 휴게실, 유축실 구축지원) • 보육시설구축
제도 컨설팅제공	• 30개 기업 대상 컨설팅	• 30개 기업 대상 컨설팅	• 50개 기업 대상컨설팅	• 50개 기업 대상컨설팅	• 50개 기업 대상컨설팅
선도기업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선도기업발굴 및 홍보 (10개 기업)	선도기업발굴 및 홍보 (15개 기업)	선도기업발굴 및 홍보 (20개 기업)	선도기업발굴 및 홍보 (20개 기업)	선도기업발굴 및 홍보 (20개 기업)

##### □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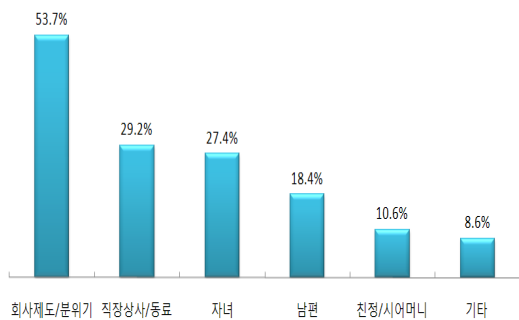
# 워킹맘 상담실 'I love Working Mom'

## 1. 현황 및 실태

### □ 워킹맘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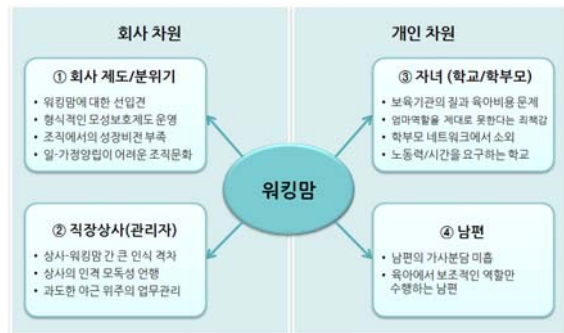
- 최근 대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하는 추세
- 특히, 워킹맘은 자녀, 육아도우미, 가족(남편/시부모), 직장상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

워킹맘의 주요 갈등대상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10.7)

워킹맘의 주요 갈등내용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워킹맘의 입장에서는 출산/육아 및 직장에서의 성장비전, 경력단절 등과 관련된 고충 해소 및 해결방안 모색

- 워킹맘 뿐 아니라, 부부 상담, 자녀 상담을 함께 제공
- 상담사의 조언 뿐 아니라 서울시 여성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멘토링 제공

-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저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워킹맘의 직장생활 및 경력단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워킹맘의 고충을 파악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상담 및 조언을 통해 워킹맘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및 워킹맘 관련 정책에 반영

### 3. 세부 추진과제(사업설명 포함) 및 기대효과

#### □ 서울시에 워킹맘 전용 상담실 'I love Working Mom' 개설

-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가능
- 워킹맘 및 자녀 동반 상담 제공 (자녀 심리검사 등 포함)
- 상담실을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네트워크 구축
- 서울에 근무하는 기업 고직급/전문직 여성을 중심으로 멘토링 그룹 구축
- 상담을 필요로 하는 워킹맘에게 상담실에서 조언을 제공할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멘토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상시적인 멘토링 제공
- 이를 통해, 워킹맘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슬기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워킹맘의 행복한 직장생활은 저출산과 경력단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운용방향

추진과제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담실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시스템 구축</li> <li>• 상담실 인테리어</li> <li>• 상담사 2인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유지 관리</li> <li>• 상담사 3인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유지 관리</li> <li>• 상담사 3인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유지 관리</li> <li>• 상담사 3인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유지 관리</li> <li>• 상담사 3인 고용</li> </ul>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유지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유지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유지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유지 관리</li> </ul>

#### □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

□ 연차별 소요예산

추진과제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담실 개설	1,000만원 (온라인상담 시스템 구축) 1,000만원 (상담실 인테리어) 12,000만원 (전문상담사 2인)	200만원 (온라인상담 시스템 유지비) 18,000만원 (전문상담사 3인)	200만원 (온라인상담 시스템 유지비) 18,000만원 (전문상담사 3인)	200만원 (온라인상담 시스템 유지비) 18,000만원 (전문상담사 3인)	200만원 (온라인상담 시스템 유지비) 18,000만원 (전문상담사 3인)
네트워크 구축	1,000만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200만원 (시스템 유지비)	200만원 (시스템 유지비)	200만원 (시스템 유지비)	200만원 (시스템 유지비)



가족에 대한 가치가 변하면 아이가 태어난다!

정책영역 : PART **IV**

생각·가치 변화



## 생각·가치 변화

생각·가치 변화				
생애 주기	중앙정부 (새로마지 2차)	서울시 (민선 4기)	서울시 신규 (민선 5기)	
결혼			이동청소년 행복가정 준비 프로젝트	
		대학연계결혼준비교육 실시 (미시행)	부모됨이 즐거운 서울 만들기	
임신 · 출산		결혼준비 교육과 부담없는 결혼문화조성	저출산대응 가족친화정책교육	
		엄마 젓 먹이기 권장사업		
		지하철 역사 내 유아수유실 운영		
		가족 친화 프로그램 실시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저출산 극복 교육 및 홍보사업	저출산관련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자녀 양육		육아여성을 위한 공원시설 개선	가족친화 지역사회만들기	
		지하철 구간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서울국제 가족영상축제 개최 지원		
		가정의 달 가족문화축제 운영		
		직장 내 가정의 날 지정, 운영		
		대학연계결혼준비교육 실시 (미시행)		
		아빠의가사참여문화확산캠페인 (미시행)		
			기업관리자의 조직관리 교육강화	
			출산이 자랑스러운 서울만들기	

## 생각·가치 변화 세부내용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용
1	[민선5기] 아동청소년 행복가정 준비 프로젝트(신규)	-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 생애 초입부터 결혼 및 부모되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 실시 -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술 및 습관 익히기 훈련기회 제공
2	[민선4기] 대학과 연계 결혼준비 교육실시(미실행)	- 대학생 및 미혼남녀	- 저출산인구교육, 혼수준비, 출산과 양육, 부 부간 가사분담, 부모교육, 관련 컨설팅 등 - 대학교과목 편성시 시비로 강사비 지원
3	[민선4기] 결혼준비교육과 부담없는 결혼문화조성	- 미혼남녀	- 결혼준비교육 및 만남의 장 마련 (상, 하반기 1회씩) - 건전한 결혼문화조성 홍보 캠페인 전개
4	[민선5기] 부모됨이 wmf거운 서울만들기	- 대학생 및 모든 남성	- 대학연계 결혼준비 교육 - 아빠육아체험
5	[민선5기] 저출산 대응 가족친화정책 교육	- 공무원, 일반인	- 공무원 저출산·가족친화정책교육 - 일반인 저출산·가족친화 문화조성 교육
6	[민선4기] 엄마젓먹이기 권장사업	- 임산부, 영유아, 일반시민, 공공시설	-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최일선에서 실천하도 록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 - 모유수유 인식개선 홍보 및 행사 개최 - 공공시설 모유수유실/착유실 설치지원
7	[민선4기] 지하철 역사 내 유아수유실 운영	- 모유수유여성	- 고객상담실 및 5678센터 2단계 구축계획에 따라 28개소 추가 설치 - 소파, 유아용침대, 공기청정기, 에어타올, 정수기 등 편의시설구비
8	[민선4기]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정기강좌)		-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고 민주적인 가족관 계의 증진을 통한 시민의 건강가정 만들기 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및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정기강좌(부모교육, 가족친화연계프로그램, 가족심리검사, 가족기살리기)운영
9	[민선5기] 가족친화음악회 개최		- 가족친화기업 직원대상으로 매년 음악회 개최
10	[민선5기] 가족친화 지역사회 만들기	- 지역사회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및 조직	- 지역사회가족연대 구축 타당성 검토사업 - 지역사회가족연대 구축 및 선포사업 - 지역사회가족연대 구축 사업확대 - 지역사회가족연대 사업평가



연번	정책명	정책대상	내 용
11	[민선4기] 지하철 구간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보호의자, 유아용소 변기, 유아용 세면대 설치
12	[민선4기] 육아를 위한 공원시설 개선		- 공원내 노후된 화장실을 여행(女幸)화장실로 개선
13	[민선 4기] 저출산 극복 교육 및 홍보사업		- 저출산 극복 대시민 인식운동 전개 - 저출산 극복관련 시민참여공모전 개최
14	[민선5기] 저출산관련 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	- 일반시민	-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홍보 사업 - 출산양육 대시민 인식개선 사업 - 서울시 저출산 대응 포럼 개최
15	[민선4기]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개최 지원	- 일반시민	- 매년 10월(약 1주일) 가족을 주제로 하는 국내외 영화상영, 시민가족참여 각종 이벤 트 행사 등
16	[민선4기] 가정의 달 가족문화축제 운영	- 일반시민	- 가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17	[민선4기] 직장 내 가정의 날 지정운영	- 공무원	-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은 오후7시 이전 퇴 근 의무화, 초과근무승인 불허원칙
18	[민선4기] 아빠의 가사참여 문화 확산 캠페인	- 서울시 소재 관공 서, 기업체, 학교	- 가사육아관련 아빠교육실시 - 아빠의 가사·육아참여 이벤트 실시
19	[민선5기] 워킹맘 상담실 'I Love Working Mom'(신규)		- 워킹맘 뿐 아니라, 부부상담, 자녀상담을 함께 제공 - 상담사의 조언뿐 아니라 서울시 여성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멘토링 제공
20	[민선5기] 기업관리자의 조직관리 교육강화(신규)		- 가족친화기업문화의 사업부 및 기업의 수 준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함
21	[민선5기] 출산이 자랑스러운 서울만들기	- 미혼모부	- 입양, 아동양육 미혼모부 관련 전반적 실태 조사 - 상담거점센터 확보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전달체계구축

## Sweet Home Start Project

### - 아동청소년 행복가정 준비 프로젝트 -

#### 1. 현황 및 실태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애 초입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부터 시작
  - 저출산 문제해결은 법과 제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기회를 개입시킨 적극적 선택의 하나로 제시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임
  - 보건사회연구원(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혼인장려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국가정책’ 실태조사 결과, ‘청년실업 해소’가 36.1%로 가장 많았고, ‘서민층의 주택 용자’ 18.9%, ‘혼인 및 출산가치관 확립’ 17.8%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30년 OECD 평균 출산율 1.7명 목표달성은 현재 아동세대들의 출산력 향상에 의해 도달 가능. 이들 대상의 장기적·사전예방적인 가치관 형성 교육이 필요.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는 생애 초입기 아동 청소년기의 학습에 의해 결정
-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가치형성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지식적, 정서적, 실천적인 다양한 학습의 장 제공 필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가정내 가사일에 대한 전체 가족 성원들의 부담문화 확산 필요. 아동청소년기부터 인식 교육 및 담당 가능한 가사기술을 습득하고 부담함으로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정문화 구축 가능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생애초입부터 결혼 및 부모되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대상 연령 및 개인 욕구에 맞춰 결혼 및 부모되기에 대한 올바른 가치형성 및 인식교육 실시
- 방과후 교실,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등을 활용한 인식 및 가치교육 실시
-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계획 및 life cycle 생활설계 컨설팅 및 계획 준비

### □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술 및 습관 익히기 훈련기회 제공

-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사 및 일상생활 습관을 익힐 수 있는 훈련기회 제공
- 가사기술 습득 훈련, 저축, 용돈생활 등 경제생활 훈련, 인간관계 기술 훈련, 시간 관리 훈련, 자립심, 책임감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생애 초입부터 가정에 대한 인식교육을 통한 다문화 가정, 입양가정, 한부모 가정 등 폭넓은 이해와 사회적 포용 기반 구축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아동청소년 행복가정 준비를 위한 '가정생활생애학습시스템' 구축

- 학교, 가정, 지역사회 삼중교육(three-fold education) 통합 시스템 구축
- ① 가정교육
  - 가정에서 부모(혹은 조부모)를 통한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가치 및 인식교육 지원
  -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남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가사훈련 및 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초중등 학생 체험활동 연계 프로그램 지원(남녀공동일상가정생활, 온가족이 함께하는 협동가사)관련 체험활동 지원
  - 어머니 학교, 아버지학교, 부부교실 등 다른 교육지원체계와 연계

## ② 학교교육

- 초·중·고, 대학교 교육과정(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내 결혼 및 부모되기 등과 관련된 가치 교육 내용을 포함(서울시 교육청 연계)
- 교과과정 내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보육시설, 그룹홈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육아, 가사체험 훈련 프로그램 마련, 체험학습 수행평가 등과 연계
- 대학교 교양필수 과정으로 '이성관계와 결혼', '행복한 가정생애주기 설계 및 준비' 등 결혼 및 부모되기 관련과목 신설 및 지정 (서울시립대 시범)
- 사회봉사 학점제와 연계하여 체험교육 실시

## ③ 지역사회 교육

-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체험활동 인증제', '자원봉사활동' 등과 연계 결혼 및 부모되기 올바른 가치형성에 필요한 현장학습 및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교환학습 프로그램으로 학대, 폭력 등 취약가정 아동 및 보육원 아동들의 건강한 모범가정에서 주말생활 체험 프로그램(모범가정 서울시 선정)
- 지역사회 중심 가치 및 인식교육 이수 및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기 일정기준 이상 실천 및 교육 이수시 '서울시 보금자리 주택 청약 가점'과 연계 등
- 대학(전문대, 전문학교 등), 종교단체, NGO 단체 인프라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입양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인식 및 사회통합 교육 지원

## □ 서울시'가정교육지원'조례 제정

### □ 기대효과

- 생애초입부터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 정서 및 생활습관 등이 실제로 준비됨으로 건강한 가정 육성 증진
-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
- 부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창의적 인성교육의 효과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주요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정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매뉴얼개발	1,000	400	300	300	-	-
가치 및 인식교육 인력양성	1,500	300	300	300	300	300

## 부모됨이 즐거운 서울 만들기

### 1. 현황 및 실태

#### □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 15세~24세 청소년자녀가 고민이 있을 경우 ‘아버지와 상의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 자녀가 아들인 경우조차 아버지가 주된 상담자라고 답한 비율은 5.6%에 불과(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8)

#### □ 여성의 이중부담과 성역할분담의식 여전

- 1999년 서울시 맞벌이가구 남성의 가족 일 시간이 28분에서 2009년 41분으로 10년 동안 13분 증가하는데 그침. 맞벌이가구 여성의 2009년 가족 일 시간 3시간27분과 비교하면 2시간 46분이 더 적음(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양성평등 가정문화 정착을 통한 여성의 일-가정양립 지원

- 남성의 가사·자녀돌봄 참여 지원 및 자녀와의 친밀성 증진 지원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대학연계 결혼준비교육

- 사업목적 :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기반마련  
-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1) 취업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있지만 (2) 결혼 후의 행복

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더욱이 가사와 육아부담을 여성이 안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임.

- 이성 친구를 만날 때 결혼과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협력을 가상의 상태 안에서 실제 경험을 한다면 부모세대에서 보이던 부부관계와 아주 다른 새로운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노력하게 될 것임.
- 사업대상 : 대학생 및 미혼남녀
- 사업내용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와 대학 간의 협력 하에 정책전문가(서울시)와 교육자(대학)로 T/F를 구성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사와 양육을 즐겁게 분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내용 : 저출산 인구교육, 출산과 양육, 부부간 가사분담, 부모교육 등
  - 기존교육과의 차이점 : 결혼가치, 일-가정 양립, 부모-자녀관계 등에 대한 가치와 태도형성을 위해서는 이론강의가 아니라 실제 가상의 가정 내에서 부부가 고민해야 하는 일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풀어 나가는 체험학습이 필요함
- 추진체계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축이 되어 소수의 대학에서 시험적용하고, 평가 및 보완 후에 서울시내 전 대학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연별(또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함. 대학별 1개 강좌만이라도 관심과 분위기 형성으로 충분함.

## □ 아빠육아체험

- 사업목적 : 남성의 자녀양육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가족참여 증진
- 사업대상 : 서울시 미취학가구 양육가정의 모든 남성
- 사업내용 :
  - 대상 : 서울시 소재 관공서, 기업체, 학교등과 연계하여 추진
  - 내용 : ‘자녀양육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특강 형식으로 진행할수도 있으며, 아빠놀이와 선발대회, 아빠 육아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등 문화체험활동으로 진행할수도 있음.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율주제를 선정하여 추진
- 사업추진체계 : 서울시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

## □ 기대효과

-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형성
- 가족 내 육아활동에 있어서의 성 형평성 증진

####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예산

구 분	2011	2022	2013	2014
대학연계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운영	50백만원 (2개 대학)	100백만원 (4개 대학)	200백만원 (8개 대학)	200백만원 (8개 대학)
대학연계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50백만원			
아빠육아체험 (시비100%)	12,5백만원	12,5백만원	12,5백만원	12,5백만원



## 저출산 대응 가족 친화 정책 교육

### 1. 현황 및 실태

#### □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필요

- 저출산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나 전체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비중이 크지 않고 정책 담당자나 일반 시민들의 가족 친화적 가치 인식 정도도 낮음
- 공공부문과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제도(육아휴직, 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등)를 도입하고 있으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미정착으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결혼, 출산 아동 양육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가치관 교육, 가족 친화적이고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장려 및 가족친화적 지역 만들기 등이 추진되어야 함(손문금, 서울시저출산요인분석)

#### □ 학교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필요

- 중앙정부 제 2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2015)에서도 다양한 교육 채널을 통해 출산가치 인식 전환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제 2기 기본계획에서 초등학교 교사용 및 대학생용 인구교육 지침서, 교재 개발 등 학교교육과, 민간단체, 종교단체,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추진할 것임. 공직자(중앙공무원교육원, 직장교육) 대상 교육을 지속 강화할 예정인바 서울시에서도 공무원 및 일반시민 대상 저출산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 □ 시 공무원 대상 저출산 대응 정책 교육 강화 필요

- 서울시 저출산 관련 교육은 일반인, 공무원, 기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서울시 저출산 교육은 체계적인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저예산, 일회성 교육이나 캠페인 사업 비중이 높아 교육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움. 공무원

대상 교육은 추진 실적이 미흡하며 교육의 지속성이나 교육 내용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시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대상으로 저출산 교육을 실시하면 가족친화적인 근로문화 조성 및 가정 내 성평등한 가사분담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특히 가입기에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출산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 민선 4기 서울시 저출산 관련 교육 현황

교육 대상	강의 방법	주요 내용 및 실적	추진기관
일반인	- 강의 - 캠페인	- 가족에 대한 가치관 확립 -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업	- 전문강사기업방문 - 가족친화제도컨설팅	-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 - CEO, 관리자, 근로자 대상 - '09년 컨설팅 10개, 교육 104개 기업 166회 7,880명	대한상공회의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무원	- 시공무원교육원 양성평등교육과정 - 외부기관위탁교육 - 강사파견	- 가사노동의 영역별 남녀분담실태 -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유도 방안	-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공무원 대상 저출산 교육 의무화

- 시, 자치구, 출연기관 공무원 대상 저출산 대응 가족친화정책 교육 의무화
- 가입기 공무원 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제공
- 저출산 교육 이수 점수 인정 및 자치구 정책 평가에 반영

### □ 기업 대상 가족친화 교육 강화

- 가족친화기업 모니터링 지표에 교육이수 지표 포함
- 가족친화교육을 시행한 기업에 인센티브 또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 3.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공무원 저출산·가족친화정책 교육

- 교육 대상 : 서울시, 자치구, 출연기관 공무원
- 교육 과정 : 1일 일반 과정
- 교육 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교육 내용 : 「가족기능의 변화와 미래가족의 전망」  
「양성평등가족 감수성 증진」  
「일·가족 양립 국내외 정책 사례」  
우수기업 및 시설 현장답사  
Action Plan 수립

#### □ 일반인 저출산·가족친화 문화조성 교육

- 교육 대상 : 자치구 남녀 지역 주민(생애주기별로 구분)
- 교육 과정 : 1일 일반과정 혹은 2시간 과정
- 교육 기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교육 내용 : 「가족 가치관과 자녀 출산권리」  
「가족 내 성평등한 가사분담」  
「일/가족/여가 양립이 가능한 삶의 조건」 외

#### □ 기업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교육 및 컨설팅 : 근로자 교육

- 교육 대상 : 기업경영자, 인사/행정관계자, 근로자
- 교육 과정 : 1일 일반과정
- 교육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외
- 교육 내용 : 「일·가정 양립 국내외 정책 사례」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 및 시설 현장답사

#### □ 기업 가족친화 컨설팅

- 가족친화기업 조성 매뉴얼 개발

- 가족친화 기업 우수 사례 적용

□ 기대효과

- 공무원, 기업, 일반인 대상 교육으로 저출산 대책 효과 증진
- 일 중심 사회에서 생활 중심 사회로의 변화
- 직원의 근무만족도 제고, 육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
-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적 근로문화 변화로 여성 인력의 활용 제고

4. 연도별(2011-2014)운영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공무원 저출산 교육	800명	1,000명	1,200명	1,200명	1,300명
기업 가족친화 교육	200회	250회	280회	300회	350회
기업 가족친화 컨설팅	100회	120회	150회	150회	180회
일반인 저출산·가족친화 교육	100회	120회	130회	140회	150회

□ 연차별 예산

주요 사업	계(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공무원 저출산 교육	110	16	20	24	24	26
기업 가족친화 교육 및 컨설팅	770	120	140	150	180	180
일반인 저출산·가족친화 교육	640	100	120	130	140	150

## 저출산 관련 인식개선 및 정책 홍보

### 1. 현황 및 실태

#### □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임

- 한국의 출생아의 수가 1970년에 101만명이었던 것이 2009년 44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38만명, 2050년에는 23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2010)
-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05년 1.08명, 2009년 1.15명으로 감소함. 이는 OECD 국가 평균 1.7명보다 훨씬 낮은 숫자임(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2010)
-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정도는 OECD 국가들이 평균 GDP의 2.3%('05)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우 GDP의 0.4%('08)에 불과함

- 낮은 출산율은 국가의 발전의 기능 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국민적·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인해 세대 및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초래함

### 2. 목표 및 추진방향

- 저출산 현상의 지속을 방지하고 결혼·출산·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인식개선운동을 통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 저출산 대책 관련 정책 홍보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실시
  - 생명존중사상의 확대와 유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
  - 관련 교육 및 정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

### 3. 세부 추진과제

#### □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 사업

- 사업대상 : 일반 시민
- 사업내용
  - 연중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 및 사업 홍보
  - 코엑스몰 등 국내 중요 행사장에 서울시 저출산 대응 홍보 부스 설치
  - 구청, 주민센터, 예식장 등에서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 인쇄물 배포

#### □ 출산양육 대시민 인식개선 사업

- 사업대상 : 일반 시민
- 사업내용
  - 출산장려정책 및 제도 관련 공모전 개최
  -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출산 경험과 남성의 자녀 돌봄 경험을 주제로 하는 수필 공모전, 사진, 영상물(애니메이션), 블로그 릴레이 추천 사업 등 진행
  - 트위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사례 발굴

#### □ 서울시 저출산 대응 포럼 개최

- 사업대상
  - 정책 전문가, 학자, 연구자, 전공 분야 학생, 유관 기관(기업), 관심 있는 시민
- 사업내용
  -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 및 시행 제도의 실효성 논의
  - 저출산 관련 전시회 개최
  - 관련 연구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 부스 마련

#### □ 기대효과

- 일반 시민들의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신뢰감 증진
-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장래 출산율 회복 기대

- 출산과 자녀양육 중인 젊은 부부들과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지역사회 자원 제공
- 일반 시민들의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가족친화 지역사회만들기

### 1. 현황 및 실태

- 지역사회 가족친화 환경은 출산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2000 년대에 들어서 서울시민이 거주지 생활 환경에 대해 갖는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 지고 있음.

####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 응답자비율 %)

연도	만족	보통	불만족
2003년	33.6	44.3	22.1
2004년	32.1	44.8	23.1
2005년	36.7	42.9	20.4
2007년	40.4	43.8	15.8
2008년	45	41	14

출처 : 서울특별시 통계 자료<sup>3)</sup>를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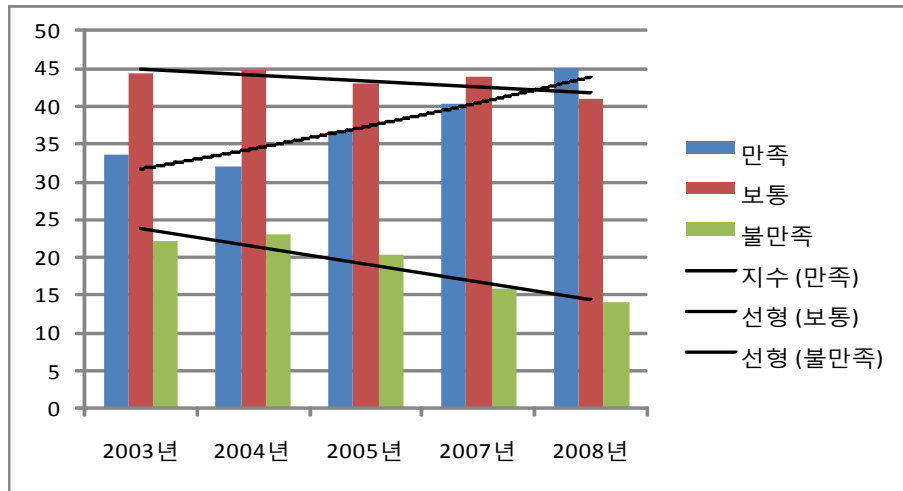
- 그러나 추세를 정확히 살펴보면,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급격히 줄 어드는 반면, 거주지 환경을 '그저 그렇게' 보는 응답자 비율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3) <http://stat.seoul.go.kr/jsp/WWS8/WWS8S8111.jsp?cot=020>



##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 변화 추이

(응답자 비율 : %)



출처 : 서울특별시 통계 자료<sup>4)</sup>를 토대로 재구성.

- 반면, 서울 지역사회에는 이미 유·무형의 수많은 가족지원서비스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연결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가족지원서비스를 할 경우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지역사회가족연대 조직 구축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 지역사회가족연대 구축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실태조사 실시
- 지역사회가족연대 구축 및 선포 : 지역사회가족연대 참가 기관 및 조직 수 확정
- 지역사회가족연대 운영 및 참여 기관의 양적 확대
- 지역사회가족연대 운영과 그 효과 분석을 위한 지역사회가족연대 활동 평가 실시

4) <http://stat.seoul.go.kr/jsp/WWS8/WWS8SDS8111.jsp?cot=020>

### 3. 세부 추진과제

#### □ 지역사회가족연대 구축 타당성 검토 사업

- 사업대상
  - 지역사회 소재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및 조직
- 사업내용
  - 지역사회가족연대 개념 구축
  -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및 조직 실태 파악

#### □ 지역사회가족연대 구축 및 선포 사업

- 사업대상
  -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및 조직
- 사업내용
  - 서울시청 내 지역사회가족연대 연락사무소 설치
  - 지역사회가족연대 활동 원리 구축
  - 지역사회가족연대 시범 사업(1개 구 선정)

#### □ 지역사회가족연대 구축 사업 확대

- 사업 대상
  -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및 조직
- 사업내용
  - 각 지역 별 연대 활동 의제 발굴
  - 지역사회가족연대 참여 기관 확대

#### □ 지역사회가족연대 사업 평가

- 사업 대상
  -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및 조직
  - 서울시청 연락사무소
- 사업내용

- 지역사회가족연대 참여 기관 및 조직 활동 실태 분석
- 지역사회가족연대 활동과 지역사회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간 관계 분석
- 지역사회가족연대 활동과 지역사회 출산율 간 관계 분석

□ 기대효과

-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내 가족생활과 취업생활의 조화
- 가족의 교육·보육 역량 강화
- 가족 기능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

4. 연도별(2011-201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추진부서, 특이사항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추진일정 (개소, 명, 대상범위 등)	가족지원서비스 기관 실태 조사	지역사회가족연대 연락사무소 설치 및 시범 사업	지역사회가족연대 확대 사업	지역사회가족연대 사업 평가
소요예산	3천만원	비예산	비예산	3천만원
소요예산 산식	조사 비용			분석·평가 비용
주관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기업 관리자의 조직관리 교육 강화

### 1. 현황 및 실태

#### □ 조직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 미흡

- 근로자가 회사생활에서 겪는 고충의 대부분이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
-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의 배려 범위와 수준과 관련하여 조직관리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의 조직관리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가족친화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의 경영진 및 관리자의 조직관리/리더십 역량 제고

- 기업 경영진이 가족친화 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업부 및 기업의 수준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업 관리자들에게 유자녀 근로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리더십 포인트를 제공(현재는 관리자와 유자녀 근로자간 인식의 갭이 크게 벌어져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때로는 갈등상황 발생이 빈번)

### 3. 세부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 □ 가족친화경영 최고경영자 과정

- 서울시 지원으로 ‘가족친화경영 최고경영자과정’ 실시(민간위탁사업)
- 임원급 이상만 참여하며, 임원들간 네트워크 형성도 함께 지원

-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 및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경영 수준 진단을 실시  
(서울시는 가족친화경영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코칭을 병행 실시)
- 최고경영자 과정에는 가족친화경영의 개념 이해, 가족친화경영과 재무성과간 관계, 가족친화경영의 주요 방법론 이해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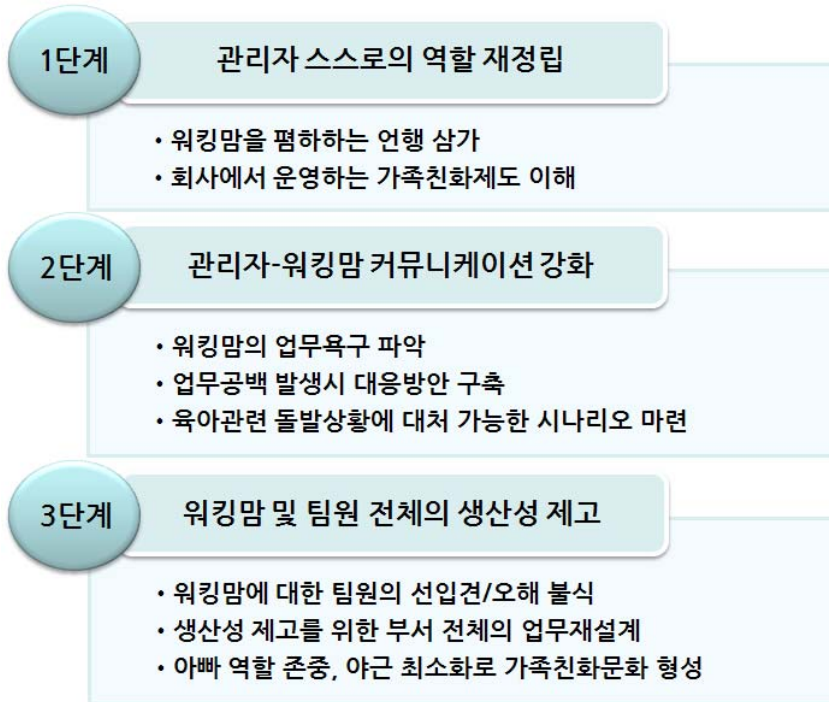
#### 가족친화경영 자가 진단 (예시)

- 가족의 날 실시 여부
- 근로자의 평균 퇴근 시간
-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
- 여성 관리자의 수
- 여성 및 워킹맘 관리를 타깃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 실시 여부
- 여성 퇴직률과 남성 퇴직률간 차이
- 주요 핵심부서에서의 여성 비중
- 유연 근무제 실시 여부 및 활용자 비중
- 가족 지원 프로그램(자녀 교육비 지원, 출산 축하금, 자녀 방학 프로그램 등)의 수 및 지원 대상자 규모 등

#### □ 가족친화기업 관리자 양성 교육

- 서울시가 주최가 되어 '가족친화기업의 관리자 양성 교육' 실시
- 기업의 신청을 받아 관리자(여성 부서원이 많은 관리자)들을 직접 교육
- 여성 비중이 높은 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지원
- 이성간 이해, 여성 폼하 발언 리스트 공유, 여성의 육아 단계별 주요 이벤트 이해 및 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운영

※ 주요 콘텐츠 (예시 : 워킹맘 관리 → 가족친화기업 단계별 관리방안 등)



- 관리자의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조직과 워킹맘의 Win-Win을 기대
- 직장에서 워킹맘의 고충 중 많은 부분이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에 따라 좌우(이해와 배려 뿐 아니라 역량개발, 성장비전 등)

#### □ 가족친화경영 리더십 강사 양성 교육

- 대기업의 경우 다수의 관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의 강사를 양성 지원
- 대기업이 강사 후보를 보내면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관리자 리더십을 강의할 수 있도록 강사를 양성
  - 기존 추진하고 있는 '기업 컨설팅 사업'과 연계

#### 4. 연도별(2011-2014) 운용방향 및 추진부서, 소요예산, 특이사항 등

##### □ 연차별 운용방향

추진과제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족친화경영 최고경영자 과정	• 프로그램 개발	• 5차 과정 운영 (각 차수별 30명 정원)	• 10차 과정 운영	• 10차 과정 운영	• 10차 과정 운영
관리자 리더십 교육	• 프로그램 개발 • 시범 운영	• 10차 운영	• 20차 운영	• 20차 운영	• 20차 운영
강사 양성	• 프로그램 개발	• 강사 60인 (30개 대기업, 기업별 2인)	• 강사 200인 양성 (100개 대기업, 기업별 2인)	• 강사 200인 양성 (100개 대기업, 기업별 2인)	• 강사 200인 양성 (100개 대기업, 기업별 2인)

## 출산이 자랑스러운 서울 만들기

## 1. 현황 및 실태

## □ 국외 입양이 전체 입양사례에서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단위로 입양되는 아동 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입양아동 1,606명 중 국내 입양이 356명, 국외 입양이 1,250명이었음.<sup>5)</sup> 이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외 입양을 국내 입양, 특히 서울 지역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서울시 거주 미혼부모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임.

- 미혼모자 시설 중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2007년 2개에서 2009년 6개로 늘어나면서 그곳 거주 인원도 26명에서 87명으로 급증하였음.
- 미혼모자시설 거주 인원도 동(同) 기간 101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하였음.

## 미혼모자 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명)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시설	
	연도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2007	2	26	5	101
2008	3	47	5	104
2009	6	87	5	120

출처 : '서울특별시 통계 자료'<sup>6)</sup>를 토대로 재구성.

## □ 서울시의 입양가정과 미혼부모 지원을 위한 사업에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요구됨

- 서울시 차원에서 이미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입양 수수료 지원, 일반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보조비 지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5) 보건복지부(2009), 보건복지통계연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6) <http://stat.seoul.go.kr/jsp/WWS8/WWSDS8111.jsp?cot=020>



- 미혼부모 지원 거점기관운영도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구단위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토대로 하고 있는 상황임.
- 낙태 예방 차원에서는 학교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여 혼인에 의하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부끄럽고 사회적 낙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회 인식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 목표 및 추진방향

### □ 중·단기 목표 수립에 맞춰 사업 수행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실제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함

- 단기 목표 : 1차 년도에는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 파악
- 실태조사를 결과를 근거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임신을 출산·양육으로 이어지게 하는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중기 목표 : 3차년도부터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실시
- 서비스 네트워크 지속적 확대 및 점검(미혼모부자 시설 시범 도입)

## 3. 세부 추진과제

### □ 입양, 아동양육 미혼모부 관련 전반적 실태 조사

- 사업대상
  - 미혼 임신 여성, 출산 후 입양 동의 미혼여성, 아동양육 미혼모부
- 사업내용
  - 서울시 거주 입양아, 아동양육 미혼모부 현황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 실시
  - 실제 행해지는 낙태 건수와 사유 규명
  - 원치않는 임신·출산이 입양으로 이어지는 규모와 과정 조사
  - 혼인의 출산에도 불구하고 아동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부 생활 실태 조사

## □ 상담 거점 센터 확보

### ○ 사업대상

- 미혼 임신 여성, 출산 후 입양 동의 미혼여성, 아동양육 미혼모부

### ○ 사업내용

- 미혼모부 임신·출산·입양 및 양육 상담 담당 거점센터를 각 구별로 확보
- 거점센터를 통하여 혼인의 불가피한 임신으로 갖는 문제를 상담하고 지속적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와 인력을 확대하여 상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 □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 ○ 사업대상

- 미혼 임신 여성, 출산 후 입양 동의 미혼여성, 아동양육 미혼모부

### ○ 사업내용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과 미혼모자시설 수 확대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과 미혼모자시설 수를 2010년 현재 각각 6개와 5개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검토 및 시행.

## □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

### ○ 사업대상

- 미혼모부

### ○ 사업내용

- 미혼모부가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미혼모부자 시설 1개소 시범 도입 및 운영
-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방안 모색.

## □ 기대효과

-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 젊은 미혼모부 가족이 유용한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4. 연도별(2011-201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추진부서, 특이사항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추진일정 (개소, 명, 대상범위 등)	실태 조사	거점 상담센터 확보	미혼모자공동생활 시설 및 미혼모자시설 각각 2개소 증설	미혼모부자 시설 1개소 시범 운영
소요예산	2억	5천만원	40억	10억
소요예산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인력 인건비 2천만원</li> <li>• 업무 공간 확보 3천만원</li> </ul>	각 시설 당 10억	
추진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참고문헌

- 공선희(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발전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나(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보건복지부(2010),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대한민국 정부
- 문은영, 최나리(2009), “서울시 중소기업 저출산 대응 가족친화제도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유병규 외(2010), “여성경제활동의 현재와 미래”, 현대경제연구원
- 유병규 외(2010), “출산률 1.1시대의 딜레마와 극복과제”,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2010), “희망자녀수와 출산자녀수간의 격차해소가 저출산의 해법”, 현대경제연구원
- 여성가족부(2008),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가족부

2010-정책개발-013

## 2011-2015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서영주, 김유나,  
문은영, 손문금, 안현미, 김민경, 정인선  
**자문위원** 류연규, 백선희, 예지은, 전해정, 정재훈,  
정익중, 조영태, 진미윤, 최숙희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